



서재진

#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www.kinu.or.kr](http://www.kinu.or.kr)

서재진

#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통일연구원

## 북한의 경제난과

### 체제 내구력

인 쇄 2007년 12월 일  
발 행 2007년 12월 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28  
팩시밀리 02)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02) 2275-5326  
인 쇄 처 천 세 02) 2272-2727

가 격 ₩ 8,500원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 서재진.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연구총서 ; 07-03)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13-9 93340: 8500원

340.911-KDC4  
3209519-DDC21

CIP 2007003727

#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I. 서론 .....	1
II. 체제 내구력의 개념 .....	7
1. 체제의 개념 .....	9
2. 체제 내구력의 개념 및 분석틀 .....	11
III. 사회주의 체제 복원력의 쇠퇴 .....	15
1. 사회주의 제도의 기능 마비 .....	17
2. 체제의 정당성 실추 .....	36
3. 간부들의 체제 신뢰 동요 .....	59
4. 물리적 강제력의 기능 부실화 .....	63
5. 체제위기속의 체제유지 배경 .....	66
6. 소결: 체제의 복원력 감소 .....	80

IV. 새로운 체제 적응력의 생성 .....	83
1. 새로운 생산양식의 생성: 원시시장경제와 가내수공업 .....	85
2. 새로운 경제관리 시스템의 형성: 분절경제와 연고경제 .....	98
3. 새로운 가치관 형성 .....	109
4. 새로운 질서의 형성: 제1사회에서 독립된 제2사회의 질서 .....	113
5. 소결: 체제 적응력의 상승 .....	120
V. 2·13합의 이후 체제 적응력의 추가 상승 가능성 .....	123
1. 국제적 환경의 개선 .....	125
2. 새로운 생존전략의 효과: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재편입 .....	127
3. 남북경협을 진전에서 얻는 이득 .....	131
4. 핵문제 해결 이후 새로운 사회통합 전략 전망 .....	133
5. 소결: 체제 적응력 추가 상승 .....	136

VI. 급변사태 변수와 체제 내구력 .....	139
1. 급변사태의 개념 .....	141
2. 급변사태 발생 요건 검토 .....	143
3. 개혁·개방 과정의 급변사태 가능성 .....	148
VII. 체제 내구력 종합평가 .....	157
1. 체제 내구력 종합평가 .....	159
2. 현재까지의 체제 내구력 유지 요인 .....	161
3. 향후 전망: 연착륙 가능성과 토크빌 역설의 가능성 .....	163
VIII. 맺음말: 정책적 함의 .....	171
참고문헌 .....	17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81

---

## 그림 목차

---

[그림 VIII-1] 제1사회와 제2사회의 관계 ..... 174

# I

## 서론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소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상당 부분이 해체되었고, 북한의 권력구조도 선군정치라는 이름의 기형적 통치형태로 10년 이상 지나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북한체제와 지도부에 대한 태도와 의식도 많이 변화하였다.

2002년 제2차 핵문제 돌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대북제재가 가해지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었고, 경제난 심화는 중앙정부의 계획경제 및 통제기능 부실화, 시장요소의 확산 등을 촉진시켜 이전의 북한체제의 특징들을 더 많이 해체시키고 변형시켰다. 북한의 체제 유지에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던 사상교양, 물리적 강제력도 약화되고 있다. 이로써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주요 기둥들이 흔들리는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급변사태나 체제내구력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으며 대체로 북한의 체제붕괴 가능성이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카플란의 북한붕괴 7단계론이다.<sup>1</sup> 카플란은 북한에서 7단계의 붕괴 과

<sup>1</sup> 카플란의 7단계에 걸친 북한의 붕괴과정으로서 우선 제1단계는 북한의 자원이 고갈 되는 단계이다. 자원이란 모든 인적·물적 자원, 즉 정치적·군사안보적·경제적 자원을 의미한다. 다음 제2단계는 자원 고갈 때문에 북한이 사회기반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단계이다. 특히 제1단계에서 언급한 자원 중에서 경제적 자원의 고갈은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제3단계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무너지고 지방 당 관료와 군벌이 통제하는 독자적인 영지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그리고 제4단계는 지방 당 관료와 군벌이 세력이 커졌다고 판단한 김정일이 이를 누르려고 시도하는 단계이다. 카플란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제4단계에 이르렀었다고 추정한다. 그렇지만 카플란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지원과 미국의 식량지원 등으로 북한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며, 2006년 말 현재 북한은 제3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북한의 김정일은 북한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당 관료와 군벌이 세력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김정일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Rober D. Kaplan, “When North Korea Falls,” *Atlantic Monthly* (October 2006).

정이 진행 중이며 4단계까지 진행하였다가 현재 3단계로 후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카플란의 제3단계에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북한의 중앙정부가 각 국가기관, 지방정부, 개별 가구에 예산과 배급을 주지 못하고 자력갱생을 종용한 결과, 중앙정부의 권위와 권한이 무너지고 지방단위의 독자적인 생존체제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그러나 카플란이 지적하는 지방영지의 성장은 곧 지방단위의 자력갱생으로서 새로운 체제내구력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경제난속에서도 체제가 유지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난 혹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원형은 해체되고 붕괴되었지만 지역의 각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생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개척해낸 원시 소상품경제, 원시시장경제, 분절경제, 연고경제의 요소들이 주민들과 각 기관들의 생존을 연명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점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 생존을 위하여 마련한 자구책이 있기 때문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옛날처럼 굶어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허물어졌지만 우리 민족의 근면함과 시장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생존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는 약화됐지만 개인의 생존력은 강화된 것이다. 전화위복의 기이한 현상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환경에서도 체제생존의 새로운 돌파구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2·13 합의(2007. 2. 13) 이후

---

<sup>2</sup>- 본 보고서의 제IV장 제1절 참조.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해제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문제 해결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말까지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완료를 약속하는 등 핵문제 해결의 로드맵이 순조롭게 이행 중에 있으며 완전 핵폐기 절차를 아직까지 남겨놓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도 약속을 받아놓고 있다.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가 실현될 경우, 체제위기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던 북한 체제가 새로운 진정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변화에서 북한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외적 영향력에 더 많이 노출되는 위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을 시작하면 오히려 체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토크빌의 예언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 적응력과 새로운 생존전략의 돌파구를 만나서 기왕에 진전되고 있는 체제붕괴의 프로세스가 중단되므로서 체제내구력이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외부 영향력이 심화되어 급변사태가 발생할 지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체제내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체제내구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체제복원력, 체제적응력, 급변사태 가능성 등의 3가지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이들 각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후 체제내구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처럼 체제내구력을 하나의 개념으로 상정하고 체제내구력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방향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분석방법을 사용한다면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체제내구력의 개념을 세 개의 변수로 분화하여 북한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방향의 새로운 현상들을 각기 새로운 개념으로 포착함으로써 심층적 분석이

I
II
III
IV
V
VI
VII
VIII

가능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체제내구력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연착륙과 개혁·개방의 역설의 2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

## 체제 내구력의 개념





## 1. 체제의 개념

우리가 ‘북한 체제’(North Korean regime)라고 표현하는 이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김정일의 정권(leadership), 사회주의의 제도(syste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서의 국가(state)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정권’이란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으로 표현되듯이 국가(state)의 권력을 장악한 지도자와 그 집단(leadership)을 지칭하며 동시에 권력 집단이 자기 권력의 관리를 위하여 부과한 통치의 양식(regime)을 포함한다. 즉, 정권은 단순히 leadership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관계를 특징짓는 통치 상부구조의 의미가 많이 포함된다. 국가 기구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유권으로 국가와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질서와 제도까지도 일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정권은 영어의 regime에 가까운 의미를 갖는다. 정권이 장기화될수록 leadership의 영역이 국가의 영역을 잠식하기 때문에 leadership과 system 및 state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정권교체 주기가 짧을수록 regime은 leadership에 가까운 개념으로 약화된다.

‘제도’(system)란 사회주의적 생산양식 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제적 제도들(institutions)을 지칭하는 말이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이며 자본주의적 요소가 확산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그 국가의 노동동원과 정치동원의 특성을 규정하며 그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 양식도 규정한다. 나아가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제도와 국가기구에 대해서도 규정력이 있다. 맑시스트들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볼 정도로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생산양식을 체제 성격의 결정적 규정요인으로 본

I

II

III

IV

V

VI

VII

VIII

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제도나 자본주의 제도가 체제의 성격을 대부분 규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 또는 ‘자본주의 체제’로 부르기도 한다.

‘국가’(state)란 정권과 제도에 국가의 여러 기관(행정부, 의회, 사법부, 모든 제도, 정당)과 국민, 영토가 합쳐진 개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영토 내에 있는 김정일 정권, 사회주의 경제체제, 북한주민, 북한의 내각, 최고인민회의, 노동당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북한체제라고 할 때 영어 표현으로 가장 가까운 개념은 regime이며, 정권, 제도, 국가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정권은 교체될 수 있고, 제도는 변화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해체/소멸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이미 많이 변화하였고, 김정일 정권은 김정일의 유고와 더불어 교체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멸하기가 쉽지 않다. 소멸은 곧 남북한의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체제의 변화라고 할 때 가장 근접한 현상은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변화하는 것과 김정일 정권(leadership)이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양식은 이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일 정권의 교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체제변화라고 할 때 김정일 정권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교체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북한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북한의 체제와 국가의 성격이 대폭 동반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정권(leadership)의 교체는 체제(regime)의 변화를 의미한다.

## 2. 체제 내구력의 개념 및 분석틀

북한의 현재의 체제가 얼마만큼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체제내구력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체제내구력’의 개념은 현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다시 원래의 체제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 본래의 체제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체제가 개혁되어 새로운 체제로 발전·변화함으로써 생명력을 유지하는 능력, (복원력이나 적응력과 관련해서 또는 상관없이) 우발적 사태로 인해 체제가 붕괴되는 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내구력’에 대한 임수호의 개념은<sup>3</sup> 체제내구력의 분석틀을 개발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준다. 그는 경제내구력을 복원력과 적응력의 개념으로 분화하여 이해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체제내구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측면, 국제관계적 측면의 변수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글은 북한의 체제내구력(regime sustainability)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체제복원력(resilience), 체제적응력(adaptability)을 개념화하고 나아가서 급변사태(contingency crisis) 변수의 3요소로 나누어 분석한다.

체제복원력은 계획경제체제와 이에 근거한 김정일 독재체제로 특징지어지는 이전의 북한 사회주의체제로 복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흐트러진 경제가 원래의 계획경제로 복원되고, 정상적인 사회주

<sup>3</sup>- 임수호는 북한의 경제적 내구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resilience(복원력)+adaptability(적응력)의 합이 sustainability(내구력)이라고 보았다. 임수호, “대북경제 제재와 북한경제의 내구력,” 『2·13합의와 북한의 장래』 (통일경제연구협회 주최 통일경제정책 워크숍, 2007. 8. 24), p. 5.

I
II
III
IV
V
VI
VII
VIII

의 정치체제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체제적응력은 기존의 체제가 개혁하거나 변화하여 체제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체제의 생존능력이 증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시장요소가 도입되고 가내수공업이 발달하여 가구별, 기업별 자생력이 증가하는 것도 적응력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급변사태 가능성은 체제복원력이나 적응력이 감소하여 체제가 붕괴하거나 소멸하는 가능성과 이와 무관하게 우발적인 내부 사태(민중봉기, 군부 쿠데타, 지도자의 사망)나 외부세력의 침입으로 체제의 생존력이 붕괴 또는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내구력은 체제복원력과 적응력의 합산에 급변사태 가능성의 감산으로 평가되어진다. 내구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체제로 복원되거나 새로운 체제로 개혁하여 체제효율성이 증가하거나, 급변사태로 체제가 붕괴하는 위험이 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복원력은 후퇴하더라도 새로운 체제로 개혁하여 효율성이 강화되면 체제내구력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복원력이 떨어지거나 적응력도 감소하고 급변사태 가능성이 증가하면 체제내구력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체제내구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북한체제의 원래대로 복원되는 능력의 증감, 기존체제가 개혁 또는 변화되어 생존능력 또는 체제효율성이 증감, 또한 복원력과 적응력이 감소하여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체제내구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체제복원력과 체제적응력은 점진적·장기적 측면의 사태변화이며, 급변사태는 우발적 사태변화이다. 또한 체제복원력은 지배층의 관할 영역이며, 급변사태 가능성은 저항의 영역이며, 체제적응력은 지배적 영역과 저항적 영역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경제난으로 인한 계획경제의 침식은 체제의 복원력을 저하시킨다. 시

장화의 진행은 어느 수준까지는 적응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복원력의 약화와 적응력의 강화가 체제내구력의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2가지 변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복원력의 약화가 급변사태를 촉진할지, 적응력의 강화가 연착륙을 가져올지는 다른 정치사회적 요인과 국제관계의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급변사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변수로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급변사태는 시기에 따라서 점진적 변화과정에서 체제를 바꾸는 정도의 급격한 변화로 올 수도 있고, 김정일의 신체적 유고에 의해서도 올 수도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개혁·개방의 후유증에 의하여 급변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제VI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체제내구력(regime sustainability)을 분석하기 위하여 체제복원력(resilience), 체제적응력(adaptability), 급변사태(contingency change) 변수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체제복원력, 체제적응력은 모두 경제적, 정치사회적, 국제관계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들이다.

이런 개념들을 포함하여 체제내구력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개념의 가감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text{체제내구력} = \text{복원력} + \text{적응력} - \text{급변사태 가능성}$$

제III장에서 복원력, 제IV장과 제V에서 적응력, 제VI장에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제VII장에서 북한의 체제내구력을 종합 평가한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 III

## 사회주의 체제 복원력의 쇠퇴





북한체제를 지탱하던 기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및 당 조직, 이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권력엘리트의 체제수호 의지 그리고 체제유지를 위한 물리적 강제력이다. 사회주의체제의 가장 중요한 체제의 토대는 사회주의 경제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기능이 실패하면 그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유지되기 어려우며, 체제의 위기가 온다. 체제의 위기가 오더라도 이를 권력엘리트들이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위대 역할을 하거나 물리적 통제력이 강압적으로 저항을 억제하면 체제는 유지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 북한 체제의 기둥들로서 사회주의 제도, 사회주의의 정당성, 전위대의 사기, 물리적 통제력 부문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시 제자리로 복원될 수 있는 복원력(resilience)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다.

## 1. 사회주의 제도의 기능 마비

북한에서 간부들 중에서 아직도 북한이 사회주의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필요·충분 조건이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제라고 본다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모두 와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의 필요조건으로서 생산수단의 국유화의 측면에서 볼 때, 공장 등의 대규모 생산수단은 국유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상당부분의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소규모 생산수단인 식당 등의 서비스업이나 상점 등의 유통부문 생산수단은 사유화 또는 사영화 추세에 있다. 또한 사회주의의 충분조건은 계획경제인데 계획 부분은 더욱 많이 붕괴되었다. 중앙정부는 예산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지시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더욱이 북한주민들에게 사회주의를 정의하는 핵심제도인 배급제가

I
II
III
IV
V
VI
VII
VIII

거의 붕괴되고 사회주의 사회보장체제가 붕괴된 것도 북한주민들에게 사회주의는 없어졌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매년 여름마다 장마철에 내리는 집중호우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이 붕괴되어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금년에도 집중호우로 600여명이 사망하였다. 경제적 능력의 붕괴는 국가 부문 전반의 기능마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경제난 이후 북한의 경제체제의 변화, 정치체제의 변화, 사회주의 복지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체제 복원력의 붕괴 정도를 평가한다.

## 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능마비

### 대안의 사업체계 및 연합기업소의 붕괴

북한의 계획경제가 붕괴되었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재정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계획부문에 예산배정을 못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경제난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이 고갈되자 인민무력부와 같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장기업소에 원자재 및 인건비 공급을 못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통하여 생산을 계획하고 계획 집행을 지시하던 중앙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공장, 토지, 재산이 국유화되어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는 아니다. 국유화된 생산수단으로 계획경제를 해야 한다.

예산고갈의 결과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핵심적인 요소였던 ‘대안의 사업체계’가 허물어지게 되었다.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상징하는 체제였던 대안의 사업체계는 중앙정부가 공장기업소에 원자재와 인건비 일체를 공급하는 대가로 당적 통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공장기업소의 당 책임비서가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공장 내의 생산과 당 조직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당에서 예산과 원자재 공급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당의 권력과 정당성이 나올 수 없다.

원자재와 인건비의 지출 불능사태는 북한의 중앙계획체제가 가동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였던 연합기업소가 핵심 전략부문을 제외하고는 기능상실에 빠졌다. 원자재의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기업소내의 연관생산 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연합기업소 산하의 개별기업들이 해체되어 자체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이 추구된 것이다. 중앙정부와 계열기업소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원자재를 개별기업 차원에서 확보하는 경우에는 공장 가동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 공장가동 중단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공장 가동률이 20-30%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으로는 제2경제, 즉 군수부문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작동을 중지하거나 자력갱생 전략에 따라 업종을 바꾸거나 종업원들에게 장사를 시키거나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등의 방식으로 소속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 산하 기관 중에서 군수공장, 조선소, 129호(잠수함) 공장 등의 제2경제 부문과 양정사업소, 체신소, 통신소, 항만 정도는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독립이거나 가동이 중단되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종업원도 대부분 흩어지고 없다고 한다.<sup>4</sup>

청진 김책제철소도 중단된지 오래다. 김철에는 용광로가 6개였는데 1995년부터 절반만 가동하다가 얼마지 않아서 1개만 가동되었고 3-4년 전부터는 완전히 멈추었다고 한다. 원료, 자재가 없어 공장이 가동될 수 없다. 3만 명 종업원의 절반은 다른 회사, 주로 외화벌이 회사로 옮겨

<sup>4</sup> 차호강(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 지도원, 2006년 입국)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고 절반은 남아있다. 남아있는 사람의 5천 명 정도는 공장기업소에 이름을 걸어놓고 1달에 3만 원 내지 2만 원씩 회사에 입금하고 장사에 종사한다고 한다. 공장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 사납금을 내는 것이다. 김책제철소에서 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대가의 세금이다. 출근하지 않고 무직자로 적발되면 노동단련대에 가기 때문이다.

출근자의 1만 명 정도는 ‘생필’에 종사하거나 외화벌이를 한다. ‘생필’이란 공장에 있는 철근이나 철판을 이용하여 생활필수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말한다. 공장 내에서 외화벌이 사업이란 파철, 철가루, 황선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서 공장 내 직장별로 조직하여 시행한다. 황선이란 쇳물 끓일 때 위에 뜨는 찌꺼기로서 철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광물찌꺼기이다. 김철은 일제 때부터 가동되던 공장이기 때문에 바다에 버린 황선이 매우 많은데 김철 종업원들은 1990년대부터 이를 파내어 외화벌이를 하였다. 황선은 철가루, 파철과 더불어 군중 외화벌이의 주된 대상이다. 황선을 파내어 외화벌이 회사에 넘기면 외화벌이 회사는 이를 중국에 판다. 이러한 일들은 직장장과 세포비서가 조직해서 시행한다. 공장, 직장(조립, 도색, 용접 등의 공정 단위), 작업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단위별로 작업을 조직하여 시행한다. 벌어들인 돈은 상부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내에서 종업원들의 월급으로 분배한다. 이것이 김책의 노동자들이 사는 방식이다.<sup>5</sup>

북한에서 움직이는 공장은 군수(61호) 뿐이다. 나남기계공장, 잠수함 엔진공장 등의 2경제 산하 군수공장 외에는 움직이는 공장이 별로 없다. 이들 공장도 완전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정의 직장만 가동되기도 한다. 군수공장에는 김정일이 1-2번씩 와서 무엇이 요구되는지 원자

<sup>5</sup>- 차호강 증언.



재 조달을 지시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집중적으로 공급받아서 가동이 가능하다. 군수공장은 출퇴근도 100% 가까이 한다고 한다.

그 외 인민경제 부문의 지방 산업은 거의 다 문을 닫았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이름만 걸어놓고 장사하러 돌아다닌다. 직장에서 주는 생활비도 공장 돌린 이윤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 노동자들이 특별히 해서 번 돈이다. 기업소에 생산으로 인한 수입은 없다.<sup>6</sup>

공장기업소에 노동자들의 출근은 의무사항이다. 공장이 가동되든 안 되든 출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급은 못주어도 약간씩의 월급을 준다. 그 월급의 출처는 공장에서 8:3 소비품 생산, 부업지 농사, 외화벌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번 돈에서 준다.

공장기업소에서는 종업원에게 줄 월급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종업원과 합의해서 개개인을 장사 내보낸다. 한 달에 일정 액수를 벌어서 직장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장사를 내보낸다. 공장은 종업원에게 줄 월급뿐만 아니라 군중 외화벌이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즉 중앙에서 직장마다 일 년에 한 번씩 금을 내라는 과제를 내리는데 그 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 비서가 사람을 뽑아서 내보낸다고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 비서는 주로 장사 밀천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장사를 내보낸다. 종자돈이 없는 사람은 장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외부에 장사 나갈 때 과거에는 개인이 직장에 호소하거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공장기업소에서 주도적으로 종업원을 외부에 내보내어 돈을 벌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조치는 장사를 더욱 성행하게 하였고, 종자돈 있는 사람을 더 잘 사게 해주는 결과를 낳아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sup>6</sup>- 이철순(교사, 2006년 입국)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 농민들의 노동 기피

북한에서 가동이 중단된 것은 공장뿐이 아니다. 농민들도 농사짓기를 기피하고 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을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군량미로 대부분이 공출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작업방식과 분배방식을 바꾸기도 했지만 여전히 생산물을 군량미로 거두어 가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한 사람이 많다.

오히려 농민들은 자기 폐기밭 가꾸는데 주력하고 협동농장에서는 마지못해 일하는 척만 한다. 도시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가는 것처럼 농촌의 농민들도 일하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보내기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한다.

농촌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외부에서 동원된 사람들이다. 학생들,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이 동원되어 농사를 지어준다. 농장의 작업비서와 작업반장이 외지에서 오는 지원을 조직하여 농사를 짓는다.

1993년도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때만 해도 농민들은 농사짓고 살았다. 이제는 군량미로 대부분을 거두어 가기 때문에 농민들은 가축을 키우는 부업, 폐기밭을 개간한 것으로 살아간다. 또한 농민들도 장사에 나선 사람들이 많다. 도시의 친척집에 가서 장사를 하기도 한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착취의 주 대상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다른 산업부문은 착취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생산물에 대한 분배가 협동농장 농민, 즉 생산자 위주로 분배가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군량미 위주로 분배가 이루어진다. 또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식량이 들어오면 일상적인 규칙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상부에서 분배에 관한 지령이 내려온다고 한다. 농민 몫의 분배량은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떨어지고, 분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졌다.<sup>7</sup>

7- 이철국(함북 온성군 양정사업소 검열지도원, 2001년 탈북) 증언.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인민군대에 대한 돼지고기 지원이다. 농가 호당 1년에 100kg 짜리 돼지 1마리를 군대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1980년대 말경부터 이 제도가 생겼다고 한다. 이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식량 분배 몫에서 해당액의 식량을 제외한다고 한다. 돼지 1마리에 1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 식량 500kg 정도에 해당하며 이것은 1사람의 1년 식량 분(겉곡 340kg)보다 많다. 이것 때문에 농민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현재 농민들을 가장 크게 구속한 것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협동농장 분배결산서는 국가의무 수매곡(군량미), 농민식량, 1:1 사료(돼지 1마리에 대한 사료), 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군량미가 최우선적으로 공제되고 나머지가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인데, 돼지고기를 납품하지 못할 경우 1:1사료를 공제해 간다는 것이다.

결국, 농민들이 입쌀은 구경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냉이 꾸어먹고 입쌀로 상환하기도 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돼지 대신에 닭, 염소, 토끼 등으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행정단위는 물론 당적으로 총화를 하기 때문이다. 당 간부들은 과제 달성여부에 따라서 자리가 걸렸기 때문에 농민들을 심하게 압박한다고 한다.

농민들에 대한 착취가 심화됨에 따라 농민들은 분노해 있다. 농민들의 생활이 노동자나 사무원보다 어렵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장사라도 할 수 있지만 농민들은 장사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공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농민들은 토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농장으로 내몰려야 한다고 한다. 일부 농민 중에 머리가 깬 사람은 폐기밭을 개간하여 생활이 나은 편이지만 국가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sup>8</sup>

<sup>8</sup>- 이철국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 시장으로 대체

북한에서는 공식 계획경제는 거의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시장은 가동되고 있다. 계획경제체제는 붕괴되고 대신 시장요소가 생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지구책 마련의 차원에서 시작한 장사가 이제는 공식경제를 대체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7·1조치를 계기로 압시장을 자유화하여 종합시장을 설치함으로써 계획체제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도입하는 계기로 발전하였다. 시장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Ⅳ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 지역자립체제의 마비

북한은 정권초기부터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군 단위의 지역자립체제도 극심한 경제난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마비되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경험하였고 김일성과 그 측근들이 대부분 항일빨치산 투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전시지향적인 행정 및 경제 발전전략을 추구하였다.<sup>9</sup> 북한은 전역을 148개 군, 25개 시, 36개의 구역 등 209개의 지역으로 구획하고 각 지역이 자립적 경제체제를 갖추도록 지역 분산적, 지역 분권적, 지역 자립적 산업 및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경제난속에서 북한경제의 30-40%를 차지하는 지방공장이 먼저 연료와 원료가 고갈되어 경제난의 타격을 중앙공업보다 먼저 입었기 때문에 지역자립체제가 북한의 당초 계획대로 작동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규모 아사사태의 고난을 당하였다. 유사시를 대비한 지역자립

---

<sup>9</sup>-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참조.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대규모 아사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변화

북한의 경제난이 사회주의 정치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주장되었다. 그런데 김일성 사망이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구호는 간판을 내리고 군부가 주도하는 선군정치라는 구호가 대체하고 있다.

북한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변형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3년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3년 12월 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 계획 실패를 인정하였다. 경제계획의 실패는 동구 및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 및 베트남에서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시기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에게는 충격이었고 이듬해 김일성의 사망은 이러한 충격을 더욱 심화시켰다.<sup>10</sup>

김정일 스스로 사회주의는 국제적으로도 무너졌고 북한에서도 실패하였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원인에 대해 김정일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김정일은 동구와 소련에서 노동자, 농민이 봉기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구 및 소련의 체제붕괴 경험에서 김정일은 자신의 의리를 저버린 것이 노동계급이라고 확실히 인식하였다고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후과가 이렇구나, 북한의 인민대중이 나를 배반할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폭정신,

<sup>10</sup>- 김일도(과학자, 2006년 입국)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결사옹위 정신을 가진 군대라고 인식한 것이다. 노동계급의 이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고 군대를 우선시 한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이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체제안정, 체제수호인 것으로 보인다. 체제안정을 위해서 북한은 사상의 순결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공식적으로 이데올로그와 이데올로기 기구들은 “우리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는 구호<sup>12</sup>를 연일 외쳤지만 이것은 이미 김정일 자신이 사회주의는 붕괴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지켜야 할 체제란 무슨 체제인가?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이라고 인식한 듯하다. 김정일은 “체제 =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였고 군대를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내세웠다. 인민대중은 믿을 수 없으며 군대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인식이다. 군대는 계급이 아니라 계층이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계층으로서의 군대는 어떤 계급적 이익을 지향하는 계급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느냐일 뿐이다. 그래서 군대를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에서는 군대는 노동계급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쟁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북한에서 군대는 수령결사옹위이다. 이제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선군이며, 선군후로(先軍後勞)를 추구한다. 선군정치는 군대에 의한 노동계급에 대한 감시탄압의 정치인 셈이다. 군대는 노동계급의 저항을 막기 위한 도구이다. 북한은 전대미문의 계엄 상태 독재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

<sup>11</sup> - 김일도 증언.

<sup>12</sup> -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년 5월 27일.

노동계급의 당인 노동당이 군부의 뒤로 밀려났다.

요컨대, 북한에서 1993년 이후 차츰 사회주의가 상실되었으며 지금은 사회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주의의 핵심기구인 노동당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을 사회주의라고 보기가 어렵다.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가 아니라 북한의 구호대로 선군정치이다. 북한 권력구조의 본질로서 선군정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원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체제이다. 김정일 시대에 와서 당 대회, 전원회의가 없어졌고, 정치국은 유명무실하다. 당 대회와 전원회의가 없으니 정치국도 할일이 없다. 북한에서 국가와 사회 및 주민을 이끌어가는 최고권력 기구인 노동당은<sup>13</sup> 경제난을 비롯한 총체적 위기의 장기화로 정치적 위상과 사회장악력도 흔들리고 있다. 당이 위기에

<sup>13</sup> - 북한에서 당은 정책결정기구이자 동시에 정책집행기관이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당규약 23조)하고 당 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당 정치국원 및 총비서, 비서를 선거(당규약 24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집주기는 여섯 달에 한번이상 소집(당규약 24조)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1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경우(1985년)가 있고 1회만 개최한 경우(1991년, 1992년)도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개최 직전에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의안 및 국가지도기관의 인사개편안을 사전 결정해 오고 있었으나, 1993년 12월 제6기 21차 전원회의 이후에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선군정치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 대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북한 노동당의 기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당 조직은 비상설조직과 상설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비상설조직은 당 대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으로서 정책결정기구들이다. 상설조직은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의 집행부서이다. 북한에서 당 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도록 되어 있으나 1980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으며, 6개월에 1회 이상 열려야 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1993년 12월의 제6기 21차 전원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김일성 사후 정치국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비상설조직은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비상설조직인 당 대회나 전원회의, 정치국회의는 정책결정기구인데 정책결정은 당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대숙 교수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주요 정책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회의에서 토론 결정된다고 보기보다는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와 정부의 정책을 숙의하고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 대신 상설기구인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전문부서들은 정상가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은 집행기구들이다. 정책결정기구는 가동이 중단되고 집행기구만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주민들의 당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고, 복종심이 약화되고 있다.

북한에서 당이 담당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능은 당 생활 지도기능과 정책적 지도기능이다. 이 두 가지 기능도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첫째 당 생활 지도기능은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는 당원들이 갖은 비법적 활동에 연루되고 있으며 식량구입을 위해 조직생활을 이탈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당 조직 생활의 규율이 이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정책적 지도기능은 중앙기관이 하급기관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자력갱생을 권장하는 상황에서 당이 정책적 지도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의 기능이 쇠퇴하고 권위는 훼손되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에서 선전을 나와도 당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탄광 노동자들은 중앙당에서 선전교양 나오는 간부들을 되돌아가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쌀을 가져와서 내 목에 묻은 석탄가루나 씻어내라”며 항변한다고 한다. 안전원, 보위부원도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앙당 일꾼들이 해당 지방에 가서 선전사업 하는데 인민들의 반감이 심한 정도가 마치 일제시기 직후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당의 선전사업은 비공개적으로 요소소요에 들어가서 정치공작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중앙에서 내려가서 핵심 당원만 모아 놓고 강연하는데 그친다고 한다. 인민들의 반감이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정일은 절대로 사회를 풀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sup>14</sup> 북한에서 당의 권위가 쇠퇴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한 증거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가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sup>14</sup> 이수동(해외주재 북한공관원, 1998년 입국) 증언.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1996년 12월 7일 김일성대학교 방문 후 당 간부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당을 노인당, 송장당으로 지칭하기도 하고 당 조직이 맥을 못 추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경제난으로 실제 당의 하부조직 작동이 상당 부분 마비되어 있다. 1997년 말 김정일이 술 파티에서 당을 해산해버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당의 신세를 진 적이 없다, 사람이 굶어죽는데 당은 뭐했느냐”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당의 기능이 쇠퇴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당의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이었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김정일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은 김정일로부터 인사권을 박탈당하고, 군부에 정치권력을 빼앗기고, 내각에 경제 권력을 빼앗기는 등 알맹이를 모두 다 박탈당하는 형국에 처해있다. 당은 정치 및 경제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당에 대한 신뢰 약화가 내각의 권한 강화로 귀결되었다. 유명무실하였던 내각의 권한을 높여 경제 관리의 능동성을 높여주고 그 책임 또한 강화하였다. 2001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의 사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는데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홍성남 당시 내각총리가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 2006년 4월에 있었던 제11기 4차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내각을 나라의 ‘경제사령부’라고 지칭하면서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결의하였다.

지금은 김정일 서기실이 과거 당의 비서국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정책결정과 집행까지 김정일 개인독재 체제이다. 북한은 이것을 선군정치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실제 의미는 당의 기능이 중단되었으며 민주주의 중앙집권제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당비서국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제강이 서기실에 와있는 것으로 볼 때 당의 조직지도부도 서기실이 장

I
II
III
IV
V
VI
VII
VIII

악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선군정치를 빙자한 1인 독재이다.<sup>15</sup>

그런데 중앙당만 가동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당의 세포조직도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의 권위가 없으며 당원이 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그 전에는 북한주민들이 입당하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말 잘 듣곤 했다. 이제는 돈만 준다면 당원증을 팔겠다는 농담도 한다고 한다.<sup>16</sup>

입당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당원 되기를 기피한다고 한다. 입당하면 조직생활에 꼭 참가해야 하고 사상교양에서 당원들이 앞장서자고 하니 까 더 피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급당비서의 발언권도 없어졌다. 옛날 체제에서는 입당해야 간부가 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교도소 갔다 온 사람도 자금 능력이 있으면 외화벌이 사업소 소장이 된다. 이제는 입당하지 않아도 간부가 된다. 돈만 있으면 입당하지 않겠다고 해도 입당을 시켜준다. 입당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옛날 간부는 입당해야 말단 지도원이라도 할 수 있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이제는 입당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당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당 책임비서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가에서 주는 것이 없으니 당은 지도할 것도 없으며 당지도원이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도 못한다. 당에서 공장 가동에 소요되는 원자재와 예산을 못주니 공장의 관리에 있어서도 지배인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임명되어 경영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초급당 비서는 공장 운영에 대해서도 발언권이 없다. 지금은 지배인이 돈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니까 초

---

<sup>15</sup> - 김일도 증언.

<sup>16</sup> - 차호강 증언.

급당 비서는 허수아비이다. 이제는 지배인이 재정을 가지고 쥐락펴락한다고 한다.

군당비서가 하는 일은 도당 학습이나 참석하고 방침을 동당비서와 동사무장에게 내리먹이는 일이며, 동당비서는 인민반장에게 내리먹이는 정도이다. 옛날에는 군당 지도원 하면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곤 했는데 이제는 안전원, 보위원은 무서워하지만 당 지도원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한다. 당의 실권이 없어진 셈이다. 옛날에는 입당하기 위하여 초급당 비서에게 굽실거렸는데 입당이 필요 없어졌으니 당 비서의 권한이 없어진 것이다. 입당하면 생기는 것은 없고 조직생활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다고 인식한다. 옛날에는 해당지역 당 비서 이름은 누구나 다 알았으나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sup>17</sup> 그만큼 당이 주민생활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북한에서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아래 인민을 위하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인민의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이 당이라든지,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한다든지, 당은 지도자에 호감을 주게 한다든지,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 당이라든지, 문제를 당에서 풀어주는 방법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는 등의 이미지가 주민들에게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주민들은 당이 걸은 회고 좋아도 속은 나빠드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당은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민심이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sup>18</sup>

당적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증거로서 공사판에 사람동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옛날에는 공사판에 사람 동원하는 일은 어렵지

<sup>17</sup>- 차호강 증언.

<sup>18</sup>- 이시선(교사, 2007년 입국)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당 책임비서의 권한이 약화되고 주민들은 오직 돈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동원이 어렵다고 한다. 가령, 함경북도 연사에 사적지 조성 공사를 보면 구역당 선전대에서 2006년 4월부터 노동동원하기 위해 각 구역에서 사람을 뽑았는데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단련대에 부탁하여 사람을 뽑았는데 노동단련대는 검찰, 안전부에 노력동원 요청을 하였고, 검찰이 출동하여 기율 위반한 사람, 외지에서 와서 길가는 사람, 술 먹고 걸어가는 사람, 집집마다 숙박 검열하여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노동단련대에 넘기고 공사판에 동원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 위에서 주는 것이 없어서 아무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촌은 비교적 변화가 늦다. 리당 비서가 소리치는 경우가 아직 농촌에는 있다고 한다. 국제정세를 모르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농장원들은 야박하지 않으며 리당 비서가 하라는 대로 한다.<sup>19)</sup>

#### 다. 사회주의 사회보장 기능 상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은 국가가 주민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배급제도와 사회주의 보장제도였다. 북한주민들에게 사회주의란 식량을 포함한 주요 생필품을 국가가 무료로 또는 무료로 가까운 가격에 배급해주는 제도라고 인식할 정도이다. 실제로 배급제도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핵심적 특징 중의 하나로서 식량과 식료품뿐만 아니라 의복, 주택 등의 기초 생필품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의 제도 하에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배급제도와 복지제도가 명실상부하게 폐지된 것이다. 북

<sup>19)</sup> 차호강 증언.

한 사회주의체제에서 가장 큰 변화이다.

북한의 식량배급제는 194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공급부족인 식량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나아가서 식량배급을 통해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무위도식자를 배제하고, 배급자 또는 지배자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1990년대 들어서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배급제가 상당부분 붕괴되었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sup>20</sup>

유명무실하던 배급 제도를 북한은 7·1조치를 기하여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북한의 7·1조치 강연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사회적으로 공짜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담당하던 사회보장의 기틀이 폐지된 셈이다.

북한 헌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보면, 북한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한 사회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 헌법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노약자·어린이 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2조).

이러한 법적 조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집행할 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7·1조치에 따라서 사회보장의 주담당자가 국가에서 공장기업소와 개인으로 이전되었다. 7·1조치를 계기로 배급제가 폐지되고 공장기업소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사회보장의 책임을 기업으로 떠 넘겼다. 주택세, 전기세 등의 주요 공과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생계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타의 사회보장제도는 대폭 후퇴한 효과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국가의 주된 기능은 주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무상

<sup>20</sup>- 이철국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러한 공급 기능은 대폭 약화되고 대신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높은 세율로 징수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기능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급은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시장의 질서를 관리하며 시장에서 장세를 받는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7·1조치는 무상 배급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국가의 공급기능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개인과 기업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득금을 걷어 들이는 징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북한 당국은 재정수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모든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생산수단과 생필품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집세, 전기세, 수도세, 토지세 등 그동안 무료나 마찬가지로 저렴한 세금을 내고 살았던 주민들은 이제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들이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농민시장에서 장세가 15원에서 50원으로 올랐으며, 개인 토지 1평당 12원씩 토지세를 내도록 조치하였다.<sup>21</sup>

그 동안 국가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오던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은 곧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제도로의 전환을 기도하는 것이다. 국가로서는 집세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무료 또는 무료로 가까운 서비스를 유료로 모두 전환하였고, 국경에 국가세무국을 설치하여 고액의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재정수입을 크게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단순히 세금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노동력까지 동원한다. 군중외화벌이, 구역군중외화벌이가 그 방식이다. 국가가 주민들을 동원하여 상품의 원천을 채취하여 돈을 버는 것을 군중외화벌이라고 한다.

---

<sup>21</sup>- 서선창 증언.

온 군중에게 외화벌이 과제를 부과한 것이다. 가구마다 송이 5kg씩, 돼지 1마리씩 납품하라는 식이다. 북한주민들은 이를 국가가 주민의 돈을 뺏아들인다고 표현한다.<sup>22</sup> 국가가 배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민에 대한 착취를 하는 것이다.

### 학교의 기능 마비

지방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은 학교와 기차뿐이라는 탈북자의 증언도 있다. 생산단위는 거의 다 멈추었다. 농민들은 농사일도 멈추다시피 하였다. 다른 기관은 다 놀지만 학교는 아직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 정상적이지 않다. 학생들에게 내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낼 정도라고 한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안보내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한다. 가령, 학생 1명당 토끼 가죽을 7마리씩 내라, 페인트를 내라, 딸나무를 내라 등등 온갖 것을 다 내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세금이 없는 나라’라는 노래는 있다고 한다.<sup>23</sup>

### 동사무소의 역기능

동마다 있는 동사무소에는 “인민들을 위하여 복무함”이라고 구호를 붙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민의 부담이라고 한다. 온갖 종류의 세금을 내라고 조른다는 것이다. 피마자씨 값을 500원씩 내라, 누에고치 값을 1천원씩 내라, 작업용 장갑을 5켤레씩 내라는 등 온갖 종류를 내라는 지시가 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동사무소는 정부에서 내라고 지시하는 것에 더 얹어서 내라고 지시하고 나머지는 동사무소 간부들이 횡령한다고 한다. 동사무소는 인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인민의 부담꾼

<sup>22</sup>- 차호강 증언.

<sup>23</sup>- 이시선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이라고 한다.

요약컨대,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 공적부문의 기관들의 가동이 거의 마비되거나 중단되었다. 체제의 핵심적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원래의 사회주의 체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 제도, 정치적 제도, 사회복지제도들이 제 기능을 회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 2. 체제의 정당성 실추

앞 절에서 본대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정치체제, 사회주의 복지체제는 상당 부분 붕괴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로 정당성의 기준이다. 주민들이 현재의 상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체제의 정당성이 존속하는 것이고,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면 정당성은 없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두 번째 기둥뿌리가 무너지는 셈이다. 지난날에는 김일성 만세만 부르면 배급이 나왔지만 이제는 김일성 만세만 부르면 입에 거미줄 친다고 주민들은 생각한다.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북한주민들이 사상 이념을 넘어서 물질 관점에서 북한체제를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물질적 보상이 담보되지 않는 이념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의 동의는 이데올로기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신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이 다른 이들의 상황에 비해서 나은지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sup>24</sup> 즉, 경제가 무너지면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의 동의도 무너진다. 이데올로기는 매우 환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질적 보상이 주어져야 정당성을 갖는다. 아베크롬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피지배계급을 복종하게 하는 요인이 피지배자의 복종에 대하여 지배자가 제공하는 물질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복종에 대한 보상은 이데올로기 조작만으로는 미약하다.<sup>25</sup>

사회주의 체제 이념이 경제에 의존성이 강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대중의 합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 전위대의 강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6</sup> 사회주의가 소수 정예주의라는 것은 결국 대중적 지지도가 낮다는 뜻이다. 대중적 지지도가 낮은 사회주의 이념은 전위당 또는 공산당에 의하여 대중에게 강요된 셈이다. 경제가 실패한 북한에서 체제의 정당성이 어떻게 훼손되고 붕괴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 가. 사회주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 실추

19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주민들의 머리가 깨자 사회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 북한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전쟁 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두 가지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하게 되었다.

<sup>24</sup> 에릭 홉스봄 저, 이용우 역, 『극단의 시대: 20세기의 역사』 (서울: 까치글방, 1997), p. 679.

<sup>25</sup> Nicholas Abercrombie, Stephen Hill, and Bryan Turner,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0), p. 3.

<sup>26</sup> Ralf Miliband, *Class Power and State Power* (New York: Verso, 1983), pp. 161~162;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386~396.

I
II
III
IV
V
VI
VII
VIII

첫째, 당국에서 배급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었으니 이제는 자신이 벌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다. 공장은 돌아가지 않고, 출근해 봤자 월급도, 배급도 없으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장사를 하게 되었다. 각자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나라가 주는 것을 기다리다가는 굶어죽으며, 장사하는 것이 살길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개인의 땅이 있어야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땅을 개간하여 개인 땅(뚫기밭)을 소유하게 되었다. 자기가 개간한 땅의 땅세는 내지만 개인이 점유한다. 북한주민들은 이것이 자본주의로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장사가 순식간에 북한의 전 주민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장사는 곧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북한주민들에게 ‘사회주의=배급’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배급이 중단된 지 매우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의 핵심기둥의 하나가 붕괴된 것이다.

둘째, 장사는 국내 장사에 그치지 않고 국경 건너 중국과의 교역과 보따리 장사가 급증하였다. 기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한국 CD 플레이어, TV 등이 들어오고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CD가 쏟아져 들어와서 한국의 드라마, 방송,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국경지방에서 남한의 CD를 보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평양-함흥 이남지역은 중국에서 들여온 TV로 남한 방송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의 간부들은 9시 KBS 뉴스를 보고, 아침에 7시 모닝와이드를 시청하고 출근을 한다고 한다. 일반주민과 간부 모두 바깥 정보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장사의 경험과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인

I
II
III
IV
V
VI
VII
VIII

식도 변화되었다. 사회주의가 전 세계에서 북한과 쿠바밖에 없다는 사실과 사회주의가 제일 못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도 자본주의로 고쳐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주의는 골고루 분배를 하는 좋은 제도인 줄 알았는데 주는 것이 없는데 분배원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옛날에는 15일에 한 번씩 식량, 간장, 된장, 신발까지 다 주었는데 이제는 주는 것이 없고 내는 것만 많으며 인민에게서 다 뺏아가기만 한다”고 인식한다.<sup>27</sup>

이제는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사회주의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옛날에 사회주의를 믿고 많이도 죽었다는 생각,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꼭 찼다고 한다. 돈만 있으면 어디든 살아갈 수 있으며 새 정치가 나와도 따라갈 사람 없다고 한다. 늦었지만 이제는 머리가 완전히 깨었으며 북한의 옛날 사상은 없어진 것이나 똑같다고 한다. 한국에 올 때 중국을 경험해보니 이제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100% 자본주의라고 한다.<sup>28</sup>

이러한 인식은 농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식량난으로 농민들에 대한 착취가 심화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는 곧 배급체제라고 생각하는데 배급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가 말로 되어 있고 글자로도 되어 있지만 실질 내용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교양만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반하여, 아는 사람은 사회주의는 무너져야 한다, 경제관리 운영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다못해 농사만이라

<sup>27</sup>- 이시선 증언.

<sup>28</sup>- 차호강 증언.

도 풀어놔서 개인농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sup>29</sup>

### 나. 체제 정당화 이데올로기 작동의 부실

북한에서 사회주의는 가장 중요한 통치이데올로기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보편적인 통치이념이다. 그에 반하여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등 북한에는 특수한 통치이념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통치이념은 통치 집단이 주민들에게 자기 권력과 체제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들이다. 통치이념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고 지지를 받으면 그 정권과 체제는 주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저항을 받거나 조롱을 받으면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은 실추된 것이다. 북한에서 제반 통치이념들이 제대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난과 같은 체제의 기능상실, 과도한 허위선전과 우상화, 주민들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인권 유린 등 억압적 정치체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통치이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주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등은 모두 극단적인 불신을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억압이 구조적 원인이다.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많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탈북자가 “먹을 것이 없으니 곶이 빨리 돌아간다(의식이 빨리 꺾다)”<sup>30</sup>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절대적인 궁핍이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일깨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 외에도 통치구호와 현실간의 간극,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표현대로 거짓말, 허위선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통치이념들이 신뢰를 상실하였

<sup>29</sup>- 이숙미(함북 청진시 청암구역 연진동 현진협동농장 농장원, 2003년 입국) 증언.

<sup>30</sup>- 서철영(청진 철도국 신호원, 1999년 탈북) 증언.

다. 김일성은 너무 오랫동안 이밥에 고깃국, 지상의 낙원 건설 등을 약속했으나 죽을 때까지 지키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10대 전망 목표<sup>31</sup>를 제시하고 이것이 달성되면 휘황찬란한 미래가 온다고 선전하였으나 빈말뿐이었다고 한다.

얼마전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전원회의에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내놓은 것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앞날에 대한 휘황한 전망과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날에 대한 전망이 휘황찬란하고 투쟁목표가 뚜렷하여야 인민들이 그것을 하루빨리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수 있습니다.<sup>32</sup>

또한 주체사상과 같은 통치이념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선전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은 인민을 하늘같이 내세우고 국호도 군대 이름도 인민대 학습당과 같은 기념비적 창조물 명칭도 인민이라는 말과 결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인민을 그토록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기 때문에 북한의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로서 인민의 자주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인민이 주인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주민들에게 가장 짜증나는 일은 내년이면 생활이 풀린다고 매년

<sup>31</sup>-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경제발전 10대전망목표.

<sup>32</sup>-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하여(전국공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3월 7일),” 『김일성 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45.

I
II
III
IV
V
VI
VII
VIII

주장하였으나 모두 거짓말로 판명 났다는 것이다. 매년 김정일 서한에서도 “금년만 참아라. 올해는 고난의 해, 이 고난의 해를 넘겨라.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해이다”라고 종용하였다고 한다.<sup>33</sup>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정부에 속아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아무런 정책도 구호도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북한 주민들은 대량의 아사사태를 경험한 이후 이제는 정부를 전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북한주민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 까 민충이도 의견을 가진다”는 말로 주민들의 의식각성을 강조한다. 북한 당국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선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사상은 의식주와 연결되어 있는데 의식주가 전혀 사상을 따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궁핍한 데 통제만 하나까 분노가 생긴다는 것이다.

외부에 대한 경험도 북한체제를 불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드나들게 되면서 중국과 북한을 비교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북한주민들의 많은 수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은 식량 구하기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 함흥에서 온 한 탈북자는 국경을 넘어 중국에 한번 오면 초등학교 졸업, 두 번째 중국을 오면 고등학교 졸업, 세 번째 오면 대학 졸업, 네 번째 오면 대학원 졸업 수준으로 북한의 현실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당국이 지금까지 계속 인민들에게 거짓말만 해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며, 중국에서 돌아오면 가족과 친구, 친척들에게 외부의 소식과 북한의 현실에 대해 재해석을 하게 한다.

북한 주민들이 정부 당국의 선전이나 구호에 기계적으로 내뱉는 반응

---

<sup>33</sup>- 오명선(신의주 일용품협동조합 자재인수원, 1995년 3월 27일 입국), 정갑렬(문화예술부 메아리 음향사 음향연구소장, 1996년 5월 31일 입국) 증언.



은 ‘안 믿어’이다. 이제는 “안 믿어”가 유행하는 말로 되었다. 오늘 배급 준다고 해도 “안 믿어” 무슨 말을 하던 “안 믿어” 라고 내뱉는다고 한다. 국가에서 하는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사람들은 특히 ‘안 믿어’를 더 많이 외친다고 한다. 이제는 지방에서는 김정일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순종하는 척 하지만, 체제와 정권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 다. 김정일에 대한 반감

김정일은 곧 북한체제이다. 김정일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북한의 전체제가 총동원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의 유지는 물리적 강제력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지지가 사회적 기반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는 북한체제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다. 그런데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난의 행군을 두어번 겪었고, 주는 것 없이 사람을 조이니 모두 돌아섰다고 본다. 이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과도한 이상화에 대한 환멸

김정일에 대한 반감의 하나는 과도하게 이상화 시켜놓은 수령의 개념에 김정일의 실체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신과 환멸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 사업, 하나의 사상으로 인간 개조하는 사상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였으며 수령에 대한 흠모, 무조건 충성 등의 교육은 이미 일색화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그럴수록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떨어졌다. 수령의 개념에서 이론과 실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수령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수령은 그 누구도 지닐 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 한없이 넓은 포용력,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최고영도자이며 혁명투쟁행정에서 쌓은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는 참다운 인민의 영도자이다.<sup>34</sup>

이처럼 수령의 자격 요건을 하늘높이 올려놓았다.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없을 정도로 신격화, 절대화되어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그 조건에 맞게 하기 위하여 역사도 위조하였다. 김일성의 혁명의 뿌리를 김일성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조작하여 김일성을 신격화하였다. 주체혁명의 뿌리를 1927년의 트·크라고 왜곡하였고, 김정일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백두산에서 태어난 것으로 왜곡하였다. 이로써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연해주로 피난을 간 사실과 김정일이 연해주에서 태어난 사실이 은폐되어 있다. 모든 역사를 왜곡하여 수령의 개념에 근접하게 올려놓았다. 근대사에서 김일성 집안보다 절세의 애국자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북한체제에서 수령-당-대중은 3위 일체라고 본다. 당은 어머니 역할을 하며, 당에서 무상치료, 의무교육, 배급을 다 해주도록 되어 있다. 수령의 개념과 정책 목표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1993년 3차 7개년 계획 실패 이후 심화되는 경제난 때문에 수령-당-대중의 3위 1체가 이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3위 1체의 체제가 붕괴되었으며 3위 1체 체제에 대한 신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책방향과 실체가 다르다. 수령을 믿을 수 없다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또한 역사에 대해서도 북한주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과거에는 김

---

<sup>34</sup>- 사회과학출판사, 『영도체계(주체사상 총서9)』 (서울: 지평, 1989), p. 35.

일성 일가의 조부모, 증조부, 형제까지 가족사를 혁명역사로 배웠으나 이제는 김정일의 가족관계, 아들, 딸이 몇이라는 말만하여도 잡아가서 죽이고, 무기징역 보내는 등 일체 비밀에 부친다고 비판한다. 김정일의 부인이 누구인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일체 모른다. 이같은 모순된 정책에 북한 주민들은 혼란스럽다고 한다.

결국, 수령의 개념이 저항의 불씨가 되고 있다. 남한에서 민주주의를 국시로 하였던 이승만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하여 4·19혁명이 일어났듯이 북한에서 수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수령이냐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수령의 개념이 현실에 맞지 않는 이 사실만으로도 북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수령의 개념과 기능이 북한체제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김정일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의 인식은 “아무리 혁명가의 가정에서 나왔지만 편안하면 달라지는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한다.<sup>35</sup>

김정일이 자신을 수령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김일성만 수령으로 불린다. 김정일은 장군으로 불리고 있다. 수령의 비범성, 절대성이 북한주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은 스스로를 수령이라고 불리기를 기피하고 장군으로 불리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배신감

김정일에 대하여 단순히 불신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배신감과 적대감도 발전되고 있다. 김정일 덕성실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하고 암기한다.

<sup>35</sup> - 차범승(해외 거주 무역일군, 2005년 입국)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인민들에게 더 잘살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버지 장군님께서서는 불면 불휴의 노력으로 협동농장길을 수없이 걷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천리 방선의 병사들을 찾으시고 조국보위를 잘하라고 고무격려해주고 현지지도의 로상에서 차안에서 쪽잠을 자고 로상에서 쫘기밥을 드시면서 인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광폭정치를 펼치면서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넓은 한품에 안아서 그들의 재능과 희망을 활짝 꽃피어 주시고 작은 흙이 있어도 넓은 품에 감싸 안아주시고 오히려 결함있는 자식을 더 못내 가슴아파 하시며 그 앞날의 장래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sup>36</sup>

그런데 이러한 덕성실기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김정일이 쫘기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본제 싸시 스시를 먹고, 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갓죽이나 상어 날개죽을 먹고, 인민들에게는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던힐이나 로스만 같은 외제담배를 피우고, 프랑스코냇이나 미제 XO 등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술을 먹고, 옷은 인민복을 입고 다닌다고 하지만 가족, 친인척, 기쁨조한테는 팬티부터 양말까지 일제 제품으로 포장시키고 약품은 일본, 미국, 독일, 스위스제로 쓴다. 물에 뜬 기름이다. 독재자의 전형이다”라고 말한다고 한다.

또한 고난의 행군시기 러시아를 방문하는 기차 안에서 수행원들에게 차창 밖으로 보이는 무고한 인민들의 헐벗고 굶주림과 가난함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뼈를 놀리지 않고 건달을 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고 나한테는 20만 명의 특수부대만 있으면 우리 공화국은 든든하다. 있으나 마나한 백성들은 나에게서 필요 없다”고 말했다는데 측근들이 이 말을 옮기는 바람에 전 주민들에게까지 알려졌다고 한다. 이러한 소문을 많은 북한 주민들이 듣고 있다고 한다.

---

<sup>36</sup>- 차범승 증언.

또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뒤로 하고 비자금 줄인 39호실을 통해 최우선 순위로 김일성의 시신이 문힐 기념궁전 건설에 쏟아 부은 사실을 중산층 북한인들은 다 알고 있으며, 자기가족의 호화판 생활 유지비와 애첩 생활비 탕진에 대해 39호실 산하 기관일꾼들은 다 알고 있으며 돈 많은 이들은 더러 흉내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김정일과 그 측근은 삼복더위 때에는 유럽각지에서 아이스크림까지 날라다 먹기 때문에 담당일꾼들은 아이스크림의 보존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며, 북경에 있는 고려민항총국은 아이스크림 한통을 위해 특별 비행기 편을 띄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김정일의 무능에 대한 비판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하여 1980년대부터 기울기 시작한 경제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인민들을 기만해왔으며 1990년대 대량아사 기간 동안 그 어떤 대책도 없이 수백만 사람들을 굶겨 죽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집집마다 걸려있는 그의 초상화를 보면서 친한 사람들끼리는 손가락질하고 혀를 내두른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현지지도도 잘 하지 않는 김정일에 대하여 문서정치, 비준정치를 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한다. 가령 한 기관에서 제의서를 올려 보내면 깊은 요해도 없이 비준하고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올려 보내면 번복하여 비준함으로써 도대체 내용이나 파악하고 비준하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기관들의 알력을 조성시키는 장본인으로 성(省)급기관들의 웃음거리를 자아내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노선이나 방침을 세울 때 정확한 분석이나 주위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 기분파라고 묘사한다고 한

I
II
III
IV
V
VI
VII
VIII

다. 그 예로 중소 발전소 건설을 언급했는데, 김정일은 물이 있는 모든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라고 명령했지만, 사실 겨울이 긴 북한의 실정과는 맞지 않아 수많은 발전소들이 쓸모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 인력과 목재, 시멘트 등만 낭비했다고 불평불만이 자자했다고 한다. 북한체제의 핵심인 노동당원들과 엘리트 간부들도 노골적으로 김정일을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이 정치를 하고나서부터 망조가 들었다”, “여자질, 담배질, 문서 놀음질에 이것 부서라 저것 건설하라 등 순서 없는 기분파적인 발상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한다고 한다.

이러한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무능을 조소하는 유행가가 퍼지고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하여 만든 노래 “그리운 장군님 어디에 계십니까?”라는 노래는 “백성들이 굶어죽고 있는데 장군님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의미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북두칠성 저 멀리 달은 밝은데  
 아아 장군님 어디 계실까  
 창가에 불 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디일까

이 노래를 부르는 북한주민들은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배고파 허덕이고 있는데, 장군님은 뭐하고 있는가, 우리는 배고파 허덕이고 있는데, 여자들 속에 폭 파묻혀 즐기고 있겠구나”등의 의미로 해석하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 라. 북한의 지배계급과 지배체제(regime)에 대한 반감

북한주민들이 북한체제에 대하여 가지는 반감과 원한의 요인은 무수히도 많다. 못먹고 못사는데다가 자유가 없고 통제가 너무 심하며, 인간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은 김정일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된다. 자세한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 엄격한 조직생활, 사회통제에 대한 반감

북한주민들의 북한체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의 하나는 조직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사실이다. 당조직, 사로청, 여맹, 인민반 등의 조직에서 일생동안 집단생활을 해야 하며, 생활총화를 하루라도 빠지면 고초를 겪는다. 생활총화에서 상호비판을 해야하기 때문에 매번 누구를 어떻게 비판해야 할지 내가 무슨 비판을 받을지 항상 불안하다고 한다. 먹고 살 걱정도 태산인데 조직생활, 생활총화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편할 날이 없고 일주일 중에도 매일같이 교시침투, 수요학습, 금요노동, 토요일 생활총화 등의 정치교육 일정으로 하루도 쉴 사이 없이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고 한다. 직장 밖에서도 인민반이 구성되어 항상 인민반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인민반장의 감시와 불시검열을 받아야 한다.<sup>37</sup>

개인생활이 제대로 없고 모든 주민이 감옥처럼 같은 시간 스케줄에 따라 감시 감독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진절머리를 느낀다고 한다. 북한에서 개인에 대한 집단주의적 통제방식의 하나는 사적 영역의 시간적 통제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공식적 업무 외에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다고 한다. 시간적 여유를 주면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유시간을 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온다

<sup>37</sup>- 이시선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고 한다. 생산시간 이후에는 학습과 조직생활이 계속되는 것이다. 한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볶아 댄다”고 한다. 심지어 명절에도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 지시문을 하달하여 “이 명절을 혁명적 경각심으로 긴장하고 지내자”고 지시하며 특별경계주간으로 설정한다고 한다. 2·16, 4·15 등의 명절에는 이틀을 쉬는데 하루는 직장에 나가서 집체적으로 휴식하며, 하루는 집에서 자율 휴식을 한다고 한다. 자율 휴식날에는 밀린 가사일을 하고 나무하고, 구멍탄 찍기 등으로 쉴 틈이 없다고 한다. 명절을 지난 후에는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조직에게 보고하게 한다. 특히 여러 명이 모여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하며 인민반장이 아무 집이나 문을 두드리고 들여다 본다”고 한다. 이러한 시간적 통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다고 한다. 1990년대 들어서 이런 식으로 통제가 심화되었다고 한다.

이동의 자유도, 여행의 자유도 없이 얽매어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직장선택에도 자유가 없고 직장에 있다가도 사소한 오류가 있으면 지방으로 산골로 유배를 보내는 등의 통제가 엄격하다. 농민들은 평생 농노처럼 농촌을 떠나지 못하고 억매어 있으며, 농촌 남자는 농촌에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도시처녀와 결혼하기도 불가능하다. 군대에 한번 나가면 7-10년을 군에서 보내야 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젊은 시절 10년을 군대에서 발전 없이 보내는 것이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온갖 종류의 통제, 검열, 문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속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도 염증을 느낀다는 탈북자가 많다. 자동차 하나 운행하는데도 검열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온갖 종류의 문건을 구비해야 차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주체사상에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서도 개인생

활에서 자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머리는 조금만 별나게 해도 단속하며 하나에서 열까지 자유가 없다고 한다. 조선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터뜨릴만큼도 없고, 김정일 간신들이나 살고 싶을 것이라고 한다.<sup>38</sup>

북한에서는 자전거가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데 한번은 간부의 딸이 자전거 사고를 당한 뒤 김정일 위원장이 여성들의 자전거 타는 것을 금지시켰다. 자전거로 장사하는 북한주민들은 대단한 타격을 받고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통제는 결국은 흐지부지 되지만 이런 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대단하다고 한다.

특히 경제난 속에서 장사와 텃밭으로 연명하는 주민들을 탄압하자 왜 백성들이 먹고 살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느냐고 반발했다고 한다. 함경도 지역에서는 농업분야에 사적 활동의 숨통을 조이는데 대한 반발이 대단하다고 한다. 북한에서 개인 텃밭의 생산량이 100만 톤에 가까운데 이를 금지하면 곡물 생산량이 그만큼 위축되며, 시장 공급도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것인데 왜 그런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함경도 지역에서 주민들의 텃밭을 통제하는 보위원들이 퇴근길에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한다고 한다.

과도한 사회통제는 백성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일제에 비교한 해방이후의 북한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착취와 압박이 있는 체제가 현재의 체제라고 북한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임꺽정 영화를 보고 이조시대 보다 현재가 더 백성을 착취하는 체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sup>38</sup>- 이시선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 인권유린·공포정치에 대한 반감

집단생활과 사회통제도 불만의 대상인데 통제의 방식이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며 폭력적이라는 점이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다. 북한의 간부들은 일단 자리에 있을 때 한몫을 벌기 위하여 아랫사람을 뜯어먹는다고 한다. 보위부, 안전부, 검찰 할 것 없이 사람을 인간취급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더 억누르고 뜯어낸다고 한다.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한다. 지금 지방의 간부들은 주민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하면 돈으로 고여야 하는 등 주민들을 괴롭힌다고 한다.

북한 영화에 ‘오빠시’라는 것이 있는데 조선인 일본경관의 이름이다. 북한 사람들이 보안원보고 오빠시보다 더하다거나, 보안원들이 형편없이 꼴 보기 싫게 논다고 인식하여 불만이 크다. 걸핏하면 잡아가서 고문하고 불법 구금, 구타 등 인권유린을 하고, 사소한 잘못에도 용서하지 않고 단련대에 넘기고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겁을 주기 때문에 북한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한다.<sup>39</sup>

최근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보안원들이 회의를 하였는데 백성들이 옛날 일본경찰보다 잔인하고 악질이라고 소문났으니, 인권유린하지 말고 존칭어 쓰라고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매 단위마다 회의했는데 말투를 곱게 써라, 야비한 말 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지시는 그때 잠깐 뿐이라고 한다. 보안원들은 뼈 속까지 버릇이 되어 있어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고 한다. 말은 말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한다고 한다.

폭압기구의 인권유린이 심해지자 사회가 술렁거리고 자기의 의견, 사

---

<sup>39</sup>- 이철순 증언.

상을 표출하며 반발한다고 한다. 지난날에는 보위원, 안전원에 저항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빼앗긴 물건을 정정당당히 되찾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소요가 일어나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장사꾼의 담배와 환전상의 돈을 빼앗고, 배급도 안주면서 장사도 못하게 하니 앉아서 굶어 죽으라는 뜻이냐면서 보위부 안전부에 대항해서 떼를 지어서 항의하곤 한다고 한다. 폭압기구의 횡포에 대하여 북한 주민들은 “인민들의 생활은 일제 시대 만주의 처장즈 유격근거지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고달프다”고 말하곤 한다. 안전부 보위부가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 정도가 일본군대가 조선인을 못살게 군것에 못지않다고 한다. 북한의 현실이 일제 식민지 시기보다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는 어려운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고, 정부가 올바르게 못해서 인민이 이렇게 고달프다고 말했다는 죄명으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서운석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간첩으로 몰아서 죽인 데 대하여, 최고의 정치적 신임을 주던 사람을 왜 지금에 와서 빨치산 때 경력에서 1달간 공백이 있다고 트집 잡아서 갖은 고문을 다하고 간첩죄로 고백 받아서 죽이냐고 볼멘소리를 한다고 한다.

정치·경제·사회의 불안을 일부 간부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책임전가하고, 간첩들이 당 내부에서 줌을 쓸어서 그런 것으로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본다. 또한 간부를 그렇게 죽이는데 하물며 백성 죽이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교수형 처하고, 입에 재갈 물려 군중 앞에서 총살하고, 갖은 현대판 고문을 들어대어 안한 것을 한 것으로 조작하여 죽인다고 생각한다. “몇 십 년을 같이 일한 사람을 저렇게 죽이는구나. 나도 언제 잡혀죽을 지 모르겠구나”라는 불안과 공포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일반 백성

I
II
III
IV
V
VI
VII
VIII

들이 김정일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한다.

이처럼 폭압기구가 현 정부에 불만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국가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구인데 오히려 노동계급의 이익을 훼손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폭압기구가 작동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만을 심화시키고 있다. 폭압기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 성분정책에 대한 반감

북한이 계획경제였기 때문에 주민들을 경제적 노동과 정치적 집회에 동원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군중노선이라는 것이 있다. 가능하면 한명이라도 군중대열에 참여시켜서 경제적·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자는 정책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주체사상의 명제도 바로 이런 군중노선에 철학적인 외피를 입힌 것이다. 그런데 군중노선을 이탈하거나 이탈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어 처벌을 가하는 정책을 계급노선이라고 한다. 과거의 적대계급의 출신들이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급투쟁을 계속해서 잠재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계급노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북한에서 적대계층, 복잡계층 등의 딱지(label)를 붙이고 통제를 가하는 성분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나 조상의 출신성분으로 자신에게까지 정치적 성분을 재단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불만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체제이반의 요인으로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성분정책에 불만을 품고 남한으로 망명하였다.

김일성의 말에 “믿음은 충신을 낳고 의심은 반역을 낳는다”고 하면서 인민을 의심하지 말고 한명이라도 더 포용하라는 군중노선의 취지에

관한 말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서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정치노선은 계급노선이다. 계급노선에 따라 북한 보안기관은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매우 많다. 사람을 너무 믿지 않고 고문하고 추궁하기 때문에 남한에 온 사람들 중에는 악에 찬 사람들이 많다. 할아버지 때문에 손자까지 의심받으니 이반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성분이 좋다는 사람은 소수이며 대부분 성분이 나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체제는 불과 몇 퍼센트의 전위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김정일 죽으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성분정책은 주민들의 삶에 너무 큰 지장이 된다고 한다. 개인이 자기 살 길을 가는데 출신성분을 이유로 너무 피곤하게 간섭하고 밟고 한다는 것이다. 정부를 반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외화벌이 돈을 많이 바쳤는데 사람을 의심하고 못살게 군다고 한다. 외화벌이 과제를 월 300 달러씩 바친 한 탈북자는 다른 사람의 평균 100 달러에 비해 큰돈을 바쳤는데도 자기를 의심하여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서 남한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이 아편장사, 역적질을 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의심해서 못살게 하고, 탈북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런 일이 북한에서 흔하다고 한다. 낙인정책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인정책은 솔한 사람들을 반대파로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sup>40</sup>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김정일의 맥이 없을 때 반역이 꼭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심은 반역을 낳는다는 북한의 말대로 북한에서 성분정책은 저항세력을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sup>40</sup>- 서선창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 마. 체제이반·체제저항의 심리

너무도 못사니 조선에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다고 증언한 탈북자가 많다. 북한은 현재의 체제가 어떤 식으로든 종식되기를 희구하고 있다. 절망감과 이판사판의 현실도피 심리가 가장 잘 표현된 말이 “전쟁이나 팍 나버려라”이다. 10여년 전부터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의 하나이다.

전쟁이 나기 위하여 그리고 현 체제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증언을 한 탈북자도 있다. 미국이 전쟁을 도발하여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미국은 도대체 어디가서 뭐 하나, 미국이 말로만 친다고 하면서 왜치지 않느냐고 미국을 원망한다고 한다. “미국이 왜 전쟁을 못하나 이 허술한 나라를, 1950년대 중반에서 발전하지 못한 나라를, 전쟁이여 빨리 일어나라, 가난한 초가집을 왜 못 때리나. 빨리 때려서 전쟁이나 하지. 병커 폭탄 몇 개만 떨어뜨려도 될 것을. 미국은 왜 못하나” 라고 미국을 원망한다고 한다. 김정일을 욕하면 당장 잡혀가니 미국을 욕한다고 한다. 미국을 미물, 병신이라고 놀리기도 한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교양강연을 할 때 “미국은 종이범, 이빨이 빠진 늙은 범”이라고 비판한다고 한다. 푸에블로 뺏기고도 못가지고 가고, 비행기 추락되어도 못가지고 가고, 김정일의 무비의 담력 앞에 김정일 장군이 계시는 한 공화국은 칠 수도 없고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50년 전쟁 때도 미국을 비롯한 추종국들이 먹지 못했는데 핵, 미사일, 화학무기 가졌으니 더 못 때리는 구나, 우리는 김정일 장군님, 장군님 하지는 대로 해야 되나”라고 반문한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용천폭파가 미국이 한 것이라면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컸을 것이라고 한다. 김정일이 “백전백승 강철 영광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제사 미국이 때리는구나, 사상교육과 틀리구나. 김정일 저것 믿고 있다가는 우리는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사상동요가 대단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 백성들은 왜 미국이 못 때릴까 하고 궁금해 한다고 한다. 미국이 조선을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만큼 현 체제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 썩어빠지고 인정사정 없는 사회, 김정일만 지키고 있으며 김정일 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섰다고 본다. 북한 주민들은 심지어 장성택도 김정일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장성택이 철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북한의 실태를 너무 늦게 알아서 지금 왔지만 북한사람들은 주민이든 간부든 다 돌아섰다고 본다. 친척들이 “고난의 행군 때 친척들이 새끼들 끌어안고 중국으로 뛰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도 그 말에 반신반의 하면서 중국에 가서 한국이 그런지 확인한 다음에야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체제 저항적인 소규모 소요사태는 이미 여러 번 일어났었다. 가령, 1996년 6군단 사건은 프룬제 군사대학 고급군관 위주로 평양에 특수부대를 진출시켜 평양점령을 시도한 사건이다. 또한 1998년 황철, 황해도 송림 제철소의 집단 데모 사건이 그 사례이다. 보위사령부가 동원되어 현지에서 300명을 총살하고 수천 명을 체포하였던 사건이다. 송림제철소에 배급이 나오지 않자 당 비서와 노동자들이 가동되지 않은 노후 설비를 고철로 팔고 옥수수로 바꾸어서 배급을 주었다. 이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어 검열이 나왔고, 검열에 대하여 노동자와 당 비서, 간부들이 저항하였다. 그러자 보위사령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송림제철소를

I
II
III
IV
V
VI
VII
VIII

습격하였다. 엄청나게 큰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북한 탈북자들은 최근 1989년에 제작한 영화 “임꺽정”을 하나의 저항의 전형의 인물로 인식한다. “오죽하면 꺽정이가 칼을 들었겠는가”가 그러한 인식이다. 이 말의 의미는 북한 주민들의 악이 날대로 났다는 의미로서, 이제 우리도 저항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획기적 개선책을 내놓기 전에는 백성들의 불만과 반감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북한주민들이 지금까지 속아 살았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리적 강제력으로 억눌려 있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체제의 약한 고리가 보이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 10여년 전부터 배급을 안주어도 견뎌냈으며 정부가 배급 주어서 산 것이 아니라, 제 발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백성이 나라에서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꺽정처럼 칼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천에 사무쳤네 백성들 원한 소리  
피눈물 고이었는데 억울한 이 세상  
마음 어진 백성들이 어이 칼을 들었나  
양반놈과 한 하늘 이고 정녕 살 수 없었네.

북한주민들은 임꺽정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 임꺽정의 작가 리춘구는 바른 소리를 하는 작가라서 혁명화를 당한 사람이라고 한다. 임꺽정은 이조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지만 작가 리춘구는 현재의 북한의 실상을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병사가 총 들고 탈영하면 김정일이 매우 긴장할 정도로 큰 사건으로 인식되며, 잡힐 때까지 김정일이 안절부절 못한다고 한다. 그만큼 불안감이 큰 것이다. 북한당국은 겉으로는 김정일을 위해 총 폭탄

이 되라, 자폭정신 운운 하지만, 실제로 한쪽으로는 폭압기구로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끼리끼리 모여 술 놀이도 못하게 하고, 퇴근이후 남의 집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집체적으로 몰려다니는 것을 단속하고, 퇴근 이후에는 바깥 나들이도 못하게 한다. 합동 그루빠를 구성하여 밤새 순찰을 한다. 또한 김정일은 최측근이 이반할 것을 제일 무서워하며 최측근이 모의를 할까봐 술 놀이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한다. 김정일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까닭은 김정일 체제하에서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 많기 때문이다. 소요사태의 여부는 폭압기구가 동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폭압기구 종사자도 같은 피해자로서, 불만이 많다고 한다.<sup>41</sup>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북한체제에서 사회적 동의는 거의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동의를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불만과 반감이 매우 크다. 최근 탈북자들은 “점화만 시켜주면 다 동참한다”는 증언을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의 비인간성과 김정일에 대한 실망, 불신감, 배신감 때문이다. 김정일에 대한 불신이야말로 조그만 소요사태라도 나면 여기에 동참하여 전국적 급변사태로 확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 3. 간부들의 체제 신뢰 동요

국가에 전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권력은 권력자들이 권력의 정당성, 체제의 우월성, 메시아적인 사명감, 군사력에 대한 무적성 (invincibility)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을 때나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간부층에서 그러한 확고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자신감의 위기가 깊을수록 체제의 붕괴는 가까운

<sup>41</sup>- 차호강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것이다. 고르바췌프의 측근의 한 사람인 야코블레프(A. N. Yakovlev)는 1990년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남한에서의 노동생산성이 북한보다 10배 이상이며, 서독의 국민들은 동독 국민들보다 훨씬 더 잘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sup>42</sup>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문제가 악화될수록 자본주의체제는 건강하다는 인식이 사회주의 권력엘리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서독, 일본, 동아시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성장, 기술발전, 수출의 팽창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다.

권력의 정당성 상실과 권력엘리트의 사기저하는 군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소련붕괴의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일부의 보수와 지도자들이 보수회귀를 위한 쿠데타를 감행했을 때 군부가 보수회귀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았고 또한 쿠데타에 저항하는 군중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를 거부한 것에 기인한다.

북한의 간부들도 자신감(confidence)의 상실감에 빠져 있다. 체제가 위기에 빠져 있으며 회생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 간부들이 하는 말 가운데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되었다는데 우리 조선도 사회주의가 다 붕괴되었다, 다만 정권교체만 되지 않았을 뿐이다, 동구에는 영도자까지 교체되었지만 북한에서는 영도자만 바뀌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것이다.

북한 간부들의 자신감 상실은 단순히 경제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만은 아니고 북한 체제 자체가 방향 감각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데서 더욱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들은 지금 북한이 목표도 없고

---

<sup>42</sup> - The New York Times, July 8, 1990, p. 4;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83-385에서 재인용.

방향도 없다고 본다. 북한체제는 이미 사회주의의 궤도에서 이탈하였고, 원래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탈된 상태에서 새로운 길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김정일 자체가 사회주의 제도에서 이탈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허울만 쓰고 있으며, 실제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종착점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간부들의 사상동요가 매우 크다고 한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사회주의라고 해도 북한에서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북한의 체제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토론이 없는 상황에서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정책토론 기구인 당대회도 없고, 전원회의도 없고, 정치국도 기능이 없으며 따라서 당내 민주주의도 없다. 비서국이라는 집행기구 뿐이다. 서기실이 정책을 만들어서 지령을 내리는 식이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 구호를 계속 외치지만 실제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1인 독재이며 군사계엄 상태이다.

김일성 시대는 매년 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정책을 토론하고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지금은 허황된 구호뿐이라고 한다. 가령, 강성대국은 말뿐이며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북한 간부들은 당황해 있다고 한다. 북한 간부들은 김정일을 지지하는 척하지만 대안적 기회만 있으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간부들은 영예감도 없다. 일을 해도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하면 정확하다고 인식해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텐데, 말씀대로 부득이하게 하기는 하지만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수 없이 지시를 이행할 뿐이다. 북한 간부들은 핵무기도 김일성 시대에 만든 것이지 김정일의 업적이 아니라고 본다. 한 나라의 수령 중에 인민생활에 무관심한 사람은 김정일 밖에

I
II
III
IV
V
VI
VII
VIII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간부들의 대안은 매우 소극적이다. 체제가 붕괴되거나 남한에 흡수통일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망할 길, 자멸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로 넘어가면 기득권을 상실하여 동독처럼 된다고 본다. 즉, 권력층의 권력이 없어져서 외교관이 시장에서 물건 파는 신세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의 간부들은 사회주의로의 복귀를 희구한다고 한다. 1967년 5·25 교시 이전을 천리마시대라고 부르며 그때를 그리워하며 천리마 시대는 잘 살았다는 생각, 정치를 그때로 복귀하자는 인식이 많다고 한다. 1960-1970년대 천리마 운동시대가 사회주의 시대였으며 사회주의로 복귀해야 북한이 살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로 복귀하면 권력층이 그대로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간부들이 기껏 표출할 수 있는 생각도 그 정도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천리마시대, 우리 정말 잘 살았어. 수령님 노고가 많았어”라고 한다고 한다. 그 대신 그렇게 말하면 당국에서는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대신 “김정일 장군님이 버티고 있으니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망국노가 돼”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

### 간부들의 불안감

북한의 간부들은 간부해먹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북한에서 상층부의 숙청이 더 많아서 더 불안해한다고 한다. 간부층이 더 동요하고 있다고 증언하는 탈북자가 많다. 현 상태로 가면 간부층에서 번고가 올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sup>43</sup>

<sup>43</sup>- 김철용(인민보안성 외화별이 회사 지사장, 2003년 11월 탈북) 증언.



간부에 대한 통제가 심할수록 간부들은 현직에 오래있기를 바라기도 하는 현직에 있을 때 얼마라도 돈을 모아놓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언제 철직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부들의 의식은 군장성, 핵심부서 간부들에 구분없이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고 한다. 모두 돈에만 신경쓴다고 한다. 높은 사람일수록 재산축적에 신경 쓰고 가진 것을 아까워하고 잃을까 걱정한다고 한다. 당성이나 충실성이 없으며 첫째가 돈이라고 한다. 현금, 달러가 최고라고 한다. 김정일 최측근 중에도 김정일을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오히려 체제가 무너지면 하층에서 보복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남한이 잘 산다는 것을 알지만 남한에게 먹히면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중앙당 과장급은 “체제가 무너져도 나아 뭐” 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이상 간부들은 체제가 붕괴되면 자신이 어찌될 것인가가 최고의 관심사라고 한다. 그들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대비해서 달러라도 쥐어야겠다고 생각한다.<sup>44</sup>

북한 간부들은 이제 탈출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간부들은 남한사람들에게 “통일되면 나 같은 사람 일자리 구해줄 수 있소?”라고 농담 삼아 말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탈북 했다고 하면 옛날에는 “변절했구나”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는 “성공했구나”라고 말한다고 한다.<sup>45</sup>

#### 4. 물리적 강제력의 기능 부실화

물리적 통제기구도 경제난과 더불어 기능이 부실화되고 있다. 그 실

<sup>44</sup>- 이진강(해외주재 은행간부, 2004년 탈북) 증언.

<sup>45</sup>- 차원철(중앙당 근무, 2004년 입국)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태를 자세히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통제가 해이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실시하던 각종 학습은 형식적으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가령, 매주 실시하던 각종 학습시간에는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이 행해지던 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강사가 문제를 하나씩 주고 암송하게 한다고 한다. 1997-1998년경부터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한다. 총화시간에 가장 엄격하게 행하던 호상비판 제도는 1990년대 초부터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제도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흐지부지 됐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의 사회통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통제를 담당하는 간부급 요원들이 시장과 결탁하여 공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서 시장자본주의로 조용한 혁명이 가능해진 이유는 뇌물이다. 장사하는 주민들이 직장의 당 간부, 시장바닥의 통제요원들에게 제공한 뇌물 때문이다. 뇌물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이행을 가능하게 한 혁명적 수단인 셈이다. 북한의 공적 부문의 조직원들이 비공식 경제부문에 공생하거나 기생하는 현상이 일반화, 보편화되어 있다.

탈북자들은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망하기 직전이라고 인식한다. 1990년대에는 증명서 없이 국경연선에 가면 잡아가다 따지고 조사하고 구금하였는데 2000년 지나서는 안전원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가족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만 받고 묵인한다고 한다. 이제는 돈이면 다 통한다고 한다. 중국에 가는 것이 뻔한 사람인데도 잡지 않고 돈 받고 통과시켜 준다고 한다. 북한의 뉴턴의 제4법칙인 “고이면 움직인다”라는 법칙은 어디서나 통한다고 한다.<sup>46</sup>

안전원, 보위부원 등 단속요원이 장사꾼과 결탁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것은 흔한 일로 되었다. 불법화되어 있는 암시장

<sup>46</sup>- 차호강 증언.

은 장사꾼들과 간부들의 합작품인 것이다. 간부들은 장사를 단속하는 핑계로 주민들에게 접근하여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먹고, 골동품을 단속한다는 핑계로 골동품을 압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척 하면서 자기가 횡령한다고 한다.

심지어 보위부 요원들까지도 내적으로는 크게 동요하며 양심의 가책으로 갈등하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오직 돈에만 집착하고 있다. 고위 권력층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난 속에서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의 행위 양식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비사회주의적 지하경제에 결탁하여 개인적 사리 추구에 몰두하려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이 광범위하게 뇌물수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입당, 대학 입학, 직장 배치, 주택 배정, 여행증명서 발행 등 대민업무에서 당, 행정관리들이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뇌물이 매개되어 있다고 한다. 심지어 기차표 판매원까지도 뇌물을 받고 기차표를 팔며, 기차에 여행객의 짐을 실어주는 짐꾼까지도 뇌물을 받아야 여행짐을 기차에 실어준다고 한다. 뇌물없이 되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배 엘리트들은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음으로써 음성소득을 올리고 있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 뇌물수수,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동원이 가능한 연줄망을 활용한 사익 추구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북한에서 간부들의 뇌물이 만연하여, 사형선고 받은 자도 뇌물을 쓰면 살아 남기 때문에 처벌을 당하는 사람은 뇌물을 줄 능력이 없는 약한 자들이라는 인식도 팽배하고 있다.<sup>47</sup>

경제난이 가져온 사회적 문제의 하나는 힘 있는 관료들의 뇌물수수이다. 관료적 통제가 엄격한 북한에서 주민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

<sup>47</sup>- 노숙미(교사, 2003년 탈북)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료적 통제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통제의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반체제 조직을 형성하여 집단행동을 통한 변화를 이루어 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간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조직을 이탈하여 장사를 하는 채널을 개발해 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과정에서도 통제하는 요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장사를 계속하는 ‘허락’을 받아낸다. 뇌물을 받으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안전원들은 검열이 있는 날에는 “오늘 검열 나왔으니 팔지 말고 들어가라”고 귀띔하여 준다고 한다. 군부, 당, 보위부, 안전부가 한 덩어리가 되어 암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준다고 한다. 중요한 변화의 동인은 북한 간부들의 부패이다.

## 5. 체제위기속의 체제유지 배경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물리적 통제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적·정치적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고, 체제의 정당성도 훼손되었고, 간부들의 체제 자신감도 무너졌다면 체제를 지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와 안전부, 보위부 등의 물리적 강제력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북한이 정권초기부터 전쟁을 대비하여 시·군 단위의 지방의 자립경제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능 붕괴에도 불구하고 최소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국가의 선전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안 믿어’를 외치며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이 거짓말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 조차도 꿰뚫어보지 못하는 북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통치 기술이 있다. 체제위기속의 체제유지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자.

## 가. 정치부문의 물리적 통제력 유지

뇌물은 체제를 변화시키는 기제인 동시에 체제를 유지시키는 기제라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간부들은 뇌물을 받고 일탈을 눈감아 주고, 동시에 뇌물을 먹기 위하여 통제를 지속하는 것이다. 통제가 체제유지를 위한 통제가 아니라 개인 횡령을 위한 통제이다.

그런데 뇌물로 되는 것이 있고, 뇌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장사 등의 경제적 일탈은 뇌물로 해결되지만, 정치적 문제는 뇌물로 안 된다. 정치 문제에 대한 감시는 아직도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전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정치적 부문에 있어서는 통제기구가 작동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해서는 보위부와 안전부가 철저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이 2007년 10월경에 조선로동당 행정부 장직에 임명되었는데 당 행정부장이라는 자리는 보위부, 안전부, 검찰소, 재판소에 대한 당적 지도를 하는 부서이다. 물리적 통제의 공식 국가기구를 김정일의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조체제와 유사한 권력 장악방식이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보위부, 안전부가 생활거주지별로 조직화되어 있다. 지역 단위별로, 직장 단위별로, 보안원이 조직되어 있으며, 5가구당 1명씩, 10명에 한명씩 비밀감시요원이 잠복해 있다. 북한사회는 철창 없는 감옥으로 관리되고 있다. 김정일의 친일가를 제외하고는 도청, 감시 미행하는 체계가 발달했다. 이런 조건하에서 그 어떤 반국가적·반당적 행동도 어렵다. 집체적으로 음모, 반란, 소요를 일으키기는 더욱 어렵다. 1996년 6군단 사건 등 몇 번의 반란의 시도도 좌절당하였다. 발각되면 재판도 통하지 않고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군대의 경우 보위사령부, 국가보위부, 호위국 내의 호위국 보위부가

I
II
III
IV
V
VI
VII
VIII

조직되어 있고, 보위사령부에서 파견한 보위원이 중대 당 1명씩이다. 보위원이 사령부에 보고하여 술한 간부들이 숙청되었다. 이러한 감시체제 때문에 군부내 정변도 일어나지 못하고 주민들의 집단행동도 일어나기 어렵다. 보위사령부는 군부와 사회까지 감시하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국경연선은 2중, 3중의 감시 통제가 시행되고 있다. 1선에 국경경비대, 2선에 적위대(군당에서 운영), 3선에 비사회주의 그루빠가 활동하고 있다. 국경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3중으로 막고 있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안에서 저항도 못하게 한다.

각 공장기업소 내에서도 담당 보위원과 안전원이 다 있다.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과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잡아간다고 한다. 또 감시주체가 너무 많다. 안전원 위에 검찰도 있다. 또한 합동조직인 109 상무도 있다. 2003년경 1월 9일 방침으로서 이것은 당, 안전부, 검찰이 합동으로 구성된 상무조직(task force)이다. 여러 기관이 연합 검열을 하기 때문에 걸리면 빠지기 어렵다. 뇌물이 통하지 않는 조직이다. 상무는 여럿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봐주기 어렵다고 한다. 한국노래, 드라마, 영화를 보면 단련대에 보내고, 한국 방송, 라디오 들으면 감옥에 간다고 한다.

비사회주의 그루빠도 있다. 군 단위에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통제조직이다. 군당에서 조직하여 당, 검찰, 안전부 연합으로 실시한다. 국경연선에 있는 군에서 많이 시행하는데 항시적으로 검열을 지속한다고 한다.

015 검열은 국방위원회 검열이다. 평양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다 보는 조직이다. 자동차 번호판 없이 외화벌이 하는 것, 전시상태 등화관계 상태 등을 검열한다. 1년에 한번씩 015 검열을 한다.<sup>48</sup>

<sup>48</sup>- 차호강 증언.

이처럼 감시체제가 너무 많아서 저항을 모의하지도 못한다고 한다. 몇 명이 앉아서 토론도 못하는데, 조직적 저항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한다. 북한은 체제와 사상을 반대하면 혁명의 배신자,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로 규정하여 맹아단계에서 짓밟는다. 그런 점에서 반체제 데모는 일어나기 어렵다. 사상의식은 다 깨어있으나 통제가 너무 심하여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경찰 앞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굶실거린다고 한다. 폭동을 일으킬 생각은 꿈에도 못한다고 한다.

### 빈번한 기획통제

일상적 통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기획적으로 추진하는 사회통제의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다. 한국의 대북지원이 증가할수록 북한의 사회통제의 필요성은 더 증가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대적교양’을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된 것이 소위 ‘심화조사건’이라고 불리어진 통제정책이다. 남북관계가 트이기 시작한 1998년 이후부터, 그리고 정상 회담을 하고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추세가 심화되었던 2000년 이후 북한에서는 사회안전부에 ‘심화조’라고 불리는 사회통제반을 구성하여 검거와 처벌의 선봉을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은 “김정일 원자탄이 떨어졌다”고 일컬을 정도로 심한 통제의 철폐가 내렸다. 직장에 30분만 지각해도 심화조에 걸릴만큼 통제가 엄격하였다.

사회적으로 여론이 너무 나빠지자 김정일은 사회안전부에 책임전가를 하였다. 최문석 사회안전부장을 반당·반혁명으로 몰아서 책임을 물었다. 심화조 사건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김정일은 사회안전부의 과잉 통제에 책임을 돌리고 사회안전부 요원 6천 명을 처벌하고 사

I
II
III
IV
V
VI
VII
VIII

회안전부를 인민보안성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sup>49</sup>

고난의 행군시기 보위사령부를 동원시켜 황해도 송림시, 혜산, 무산, 남포를 초토화하였던 것도 당국의 기획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제이다. 1개 도시를 전면 포위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송림이후에 남포, 다음은 혜산 이런 식으로 대상으로 설정된 도시 전체를 장악하여 조사하고 처벌을 하는 방식이다. 보위사령부는 이 과정에서 당과 시당 책임비서까지 처벌하고 심지어 보위원까지 처벌하였다고 한다. 당 위에 군 보위사령부가 있는 셈이다. 국가보위부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군대가 나섰다.<sup>50</sup> 신의주, 해주에서 15-30명을 총살하였고, 남포에서 8명을, 송림에서도 수 명을 총살하였다고 한다.<sup>51</sup> 이 당시 보위사령부는 우는 아이도 그친다고 말할 만큼 매우 악명이 높았다. 북한 주민들은 보위사령부를 매우 무서워한다고 한다.

### 공포심 조장

북한당국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흔히 사용하는 통제방식의 하나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북한이라는 사회는 알면 알수록 무서움을 더 느낀다고 한다. 충성하여 일하다가도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언제든지 매장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절실히 느끼게 되기 때문에 무서웠다고 한다. 그것이 탈북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탈북자가 많다.<sup>52</sup>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개처형을 목격하게 한다든지, 온 가족을 모조리 신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등의 방

<sup>49</sup>- 차현철 증언.

<sup>50</sup>- 이광홍(정보통신학 교수, 2004년 탈북) 증언.

<sup>51</sup>- 김철용(인민보안성 외화별이 회사 지사장, 2003년 11월 탈북) 증언.

<sup>52</sup>- 강영래(사적지해설강사, 2003년 탈북) 및 석만영(의사, 2003년 탈북) 증언.

식이다. 탈북자들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하룻밤 사이에 실어가는 것, 총살을 계속 시켜대는 것 등의 가혹한 처벌방식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산다고 한다.

또 하나의 공포의 요소는 북한의 처벌의 무자비함이다.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표현으로는 “총살이라는 것, 사람하나 죽이는 거 간단해요. 개 하나 죽이는 것과 같지요. 짐승하나 썩 죽이는 거랑 같지요”라고 표현한다.<sup>53</sup>

그래서 북한주민들은 항상 주의, 조심, 걱정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 영화를 많이 접했고 세계에 대해서 알지만, 북한 체제가 너무나도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순응할 뿐이라고 한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비난 발언 한마디만 해도 순간에 자기 목숨이 떨어질 그런 위협이 닥쳐오니까 사람들이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sup>54</sup> 한 탈북자는 북한에 있을 때 공포심 때문에 남한 라디오를 감히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공포심 때문에 체제에 대하여 감히 일탈행동을 할 엄두를 못 낸다고 한다.

그 때 음력설에 어머니가 중국을 갔다 오시면서 녹음기를 들여오셨어요. 가져오셨는데 그 때 세관에서 녹음기 같은 거 TV 같은 거 들어올 때부터 고정시켜요. 고정 시키는데 그게 하나 어떻게 고정 안 된 게 있었어요. 어떤 거는 그 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단 들여오고 그 녹음기를 사용하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고정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바쁘니까 그냥 들여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관에 연락하기 전인데 음력설이었어요. 우리 라디오도 역시 못 들게 해요. 우리 라디오 들으면 약간만 돌리면 한국 라디오도

<sup>53</sup>- 마철중(협동농장 청년동맹 비서, 2003년 탈북) 증언.

<sup>54</sup>- 남희순(대학졸업 후 장사, 2004년 탈북) 증언.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라디오도 전혀 라디오 자체를 봉해버렸어요. 그 때 봉하기 전에 한 번 오빠랑 너무 듣고 싶다고 해서 한 번 들었는데 그 때 무서워서 어머니가 말리고 목소리만 그 한국 말투 있잖아요. 우리하고 틀린 그 말투만 들어도 떨리고 어머니 겁이 나서 그걸 누가 듣기라도 해서 발각되는 날에는 그 때는 감방 가는 줄 아니까 어머니가 무서워서 말리는데다가 한국 목소리만 들려도 떨려서 우리는 간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라디오 들으면 간첩 이런 인식 있거든요. 라디오 들으면 간첩이다. 간첩들만이 연락하기 위해서 라디오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듣다가 말았어요. 무서워서 못 들겠더라고요.<sup>55</sup>

북한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공포심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주민들이 공포심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한 예로 북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신경증이라는 증세이다. 북한주민의 공포감이 심인성 질병으로 발전한 것이 심장신경증이라는 질병이다. 북한의 결혼한 여성들의 80% 정도가 심장신경증<sup>56</sup>을 앓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sup>57</sup>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결혼한 여성들은 대부분이 심장질환(심장신경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가정 생활하는 여성들 중 심장병을 앓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사회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더하여 가정의 생활고 때문이라고 한다. 남성들은 심장신경증이 많지

<sup>55</sup> - 서옥명(대졸, 장사, 2003년 탈북) 증언.

<sup>56</sup> - 심장신경증은 환자 자신은 심장장애 증상을 호소하지만 심장에 특별한 기질적 변화가 없는 신경증의 하나이다. 정신적 타격과 부정적 정서(우울, 불안, 공포, 근심 등)로 오는 고등 신경활동의 장애, 뇌하수체, 신상선 등 내 분비선의 기능 장애와 신경 과민성 체질 또는 자율신경 긴장 등이 있는 사람과 폐경기 여성에게 잘 생기며 불면증, 피로 등이 유인이다.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심장부 통증, 현기증, 두통, 소화장애 등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쉽게 피로에 빠진다. 자각증상은 운동하면 없어지거나 적어진다. 때로는 정신을 잃거나 손발을 떤다. 심첨부에서 기능성 수축기 잡음이 들리고 폐동맥 판구에서 제2음이 커진다. 심전도 소전에서는 p와 t파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http://foodbes.netian.com/ddeum/ddeumb/4.34.html>> (검색일: 2007.8.24).

<sup>57</sup> - 김경혜(외화벌이 일꾼, 2002년 탈북) 및 김난애(품질관리원, 2002년 탈북) 증언.

않은데 여성들에게는 흔한 병이라고 한다. 한 여성 탈북자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내과 의사였는데, 내과질환 여성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우선 결혼 여부부터 물어본다고 한다. 결혼했으면 심장에 주목하여 진찰을 한다고 한다. 그만큼 결혼한 여성은 심장병이 많다는 것이다. 북한의 결혼한 여성의 심장신경증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 나. 책임전가의 통치술<sup>58</sup>

북한에서 북한주민들이 국가의 선전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안 믿어’를 외치며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이 거짓말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주민들조차도 북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통치기술에 대해서는 꿰뚫어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체제 실패의 책임은 모두 김일성과 김정일 외의 다른 사람의 잘못이거나 외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절대자, 무오류자인 김일성이 50년간 통치한 북한의 오늘이 어떤 모습인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마치 김일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듯이 김일성 사후 북한주민의 삶은 더욱 비참한 지경에 빠졌는데도<sup>59</sup> 북한주민들은 문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교육한 대로 외부의 적에게 돌리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책임전가의 통치술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sup>58</sup>- 이 절은 서재진,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평가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72~92에서 요약 전제한 것임.

<sup>59</sup>-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p. 158.

I
II
III
IV
V
VI
VII
VIII

## 외부의 적에게 책임전가: 반미주의

북한의 체제유지에 가장 중요한 소재는 문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수법이다. 일본, 미국, 남한이 오랫동안 외부의 적으로 활용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외부의 적은 이제 미국과 일본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1992년 핵문제 돌출 이후 미국이 집중적인 타겟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이 핵전쟁을 기도하고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을 폭격하여 재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우리 나라에는 집 한채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평양시만 놓고 보아도 남은 것은 두세 채의 건물뿐이었습니다.<sup>60</sup>

과거의 전쟁을 미국이 도발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기도하고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미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에서 커다란 엄중성과 위협성을 띄고 있다”<sup>61</sup>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공업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경제를 봉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난의 책임을 미국의 경제봉쇄에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식량난의 원인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대외적 환경의 변화로 규정했다. 외화가 없어서 식량을 사오지 못하는 현실의 원인에 대하여 외부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대

<sup>60</sup> - 김일성, “우루과이 3월26일운동 대표단과 한 담화, 1993년 2월 20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75.

<sup>61</sup> - 김일성,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고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자(반제, 친선, 평화를 위한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 1983년 7월 3일),” 『김일성 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20.

외적 상황이 과거의 경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한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외부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sup>62</sup>

### 자연재해로 책임전가

북한이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 중에서 또 다른 하나는 자연재해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을 수해 및 한해 등 자연재해로 원인을 전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3~4년동안 련이어 보기 드문 자연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 심지어 미국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사회주의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기적이라 하고 있습니다.<sup>63</sup>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대량의 아사자가 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책임은 제국주의의 경제봉쇄와 자연재해로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량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식량문제를 풀어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투쟁에 힘 있게 떨쳐 나설수 있습니다. 공장도 사람이 돌리고 생산과 건설도 사람이 하는 것만큼 우선 먹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더우기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이 경제봉쇄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하여 나라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먹는 문제부터 풀지 않고서는 새

<sup>62</sup> - 김정일,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17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293.

<sup>63</sup> - 김정일, 위의 글, p. 294.

I
II
III
IV
V
VI
VII
VIII

로운 진군을 다그쳐 나갈수 없습니다.<sup>64</sup>

### 하위간부에게 책임전가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 중의 하나는 문제의 책임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밑에 있는 간부들에게로 전가하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간부들은 행복의 행군, 지도자와 인민만 고난의 행군을 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고 한다.<sup>65</sup>

아래의 김일성 연설문에서 보듯이 홍수피해를 하위간부들이 나무심기를 게을리 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자신은 나무심기를 강조하였지만 아래 단위에서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큰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은 레년에 없던 큰 비가 내린데도 원인이 있지만 주요하게는 나무를 많이 찍어 내고 제때에 심지 않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당에서 나무심기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릴데 대하여 계속 강조하였으나 일군들이 당의 방침을 실속 있게 집행하지 않았으며 심은 나무도 관리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였지만 산림은 별로 늘어 나지 못하였습니다. 강하천정리와 포전정리, 도로정리와 도로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망계획과 당면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쌓는 식으로 강하천정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하겠는데 당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들에서 그런 사업을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더기비가 오면 강물이 넘쳐 나 도로와 부침땅이 못 쓰게 되고 있습니다.<sup>66</sup>

64-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9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0), p. 455.

65- 전시선(전 북한 주사약공장 노동자, 2002년 12월 탈북) 증언.

66- 김정일,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8월 11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204.

북한의 경제난을 정무원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자신은 당 사업과 군대 문제를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경제문제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 명분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문제의 책임을 하위 간부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주로 간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요령주의에 빠져있다고 질타하는 방식이다.

### 체제모순보다는 개인에게 책임전가

북한의 정치사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의 하나는 문제의 근원을 체제나 지도자보다는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조직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모든 문제는 지도자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중간급 이하 간부와 나 자신, 내가 속해있는 말단 조직에 있다고 판단하게끔 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것은 생활총화의 운영방식에 있다. 생활총화는 직장에서의 모든 생활과 생각 등에 대한 것은 물론 가정과 그 외의 시간, 생각과 활동에 이르기까지 자아비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국가, 사회, 조직, 집단, 간부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석과 분석 및 판단과 결론, 대안에 이르기까지 하향적 문제해결구조의 정착을 고착화시킨다. 이것은 다시 말해 수령, 정치, 제도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의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나 주변 및 말단 조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하향 지향방식의 해결법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생활총화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긴장과 갈등의 원인을 개인 주변에서 탐색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것을 자신과 주변에서 찾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북한

I
II
III
IV
V
VI
VII
VIII

정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을 개인차원으로 수렴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북한주민은 당 생활 총화에서 문제가 지적되면 자신한테서 우선적인 결함을 발견하도록 교육받는다. 체제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원인을 김일성과 체제에서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자신을 수양하도록 교육받는다.

생활총화에서는 문제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로, 위로 전가하는 것을 경계한다. 문제의 원인을 주관(즉, 개인)에서 찾고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애쓰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지도자 본인은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면서 일반주민들은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기독교에서 개인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로지 도와줄 구세주이며 기도의 대상인 것과 같이, 북한에서 김일성은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이 절대화,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김일성 개인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 기독교인들이 성경말씀에 의거하여 살듯이 북한주민들은 당 정책에 의거하여 살도록 요구받으며 체제에 동조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sup>67</sup>

### 내부의 적에게 책임전가

북한은 문제의 책임을 개인수준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내부의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대체로 ‘긍정적 모범 따라 배우기’ 방식으로 정치 사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

<sup>67</sup> - 김정일,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17일),” p. 293.

내부의 적을 항상 설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주요 시대적 전환기나 정치적 격동기마다 내부의 적을 설정하는 경향이 많았다. 내부의 적을 암해분자, 암해 책동문자, 반동분자라고 규정하곤 하였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기 체제의 위기 시에 내부의 적을 경계하는 언어들로서는 ‘사회주의 배신자’ 또는 ‘반혁명 책동’이라는 등의 가상의 적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여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우경기회주의사상의 부식작용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은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반혁명책동이다.<sup>68</sup>

북한은 내부의 적을 설정하고 그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계급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에서 계급투쟁은 지도자 우상화와 사회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북한주민의 정치사회화에서 계급투쟁은 사회적 긴장을 유발하고 정권의 정책과 요구들에 대한 당위성을 보장하며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국가적 충성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계급투쟁은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분할과 대립, 갈등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자연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방해한다. 이로써 개인들을 원자화시켜 정권에 반하여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sup>68</sup> -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 1993년 3월 1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48.

I
II
III
IV
V
VI
VII
VIII

## 6. 소결: 체제의 복원력 감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체제의 복원력은 현저히 쇠퇴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정치체제도 허물어지고 있다. 체제의 정당성은 대폭 실추되어 주민들이 체제의 통치이념이나 구호에 대하여 조롱하는 정도이다. 장사가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일상적 생계양식이 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은 더욱 침식되고 있다.

체제변화의 이유는 첫째, 경제난이다. 둘째, 경제난에 기인한 시장요소 확산이다. 셋째, 주민들의 사회주의에의 실망, 자본주의에 대한 희망이다. 넷째, 지도자에 대한 사회 심리적 이반의 확산이다. 체제의 기능의 마비와 정책의 실패는 정당성의 실패를 수반하게 되고 결국, 물리적 강제력으로 억누를 수밖에 없다. 억압이 약화되면 불만의 분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나 체제위기 상황이지만 아직 내구력의 일부가 남아있다.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가장 강력한 체제변화 억제요인의 하나는 반미주의이다. 반미주의가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로 건재하고 있다. 다른 이데올로기는 무실화되었지만 반미주의는 건재하다. 북한에서 반미주의의 설득력이 대단히 높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반소 민족주의를 외치던 1950년대에 북한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치렀다. 아직도 핵문제로 미국과 대결하고 있다. 미국의 반복정책이 북한을 살리고 있는 셈이다.

반미주의보다 더 강력한 체제유지 요인은 물리적 통제력이다. 물리적 통제력이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 강제력이 무실화되는 징후에도 불구하고 치안 유지, 국경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수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체제의 통치술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난 때문에 남한으로 탈북해 온 사람들마저 아직 김일성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난은 김일성, 김정일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 등 제국주의의 경제봉쇄, 자연재해, 하위간부들의 부정부패, 심지어 일반주민들의 게으름 탓으로 돌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계획경제로 복원되기는 불가능하고, 주민들도 그러한 체제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체제가 붕괴되지는 않아도 원래 체제로 되돌아가는 복원력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IV

## 새로운 체제 적응력의 생성





사회주의체제가 허물어지고 있는 폐허위에 새로운 원시 시장경제가 태동하고 있다. 새롭게 생성중인 체제는 1990년대 초 제2사회라고 일컬어지는 비공식 부문이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공식 부문의 일부는 공식화 양성화되었고, 양적으로는 공식부문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로 발전되고 있다.<sup>69</sup> 이것이 북한체제가 경제난속에서도 체제내구력이 유지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 1. 새로운 생산양식의 생성: 원시시장경제와 가내수공업

### 가. 원시상업주의의 생성

북한에서 장사 또는 상업행위가 성행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초기 일반주민들의 개인차원의 소규모 장사에서 시작하여 국가기관 차원의 외화벌이와 무역으로 발전되면서 대규모화, 공식화, 양성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더욱이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종합시장이 도입되고 공장기업소의 자력갱생 조치를 지시하면서 공장기업소 단위에서도 과거의 중앙정부에 생산품을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단계로 발전되었다.

개인단위의 장사가 성행하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는 소련붕괴 이후 북한의 경제가 급전직하로 추락하면서 부터이다. 배급이 중단되던 1993-1994년 무렵 북한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으로 대량아사의 고초를 겪고 나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장사에 나섰다. 정부도 국가도 믿을 수가 없으며 내가 벌어야 산다는 인식하에 장사가 전국으로, 전 주민으로 확산되었다.

<sup>69</sup>-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참조.

I
II
III
IV
V
VI
VII
VIII

두 번째, 장사가 전국에 확산된 계기의 하나는 북한의 1992년 11월의 무역관리제도의 개선이다.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에 따라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자 무역활성화를 위하여 '신무역체계'를 발표하여 무역관리 제도의 자율화, 분권화를 촉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외경제위원회 산하 무역기관(상사)을 통하지 않고서도 대외무역을 허용되었다. 이전에는 북한의 무역상사는 중앙정부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으며 대외무역의 주무부서인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의 통제하에 놓여있었다. 이를 계기로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뿐만 아니라 무역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sup>70</sup>

뿐만 아니라 이 조치에 의거 당, 정, 군의 국가기관과 군부대도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강성총회사(군), 룡산총회(인민보안성), 신흥총회사(보위부), 서경총회사(당)와 같은 무역회사들이 각 권력기관에 설치되었다. 특히 북한당국이 군부대에 내린 외화벌이 시행 조치는 선군정치라는 통치이념 하에서 다른 기관에 비하여 더 많은 특혜로 주어졌다. 북한에서 군 병력의 수가 많고 군량미는 부족하자 군부대에 자력갱생을 지시하고 그 수단인 하나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북한 외화벌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군부의 외화벌이 사업이 북한 사회 내에 상업주의의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군부의 외화벌이는 선군정치라는 구호와 더불어 군부에게 특권의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군부의 각급 부대에서 무역회사가 난립하고 번성하였다. 그 때문에 1996년 군단에서 인민무력부 외화벌이 회사들을 통합하여 매봉회사로 통합하였고, 2001년부터 강성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육해공군 무역회사를 모두 합쳐서 강성총회사로 통합한 것이

---

<sup>70</sup>- 이장규, “북한경제체제의 분권화에 관한 분석,” 『통일경제』, 1996년 6월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pp. 91~92.



다. 그렇지만 호위사령부 청운산 회사, 보위사령부 수정회사, 정찰국 연락소, 당 연락소 무역회사 등 권력기관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무역회사가 하나로 통합된 이후 군부대의 각급 기관이 다시 경제난에 허덕이게 되자 2002년경 사단·연대·대대급까지 ‘수산기지’(외화별이 회사)를 가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 지시에 근거하여 대대급까지 ‘수산기지’(외화별이)를 설치함에 따라 ‘00부대 수산기지’라는 외화별이 회사가 많이 생겨났다. 군부대가 수산기지를 꾸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고용하거나 민간인들에게 위탁하는 무역회사가 더욱 난립하게 되었다. 군부대가 직접 경영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인들에게 군부대의 외화별이 명판을 등록해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많다. 명판은 중국의 패호<sup>71</sup>와 유사하다. 민간인이 군부대의 명판을 부여받아서 군부대의 이름으로 외화별이를 하고 수입의 일부를 군부대에 납입하는 것이다. 외화별이 명판을 발행하는 기관으로는 군대가 제일 많다. 군부대는 군단에서 대대급까지 외화별이를 할 수 있고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2</sup>

군부 다음으로 많은 외화별이를 하는 곳이 중앙당 기관이다. 중앙당 주요 부서들이 외화별이회사를 다 가지고 있다. 봉화총국(39호실 산하), 낙원총국, 석영총국(중앙당 재정경리부), 선봉지도국, 모란지도국 등이 있다. 이 회사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중앙당이 운용된다. 전국에서 중앙당 회사의 지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다. 39호실은 몇 백 톤씩의

<sup>71</sup> 중국에서 패호(掛戶, Guahu)는 중국 정부의 사기업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향진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로서 사기업에 대한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한 것이다. 사기업을 공기업으로 위장한 것이다. 모든 향진기업은 패호를 사용한 것이다. 사기업이 지방정부와 지방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결탁한 것이다. 권력과 돈의 상호 공생, 결탁이다. 이로써 지방 간부는 향진기업의 통제자가 아니라 의존자로 되었다.

<sup>72</sup> 차호강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송이무역을 한다. 공장 기업소 돌아가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화벌이로 국가의 재정을 충당한다.

이처럼 군부대, 당기관, 정무원 기관, 무력부, 공장기업소가 모두 외화벌이에 종사하고 있다. 국가가 각 국가기관과 군부대, 공장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먹고 살라는 방침에 따라 산하에 외화벌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민간에게 위탁 또는 명판을 빌려주고 라이선스 임대료를 걷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군부대와 당이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군과 당의 명판을 받은 민간회사들이 일하기가 좋다.

각 국가기관과 군부대가 외화벌이 상품을 채취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군부가 가장 큰 규모의 외화벌이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외화를 벌고 있다. 기관간의 권한에 따라 더 좋은 외화벌이 상품에 더 많이 접근하기 위하여 갈등이 불가피하다. 가령, 남포 바다가 노른자위인데 이를 강성총회사가 장악하였다고 한다. 군은 남포 앞바다가 군사요충지이기 때문에 군대가 장악해야 한다고 김정일에게 허가를 요청하였으며 이것이 승인되어 군이 장악하게 된 것이다. 남포 앞바다에 대한 당의 논리도 있다. 즉, 중국과 무역거래에서 조개생산이 가장 기본적인 원천인데 당이 이것을 장악해야 당 자금을 낼 수 있다고 결재를 올리지만 군부의 힘과 논리에 밀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군과 당 사이에 외화벌이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있다.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도 외화벌이에서는 군 앞에서 힘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인민무력부 내의 외화벌이가 북한 외화벌이의 70%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외화벌이를 한다고 한다. 벌어들인 돈의 위력이 커지게 되자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군단 25부장의 권한이 참모장의 권한보다 세지기도 했었다고 한다.<sup>73</sup>

---

<sup>73</sup>- 김철용 증언.

모든 국가기관이 외화별이에 관심이 가장 크다고 한다. 기관 내에서도 외화별이 업무에 종사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위세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가령, 인민보안성 내에서도 ‘먹을 알이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sup>74</sup>

지방의 도당에서는 중앙당 무역회사 지사를 관리한다. 중앙당 39호실, 재정경리부 등의 무역회사들이 중앙에 총국이 있고, 지방에는 지사가 있다. 도당은 중앙당 무역회사들의 지사를 관리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별도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도당과 시당에서는 원천과가 있어서 군중외화별이를 시행한다. 보위부도 자체의 원천과를 운영한다.

강성총회사(군), 룡산총회(인민보안성), 신흥총회사(보위부) 서경총회사(당) 등의 국가기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화별이 무역회사와 그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비호를 이용한 외화별이 장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공공부문에 조사하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외화별이 사업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와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무역회사와 외화별이가 기승을 부리는데 기여한 또 하나의 요인은 북한 당국의 토지세 징수이다. 공장 기업소는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 충당을 위하여 토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는 공장기업소, 개인에 모두 토지세를 부과하였다. 낮은 집들도 앞마당까지 측량하여 토지세를 부과하였다. 공장을 비롯하여 땅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공장기업소와 개인들에게 2004-2005년부터 토지세를 부과하자 큰 부지를 가진 공장 기업소가 고민에 빠졌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생산은 안 되는데 큰 부지에 대한 토지세를 내야 하므로 기업소들은

<sup>74</sup>- 김철용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돈을 낼 수 있는 무역회사에 공장 부지를 임대하거나 팔게 된 것이다. 공장은 다 서고 주변 땅은 넓기 때문에 외화벌이에 팔 수 밖에 없어졌다. 이 땅들에 외화벌이 회사의 사무실, 창고를 지었다.<sup>75</sup>

수산기지 책임자는 자기 돈, 남의 돈을 동원하여 수산기지를 설립하는데 대부분이 군부대를 찾아가서 1년에 1만 달러의 소득세를 부대에 바치고 쾌호를 얻는다. 이런 수산기지가 수없이 많이 생겼다.

또 하나의 외화벌이와 장사를 조장하는 것은 각 지방당의 원천과이다. 도당에서 실시하는 군중외화벌이로서 주민들을 동원하여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다. 당기관은 군당, 구역당<sup>76</sup>에서는 자체로 외화벌이를 못하고 원천과를 통하여 군중외화를 한다. 당은 중앙당 부 단위에서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지방에 지사를 운용한다. 원천을 긁어모아 무역 회사를 통하여 외화벌이를 한다는 뜻이다. 보위부, 구역보위부까지 원천과가 있다. 도당의 원천과는 주민들에게 ‘송이전투’라는 명분으로 1인당 5kg 썩의 송이를 납품하는 과제를 주는데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북한 주민들이 맡은 못하고 제일 불만에 찬 것이 군중 외화벌이이다. 원래 군중외화는 국가 당국이 군중을 살리기 위하여 행하는 장사행위인데 수익금을 간부들이 대부분을 먹는다. 주민들에 대한 착취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쓰라는 것인데 수매 받아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1전도 없다고 불만이 많다.

군중외화는 또한 개인장사와 연계되어 있기도 한다. 군중외화벌이를 하는 주민들이 당국에 납부하는 것 외의 벌이는 개인의 몫으로 가진다. 가령, 핵실험을 하였던 길주군 풍계리의 경우를 보면 군중외화를 하고 남은 것은 개인장사를 통하여 돈을 벌기도 한다. 길주군 풍계리에 7층

<sup>75</sup> 차호강 증언.

<sup>76</sup> 북한의 당 조직으로서 도시지역은 시당-구역당-동사무소-동사무장, 동당비서; 농촌지역에서는 도당-군당-리당(리당비서)-작업반(세포비서)로 조직되어 있다.

국, 8총국에서 경비를 서는 부대의 가족들이 군중외화에 납품하고 남은 송이를 사적으로 팔기 위하여 몇 십리 길을 걸어와서 담장치기로 부대 울타리를 넘어와서 송이를 수집하는 무역회사의 외화벌이 일꾼에게 넘긴다고 한다.<sup>77</sup>

각 공장기업소에서도 외화벌이와 장사에 종사하고 있다. 각 공장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생필품을 생산하는 8·3작업반, 8·3직장, 8·3라인을 운영하고 이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8·3노동자가 생겨났다.

2006년까지 군부대 산하 강성총회사와 39호실 산하 봉화무역총회사 청진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외화벌이 사업을 하였던 한 탈북자의 경험을 통해 본 외화벌이 실태는 이렇다. 그는 일본에서 중고차를 들여와 남포항, 원산항, 흥남항, 청진항에서 국경연선으로 차를 운전해가서 중국인 개인 밀수업자에게 넘겼다. 여기서 북한의 무역회사는 군부대의 명판을 가진 합법적 회사인데 자동차를 사는 중국측 거래인은 밀수업자이다. 탈북자 본인은 차를 국경까지 몰고 가서 중국인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에서 공장가동은 거의 중단되어 생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소비하는 공산품은 대부분이 중국제이다. 쌀, 농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은 중국제이다. 평양에서 판매되는 약도 대부분 중국약이며, 한국약, UN약도 일부 있다. 북한에서는 쌀, 감자, 간장, 된장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기름, 식초, 옷 등도 100% 중국산이다. 기름을 짤 콩이 없어서 기름도 중국에서 온다. 땅 한 평이라도 주식인 옥수수를 심기 때문에 콩을 심을 여력이 없다. 야채, 무, 배추, 약초, 해산물도 북한산이다. 약초 해산물은 먹을 새 없이 중국에 내다판다. 장마당에 상품은 대

<sup>77</sup>- 차호강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부분이 중국산인데 중국산 공산품과 북한의 해산물, 약초 등을 교환한다.

북한에서 외화벌이가 제일 많은 곳이 청진이다. 1996년도에 너무 살기 힘들어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청진시가 장사를 가장 먼저 시작하였다. 함흥, 원산 등 다른 지역도 장사를 많이 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청진이 특히 심하다고 한다.<sup>78</sup>

청진의 외화벌이가 가장 발달한 이유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이다. 청진은 인구가 많고 국경도시로서 가장 큰 도시이다. 중국의 물자는 모두 청진에서 각 지역으로 도매한다. 라진에서 오는 상품도 청진에서 도매한다. 라진은 멀어서 도매업을 하기는 힘들다. 청진은 무산, 회령 등의 국경 도시와 내지의 중간지대이며 인구가 많아서 장사 유통이 잘 된다. 청진사람들이 중국 물건을 사놓으면 각 도의 사람들이 와서 사간다. 청진의 교통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들여온 트럭으로 각 지역으로 운송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무역도시는 평성이다. 평성은 신의주에서 들어오는 중국 상품을 도매하는 곳이다. 평성은 지리적으로 모든 철도가 교차하는 곳이다. 평양에 들어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이 평성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장의 발달을 촉진한 또 하나의 요인이 2002년 취해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이다. 이 조치는 기능마비 상태에 있는 공장·기업소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개별기업들이 무슨 수를 쓰든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주도록 하였던 조치인데 이 조치 이후 기업소별로, 기업의 종업원별로 자구책의 차원에서 생산과 유통부문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돈벌이에 나서게 된 것이다. 계획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

---

<sup>78</sup>- 차호강 증언.

장을 활용한 셈이다. 이를 위하여 도입한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을 현실화하여 시장논리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동시에 주민들에게 현물로 주던 노동보수를 화폐로 전환함으로써 화폐경제의 요소가 도입되었고, 개인과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제반 요소들이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계획경제의 공간이 시장경제의 공간에 압도당하고 있다. 사적 경제행위가 확산되고 계획경제 공간에도 파고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제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공식부문은 붕괴된 반면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통제기관이 시장과 유착·공모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당국의 통제정책이 오히려 통제대상과 결탁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의 양성화, 종합시장의 설치 이후 가내수공업이 성행하여 소상품생산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행위양식과 의식구조가 성행하고 있다.

## 나. 가내수공업 및 소상품 생산제

장사의 성행은 생산부문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종합시장과 암시장이라는 판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노리는 공급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국수, 두부, 콩나물, 술 등 간단한 음식에서부터 공장에서 생산하던 공산품까지 자기능력대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한다. 양초, 형광등, 백열전구, 기왓장, 차유리까지 집에서 만들어 낸다고 한다. 청진의 기업소가 개인기업소로 변화되고 있다. 함흥의 경우도 민수부문의 국가기업은 상당부분 가동이 중단되고

I
II
III
IV
V
VI
VII
VIII

개인 기업이 생겨난다고 한다. 가령, 함흥의 5대 공업 중의 하나로서 각종의 기계 설비를 생산해내는 기계공업도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런 공장기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은 공장의 설비를 집으로 옮겨서 합성탑, 증류탑, 국수기계, 연탄기계 등 부업에 필요한 각종 기계 설비를 가정에서 생산해낸다. 각 근로자는 자기가 배운 전공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과학원 함흥 분원의 경우 기초생활 화학제품으로서 가성소다(세탁세제 양잿물), 비누, 맛내기, 물감, 아스피린 등의 의약품 등을 합성하여 판매한다고 한다. 정교한 공정은 연구소에서 합성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합성한다고 한다. 모험적인 연구사는 히로뽕을 합성하기도 하는데 들키면 총살당한다고 한다. 함흥 제약공장 합성직장장이 2000년에 적발되어 처형당하였다고 한다. 국내에 없는 합성원료는 중국에서 들여와서 합성한다고 한다.

국영공장에서 종사하던 기술자, 노동자, 관리자 가릴 것 없이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생산능력, 행정능력을 활용하여 공장의 기계 부품들을 집으로 이전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IT 기술을 연구하고 강의하던 한 대학교수의 경우를 보면 북한 가내수공업의 실상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 이광홍은 자신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뭐가 돈이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고 한다. 따로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7·1조치이후 노임사전에 명시된 것을 보면 자신의 노임은 4,000원인데 1급대학 준박사 부교수이자, 2급교원이며 공급대상으로는 2호 대상이다. 그런데 쌀값은 250원/kg으로서 월급으로 쌀 20kg을 못사는 형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인과 자신이 장사해서 벌어야 살 수 있었다고 한다. IT 전공을 살려서 처음에는 자동변압기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한다. 자동변압기는 2-3만

원의 가격에 팔리는데 원가는 2만 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변압기 한 개당 1만 원까지 차액을 벌 수 있다. 한 달에 2개만 조립해도 2만 원정도 벌 수 있는 셈이다. 초기에는 장사가 잘 되었으나 자신이 만든 것을 모방하여 유사제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여 수지가 맞지 않아서 나중에는 자동차 도난방지기, 모기종 등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한다.<sup>79</sup>

이처럼 북한에서는 자기가 취득 가능한 자재로 각종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고 한다.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한다. 전자제품을 받아서 팔아 주는 매대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직접 상품을 판매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생산자와 판매자가 분업을 이루고 있다.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생필품이 품귀하자 개인들이 가정에서 수공업으로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 내다파는 가내수공업 경제가 이전의 사회주의 경제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내수공업의 성행은 북한경제의 생산양식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사회주의 생산양식은 유명무실하고 이를 대체하는 소상품생산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맹아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

소상품생산은 기업소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장과 기업소 차원의 소상품생산을 촉진하는 요인은 7·1조치 이후 독립채산제의 확대 실시와 종합시장제의 도입이다. 첫째, 독립채산제의 확대실시가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될 때는 기업의 자율성 강화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기업의 자율성 부여는 중앙정부가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장·기업소에 원자재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장·기업소 단위로 자력갱생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종업원을 먹여 살리라는 의미이다. 7·1조치에서 기업의 자율성 강화에 포함된 의미는 공식

<sup>79</sup>- 이광홍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경제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력업종 외의 상품이라도 뭐든지 가능한 것을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고 이 수익금으로 종업원의 노임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기업차원에서 시장을 겨냥한 상품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7·1조치가 소상품생산경제를 촉진시키는 측면은 종합시장을 신설하여 공산품의 판로를 보장한 것으로서 기업이나 개인차원에서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sup>80</sup> 종합시장이 도입된 이후 개인들의 부업생산 또는 개인수공업의 확대를 초래했다.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변화와 주민들의 요구에 힘입어 소상품 생산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계획경제 부문을 대체하고 있다. 『조선신보』가 보도한 바와 같이<sup>81</sup> “지난날에는 국가계획에 따라 ‘무현금유통’으로 공장·기업소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연료, 자재가 보장될 수 있었지만 7·1 조치 이후는 각 단위가 현금을 쥐고 자기 결심에 따라 확대재생산을 진행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는 국영기업소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의 방침에 의하면 “공장·기업소는 기본제품의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필수품을 만들어 그 중 30%를 국가납부를 하지 않은 ‘생산유지비’로 쓸 수 있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정해진 30%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생산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공장·기업소에 있어서는 국가계획의 초과달성이 시장거래의 매상고를 올리는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신보』는 “지금 평양사람들은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우리식’의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하고 있다”고 평가하

<sup>80</sup>-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현대북한의 연구와 남북관계』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2004. 9. 17), p. 264.

<sup>81</sup>- 『조선신보』, 2003년 12월 22일.



였다.

기업의 자율성 부여는 중앙정부가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장·기업소에 원자재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장·기업소 단위로 자력갱생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종업원을 먹여 살리라는 의미이다. 7·1조치에서 기업의 자율성 강화에 포함된 의미는 공식경제가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력업종 외의 상품이라도 뭐든지 가능한 것을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고 이 수익금으로 종업원의 노임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기업차원에서 시장을 겨냥한 상품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주력 업종 외의 상품생산은 과거에 8·3소비품 생산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8·3소비품은 그 기업에서 사용하고 남은 찌투리 원자재를 활용하여 생필품을 생산하여 국영상점에 국영가격으로 넘기도록 한 것인데 반하여, 7·1조치에서 추가된 내용은 생산품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며 시장에 시장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점이다.<sup>82</sup> 가령, 한 신발공장에서는 신발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가구를 짜서 이를 직원들의 노임으로 주도록 하었다고 한다. 어떤 기업은 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함흥 영해 수지공장의 경우를 보자. 이 공장은 북한 전국의 농업용 비닐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비닐은 생산하지 않고 부수입을 위하여 학생 가방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공장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sup>83</sup>

이처럼 공장 기업소가 계획부문의 대량생산이 아니라 계획외의 비공식 부문에서 소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출하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기업들은 이러한 상부의 지시를 기업의 부업 제도로 인식하

<sup>82</sup> - 강영래 증언.

<sup>83</sup> - 정창현(중앙일보 기자), (통일연구원에서의 간담회, 2003. 7. 10).

I
II
III
IV
V
VI
VII
VIII

여 기업소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업소 내 종업원의 개인단위 부업으로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즉, 기업소 내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업소 밖에서 부업을 하여 일정한 금액을 기업소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1990년대부터 음성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이다. 공장-기업소 마다 한 달에 800원씩 내고 기업소 밖에서 부업을 하는데 기업소 밖의 부업이란 곧 장사를 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소는 원자재 난과 전력난으로 공장가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역할은 곧 개인의 부업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2. 새로운 경제관리 시스템의 형성: 분절경제와 연고경제

### 가. 분절경제

원시상업주의, 가내수공업, 소상품생산제 등이 번성하게 된 것은 북한의 경제관리 시스템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계획경제가 붕괴되고 작동하지 않게 된 폐허의 자리에 새로운 자력갱생체제가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별, 공장기업소별, 가구별로 운영되는 새로운 경제는 계획경제와 분리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분리된 각 지역의 경제가 서로 연관되지 않고 운영된다는 점에서도 분절경제이다. 분절경제는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하에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자구적 원시시장경제이다.

이제 북한경제를 하나의 통합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볼 수 없다. 사회주의 성립의 필요조건은 국유화이며, 충분조건은 국가계획이다. 북한 경제는 국유화 경제이기는 하지만 계획경제는 아니다. 북한의 경제는 이제 국가계획에 의한 경제가 아니라 소규모의 각 경제단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절경제이다. 군경제, 당경제, 특수기관 경제에 이어서 나

머지는 각 지역별·단위별·가구별로 분절된 경제이다. 분절경제는 암시장과 가내수공업, 소상공 생산제, 원시적 자금자족식의 경제체제이다.

경제난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이 고갈되면서 각 지역과 공장기업소와 가구가 경제 관리의 실질적 주체로 부상한 셈이다. 여러 가지 경제주체가 혼합되어 섞여있으며 서로 상호보완적 연계관계가 없다는 것이 과거의 공식 사회주의 경제와의 차이점이다.

1980년대부터 점점 이러한 분절경제로 변질되었다. 북한의 경제가 분절의 경제로 해체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이후이다. 1993년 3차 7개년 계획 실패이후, 그리고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경제는 당국의 통제력이 상실하면서 각 권력기관은 권력을 이용하여, 각 지방은 생존을 위하여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단위별 자력갱생체제가 생성되고 있다. 분절경제의 형성은 고난의 행군시기 국가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게 되자 단위별 개인별 자력갱생 정책으로 전환하면서부터이다. 국가가 배급을 못주게 되자 “자기 능력껏 벌어서 먹고 국가에 손 내밀지 말고 의견 부리지 말라”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sup>84</sup>

북한은 이 무렵 생존의 책임을 국가에서 지방 공장 기업소, 개인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단위별 자율 경제를 허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공장기업소 지배인의 선거제도를 한 때 허용하였다. 국가에서 배급을 바라지 말고 생산, 확대 재생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방침이다. 공장가동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해도 좋고, 물물교환을 해도 좋고 수단껏 조달하여 공장을 돌리고 노동자를 먹여 살리라는 것이다. 이런 것을 7·1조치에 지시하였다. 그때부터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공장이 외자유치, 합작,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하여 합영합작, 임가공, 위탁가공 방식 등 형편에 맞게

<sup>84</sup>- 김일도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독자적인 생존체제, 또는 독립경영제로 전환하였다.

농촌에서는 뽕나무 심어 누에고치를 기르고, 실크를 수출하는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어촌에서는 물고기를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기도 한다. 과거에 국가에 공출하던 것을 이제는 외국에 수출하여 외화벌이를 하는 셈이다. 국가의 책임에서 지배인과 당 비서 책임으로 전가함에 따라 각 단위들은 지난 기간보다 창발적으로 더 노력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체제에 대하여 북한은 계획경제를 폐기하거나, 시장경제라고 표현하지도 않는다. 새로운 경제관리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 실리경제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본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과 각 공장 기업소의 독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력갱생적 분절경제는 경제난 속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게 불만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절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래의 확대 재생산이 없다는 점이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각자 가내수공업과 장사 등의 비공식 부문에서의 돈벌이에 전념하게 됨에 따라, 젊은 세대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학기술, 사회과학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서 이러한 사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7년 11월 30일 15년만에 ‘조선노동당 지식인대회’를 열고 “과학, 농업, 사회과학, 문학, 교육, 보건, 체육 등 각 부문에서 지식인들이 선도자적 역할과 헌신적 노력을 벌려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나. 폐쇄적 지역자립체제

지방에서 우세한 분절경제의 한 유형은 지역별 분절경제이다. 지역별

분절경제는 과거 북한이 전쟁시에 중앙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전쟁으로 보급로가 차단되더라도 각 지역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자립체제가 일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과거의 지역자립체제는 시·군에서 공장지대와 농업지대를 포함하여 공업생필품과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토지에 의존한 생존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공식체제로 추구한 지역자립체제와는 차이가 있다.<sup>85</sup>

북한은 전쟁시에 중앙정부 또는 외부의 지원 없이 지역 행정구역 내에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경제운용방식을 추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정책이 다음의 인용문에서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군을 단위로 하여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 문제를 모든 지역에서 다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토대가 마련되게 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원수들이 그 어떤 압력과 경제봉쇄 책동에도 끄떡없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고 있다.<sup>86</sup>

북한이 시·군을 단위로 지역자립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행정구역별 산업구성에 있어서 각 시·군이 농업과 공업 지역을 함께 포함하는 방식의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다. 각 시·군은 자력갱생 원칙으로 농업과 지방공업을 병행 발전시켜 자급자족적 체제를 갖추도록 조직되어 있다. 가령, 평양과 남

<sup>85</sup>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참조.

<sup>86</sup> 강영원,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 담보,” 『경제연구』, 1994년 제3호 (1994), p. 18.

I
II
III
IV
V
VI
VII
VIII

포 및 개성의 직할시는 도시부문의 구역과 농업부문의 군으로, 함흥, 청진, 신의주 등 광역시는 구역으로 구성되는데 구역은 다시 도시부문의 동, 농업부문의 리, 공업부문의 노동자구로 나누어진다. 일반시는 행정 및 공업 부문을 담당하는 동과 농업부문을 담당하는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은 농업을 담당하는 리와 공업을 담당하는 노동자구로 구성되어 있다.<sup>87</sup>

둘째, 지역정부는 예산 면에서 자립하도록 하였다. 북한은 1973년부터 지방예산제를 도입하여 도 단위 이하의 지방주권 기관들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도 및 시·군 각 지방은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로 벌어서 지방예산을 충당하고 남은 것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sup>88</sup> 북한은 중앙의 부담을 경감하며 중앙의 지원 없이 지역 차원의 자립체제를 갖추고 있다. 각 시·군은 지방예산에 소속된 기관 및 기업소, 협동농장, 협동조합, 상점으로부터 수입을 확보하여 국가의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셋째, 행정 조직면에서 북한은 지방주권기관이 경제와 생산활동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특히 경제난이 심화되던 1998년 9월 헌법개정에서 지방인민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를 지방인민위원회로 통합하였다. 단일화된 지방 주권기관이 행정과 경제를 장악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자립체제 구축을 위한 위의 세 가지 방침 중에서 한 지역 내에 농업과 공업지대를 함께 포함한 것은 공업이 붕괴되었을 경우 토지에 의존하여 최소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북한의 지역자립체제의 목적이 ‘최소주의 생존전략’이었는데,<sup>89</sup> 이 최소주의 생존전

<sup>87</sup>-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pp. 56~57.

<sup>88</sup>- 김병로, 위의 책, p. 41.

<sup>89</sup>- 김병로, 위의 책, p. 107.

략의 의미도 지금과 같은 북한주민생활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공업이 가동되고 농업도 가동되는 상황의 최소주의를 의미한다. 북한이 전 지역에 골고루 분산한 공업발전 계획, 각 군이 생필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한 지역자립전략은 원유와 에너지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지역자립체제가 경제난 속에서 자력갱생에 도움이 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업의 가동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역자립체제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난의 상황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대량아사 사태는 바로 지역자립체제가 기능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행정단위가 농업부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기업소가 가동을 멈추어도 노동자들을 농업 부문에 투입하여 최소 생존을 할 수 있게 한 점은 있다. 함경남도 신흥 노동자구에서 교원을 했던 한 탈북자의 경우, 신흥 노동자구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부전 지역의 감자농사 때문에 살았다고 한다. 감자 썩은 것, 감자 껍질까지 다 먹었다고 한다.<sup>90</sup>

지역자립체제의 일환으로 공장가동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각 지역의 최고 권한을 가진 군당책임비서들이 토지를 장악하여 자력갱생의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 가동이 대부분 중단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땅이다. 땅은 필수적인 생산수단이며 좋은 땅, 나쁜 땅 가릴 것 없이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군당에서는 땅을 각 공장기업소나 개인에게 불하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다.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당, 시당에서 직권으로 개인이나 공장기업소에 불하 해준다. 군당은 군대가 차지하는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관리·처분할 수

<sup>90</sup>- 이시선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있다. 군당의 엄청난 권한이다. 지방 땅을 팔지는 못하지만 관리는 가능하다.<sup>91</sup>

또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채취하는 것도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탈북자들은 “산에 있으면 산 떨어 먹고, 바다에 있으며 바다 떨어 먹고, 땅에 있으면 땅 떨어 먹고 산다”는 말로 표현한다. 군내에 탄광이 있다면 광산의 석탄 채굴권을 지역 단위가 가지게 된다. 지방의 기업소를 조직하여 채굴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생산관리와 분배 관리를 군의 권한으로 처리가능하다. 어장, 버섯, 광산, 토지 등을 가지고 민간에 불하하거나 외화벌이도 한다. 땅이 국유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북한의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지방 당에서 통제할 수 있다. 당비서가 자기 땅은 아니지만 자기 맘대로 관리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의 당과 행정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를 불하하여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장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계는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토산물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공장도 가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군당이 나 시당에서 토지를 불하받아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종업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경제난 시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수단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이 붕괴된 북한에서 지방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 전국단위의 시스템은 붕괴되었지만 소규모, 영세, 수공업형태의 경제행위는 가능해진다. 국가적으로는 경제체제가 붕괴되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살 수 있었다고 한다.<sup>92</sup>

공장 기업소도 하나의 분절경제의 주체이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생산 계획에 의하여 원자재와 예산을 대주고 생산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

<sup>91</sup>- 김일도 증언.

<sup>92</sup>- 위의 증언.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그것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지방당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공장 지배인으로 발탁하여 개인의 자금과 자재 동원능력으로 돈벌이해서 종업원에게 배급 주는 체제로 운용한다. 공장 지배인 선발은 능력위주로 이루어진다. 과거에 출신성분으로 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3-4년 전에 농촌에서 선거제도까지 시범 실시한 바 있으나 흐지부지 되었다.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공장의 종업원들을 먹여 살리게 한다. 공장기업소가 돈을 벌어서 한끼 200g, 하루 600g, 한 달에 18kg을 공장기업소에서 배급을 주는 기업도 있다.

군당은 공장기업소에도 땅을 떼어주고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 살도록 했다. 무산은 중국에서 내다봐도 나무하나 없이 산을 모조리 개간하였다. 개인밭 또는 공장기업소 땅으로 개간하여 농사짓기 때문이다.

#### 다. 연고경제(crony economy)

분절경제는 또 한편 연고경제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연고경제는 북한 주민들이 끼리끼리 경제, 제 각각 경제라고 칭하기도 하는 소규모 자력갱생 경제이다. 연고경제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지만 지역별 연고가 가장 중요하다. 지역별로 지역 내에서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이 추세이다. 가령, 리보위원도 배급이 없으니 리에서 얻어 먹어야 산다. 보위원도 리 주민들과 유무상통해야 산다. 반동이 아닌 바에야 말 한마디 잘못하였다고 하여도 눈감아준다. 그런데 큰 문제로 사건화 되어 다 알게 되었을 경우에만 상부에 보고한다. 위에서도 크게 제기되는 것이 없으면 그대로 내버려 둔다. 굶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간부들은 어떻게 우리 군끼리 살아가겠는가를 궁리한다. 인민위원장, 군보위부장, 군안전부장 등이 토의하여 군이 자립하여 살

I
II
III
IV
V
VI
VII
VIII

아나갈 방법을 숙의한다. 지역단위에서 넷만 합심하면 상부를 기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특정한 군은 새로운 농토를 얼마 개간하였지만 위에는 보고하지 않고 생산되는 알곡을 자기끼리 자기단위에서 분배한다. 또 군에서 어떤 개인이 탈북할 경우 사건화 된 것이 아니면 행불이라고 보고한다. 또 뼈라를 발견하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덮어 버리며, 우리 군은 안전하며 별일 없다고 보고하는 식이다. 별일 있다고 보고하면 검열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에 좋게 대하면서 명절에 선물도 올리고 한편으로는 죽는 소리를 하고 아래에서는 자기 살 궁리를 한다. 그러면 인민에게서 지지 받는다. 인민이 적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화기애애하게 끼리끼리 살아간다. 이것이 중간간부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처럼 각 기관, 지방 단위의 경제는 계획없이 집단별, 단위별, 지역별, 가계별 자구책의 공생적 경제행위이다. 지방별, 단위별로 당, 안전부, 보위부, 인민이 단위별 자력갱생 체제를 구축하여 공생하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덜 받으면서 각 부문이 봉건경제 같은 자립적 폐쇄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부문이 계획하에 들어오라고 해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sup>93</sup>

### 연고경제의 정치적 의미: 지역본위주의

연고경제의 의미는 각 지역과 경제단위가 분절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분절된 경제단위는 독자적 자력갱생체제를 형성하며 정치적 자율성도 가지게 된다. 중앙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난 지역이 자율적인 조직과 권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주민들은 아래부터의 자생적 생존체제

---

<sup>93</sup>-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참조.

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식량난에 대한 적응력의 체득을 의미한다. 그 결과 중앙-지방관계의 이완, 지방의 독자적인 생존 방식 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권력이 지역과 주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정치사상적 통제를 지속하므로 각 지역, 단위, 개인별로 생계를 위한 독립적 행위와 의식이 성장한 것이다.

과거의 중앙정부가 완벽히 통제하던 시기와는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 옛날에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복종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중앙과 분리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층 말단까지 통제가 마비되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보위원도 중앙에서 제대로 배급과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 현지에서 자기 담당 구역에서 인민들과 공생하고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적절한 선에서 상호 공생하게 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이러한 관계변화는 지방에서 새로운 권력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권력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Kaplan의 북한변화 7단계 중 3단계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방영지’라고 불렀던 지방의 자력갱생체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 각급 당 책임비서는 해당지역에서 인사권, 처벌권, 통제권, 평정권 등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중앙당으로부터 지방당의 자율권이 높아지고 있다. 끼리끼리의 폐쇄적 자율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지방의 공장이나 농장의 초급당에서는 중앙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다양하게 대응할 만큼 각 단위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 지방권력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있는 셈이다.<sup>94</sup>

또한 집단이기주의, 기관본위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중앙당은 기능이

<sup>94</sup> - “북한체제의 ‘아래로부터의’ 존속기반과 유지가능성: 통치이념 효과와 주민생활을 중심으로,” (국방연구원 자료).

I
II
III
IV
V
VI
VII
VIII

정지되어 있어도 지방당은 자율성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중앙당으로부터 지시가 줄어들고, 일일이 상부에 보고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중앙당에 보고하던 시대와는 달라졌다. 생산성도 지방에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본위주의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연고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와 상관없이 독자적 폐쇄적 생존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위에서 바라지 않고 강냉이라도 배불리 먹고 콩으로 콩나물 만들고 두부도 만들어서 먹는 등 끼리끼리 생존하는 조건하에서 최소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위에서 간섭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의식이다. 그 대신 고달프고 불안하다. 왜냐하면 잘되는 곳은 다행이지만 잘 안 되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제2사회, 비공식 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폐쇄적 생존체제는 이익단체화 하면서 기득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존의 생존체제에 간섭이나 통제가 들어오면 저항하게 된다. 지방단위에서 간부와 백성(일반주민)간의 통합이 잘된다. 시당, 군당책임비서가 주도하여 끼리끼리 경제를 운영하고, 간부가 주민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시보위부, 도보위부까지는 배급을 공급하지만 군보위부, 리보위원은 군을 믿고 산다. 행정단위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끼리끼리 결합되어 있는 셈이다.

단위별 생존체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이해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가령, 보위원은 초상화 검열 나왔는데 초상화 잘 고쳐놓으라는 등 검열계획을 미리 이야기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끼리끼리 경제체제가 형성됨으로써 반대세력의 집합으로서의 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고 있다. 아직 정당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지만

보위부, 안전부, 당,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형성되고 있다.<sup>95</sup>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중앙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요인이 잠복될 수 있다. 지역의 경제활동이 중앙정부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으로 방해를 받게 되면 주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영지는 지역적으로 매우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미 이루어진 기득권 단위들이 그 단위에 의해서 폐쇄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그 지역에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평양에서 살던 사람이 평양에서 나와서 함흥과 같은 타 도시에 가서 살수가 없다고 한다.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 가서는 못산다고 한다. 김일성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경제가 파탄된 이후 더욱 층층이 사는 것을 가속화시켰다. 제2사회, 지하사회를 구축하여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평양과 황해도는 중앙권력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함경도 신의주 등 국경지역에서는 중앙권력의 통제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주민들이 독자적인 생존체제를 구축하고 생존하고 있다.

### 3. 새로운 가치관 형성

가치관이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옛날에는 잘살기 위해서는 출신성분과 사상이 중요하였다. 그것이 사회적 선발의 기준이기도 하였다. 출신성분과 사상이 좋은 사람은 당원으로 되고 당원이 되면 간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출신성분이나 당원보다는 돈 많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돈만 있으면 입당할 수 있고 공장의 지배인도 될 수 있다는

<sup>95</sup>- 김일도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것이다.<sup>96</sup>

가치관의 기준이 달라지고 충실성의 척도가 달라졌다. 충실성의 기준은 사상이 아니라 돈이다. 이제는 돈 많은 사람은 비행을 많이 저지른 자들인데 그들이 돈 벌어서 국가에 지원금을 많이 내면 충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이 그렇게 평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sup>97</sup>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돈을 중시하는 인식은 장사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이어진다. 생활비로는 못산다는 것과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인식이 깊이 배었다. 이러한 인식변화의 배경은 북한이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공급해주는 것은 없고 자기가 벌어서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를 믿으면 굶어죽게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국가에 대해서는 ‘안 믿어’가 입에 배어 있다. 국가를 믿었다가는 고난의 행군시기처럼 굶어 죽는다고 인식한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은 사실이 북한주민들의 인식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내가 벌어야 산다는 인식하에 제대로 자력갱생하는 사람은 제대로 잘 산다고 한다. 자력갱생하는 사람은 60%가 넘는다고 한다. 북한에서 못사는 사람은 머리 굴리기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기간보다 7-8년 사이 북한주민들의 살아가는 능력이 많이 개선되었다. 굶어죽는다는 것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가구별로 생존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그 결과 대량 아사 사태가 없어졌다. 개별적 가정, 기업소들이 자체로 외화벌이를 하여 확대 재생산도 한다. 그곳에서 나온 돈으로 노임, 식량배급을 실시한다. 국가에 매달리

---

<sup>96</sup>- 이시선 증언.

<sup>97</sup>- 이철순 증언.

지 않는다. 점차적으로 공장기업소 단위로 자립, 독립하는 경향이다. 국가의 통제와 간섭도 감소하고 있다.<sup>98</sup>

돈 중시 가치관이 낳은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양식의 변화는 상업주의적 거래의 행위양식이다. 과거에는 사회주의 공동체의 상호부조, 집단주의적 공동생활이 가장 중요한 행위양식이었으나 이제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상황에서 돈을 안 받고 자기시간을 소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싹트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공짜라는 것이 없어졌다. 모든 행위에 비용과 가격을 따지게 되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공짜였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공짜가 없어졌다. 자동차 타는 것도 옛날에는 아는 처지에 공짜로 태워주곤 했는데 이제는 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이다. 이제는 자동차 타는 경우에도 공짜란 전혀 없고 모두 영업하는 차에 돈을 내고 탄다. 북한에서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택시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택시업을 하는 차를 ‘서비차’(서비스차)라고 한다. 서비차의 정류장이 생겼고, 새벽부터 사람이 빼곡히 기다렸다가 타는 등 주민의 의식과 행동이 완전한 자본주의라고 한다.<sup>99</sup>

개인의 상업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북한에서 ‘실리사회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셈이다. 철저히 돈을 받고 몸을 움직이는 시장적 가치로 태도가 변화되었다. 이제 북한사람은 옛날의 북한사람이 아니다. 옛날에는 보상없이 무상으로, 정치적으로 동원되었는데 고난의 행군이후 장사를 경험하고부터는 아이 늙은이까지 공짜 봉사를 거부하고 장사에 전념한다. 정부에는 이제 관심이 없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관심이 없다고 한다. 아래는 사상의식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한다. 정부는 아직 이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한다. 이제는

<sup>98</sup>- 이철순 증언.

<sup>99</sup>- 이시선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사람들의 생각이 다시 사회주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돈을 벌어야 산다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정치와는 상관없이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확고히 변화한 것이다.<sup>100</sup>

확고한 자력생존 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정부는 생각 밖이고 내가 벌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딱 차있다. 또한 간부에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믿지 않는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자기 살림은 자기가 지켜야 하며, 자기 가족은 자기 가족 성원들이 돈 벌어서 산다는 확고한 사회적 인식이 정립되었다. 당과 정부를 믿는 현상이 약화되고 자체로 먹고사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 능력이 고갈되면서 국가에서는 자력갱생이라는 구호하에 개인별, 단위별, 지역별로 자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가의 정책과 실제 배급의 정지가 가장 중요한 현실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의식이 깨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고난의 행군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고난의 행군을 넘기면 '낙원의 행군'이 온다는 당국의 선전을 믿었으나 사실은 낙원의 행군도 강성대국도 오지 않았다.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이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셋째,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요인은 외부 정보의 유입이다.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CD, 미국영화를 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 장사가 성행하면서 중국에서 한국과 미국의 CD가 대량으로 들어왔다. 고난의 행군을 안 했으면 아직도 까막눈으로 지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탈북자도 있다. 고난의 행군으로 말미암아 정치

---

<sup>100</sup>- 차호강 증언.

적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고난의 행군부터 개인회사가 움직이고 밀수가 번성하면서 CD, 녹화물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평양은 통제가 심하지만 지방은 집집마다 다 본다고 한다. CD 재생기가 없는 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돈 7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한다. 전기가 없고, 채널이 하나뿐인데다가 정치교육만 하니 TV는 보지 않으며, 전기가 없으니 배터리 연결해서 모두 녹화기와 CD를 본다고 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CD를 통하여 중국영화, 한국영화, 미국영화, 음란 비디오 등을 본다고 한다. 한국영화를 보기는 어렵지만 몰래 본다고 한다. 이러한 외부정보 매체를 통하여 다른 나라는 이렇게 잘사는데 우리는 왜 이리 못사는지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전에는 시장도 모르고 외부정세도 몰랐지만 지금은 외국에 많이 나간다고 한다. 러시아 별목, 중국의 사사여행 등이 많다고 한다.<sup>101</sup>

#### 4. 새로운 질서의 형성: 제1사회에서 독립된 제2사회의 질서

앞에서 살펴본 원시시장경제와 가내수공업의 성행과 같은 생산양식의 변화, 분절경제와 연고경제와 같은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의 변화는 북한주민들의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변화를 낳았고 이는 또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고 있다. 계획경제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체제가 생성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사회질서도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사회가 공식 사회 또는 제1사회라고 본다면, 새롭게 형성되는 제2사회는 과거에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발견된 제2사회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제2사회란 제1사회에 대한 공격은 무모하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sup>101</sup>- 이철순, 이시선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제1사회와 별도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체코의 Vaclav Benda에 의해 1978년에 간행된 *The Parallel Polis*라는 책에서 시민사회 운동이란 기존의 체제밖에 또 하나의 사회(parallel society)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회’란 공식적 사회의 바깥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였다. 지하신문 사미즈다트의 제작 및 돌려 읽기, 암시장 등 제2경제권에서만 물건사기, 야학 등의 비공식 채널에서 공부하기, 교회를 지지하는 등의 자율적 행위를 하여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제2사회(second society)를 발전시키는 것이다.<sup>102</sup> 국가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 아니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또 하나의 사회(제2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제2사회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 새로운 규범, 새로운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급진적,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 방식으로 인민대중의 심성(mentality)에 대한 지적 도덕적 교체를 추구하는 것이다.<sup>103</sup> 신진화주의(new evolutionism), 반정치(antipolitics), 병행사회(parallel society), 대안적 사회(alternative society) 등은 모두 제2사회(second society)라는 개념의 다른 표현들이다.

북한에서도 제2사회는 제1사회와 병존하는 측면이 많다. 제1사회에 대한 도전은 가혹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제1사회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는다는 알리바이만 만들어 놓고, 각자 제2사회의 경제행위에 열중한다. 간부들도 ‘장군님에 대한 만세소리’를 높이 내는 척하고 제2사회에서 돈벌이에 바쁘게 지낸다.

<sup>102</sup>- H. Goreden Skilling, *Samizdat and Independent Socie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9).

<sup>103</sup>- Marcia Weigle and Jim Butterfield, “Civil Society in Reforming Communist Regimes : The Logic of Emergency,” *Comparative Politics* (October 1992), p. 4 참조.

간부든 일반주민이든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을 알리바이 장치를 만들어 놓고는 각자 장사와 개인 실리주의에 탐닉한다. 북한주민들의 말로 각자 “제 볼 장을 본다”라고 한다. 계획경제하에서처럼 당국이 일일이 작업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각자 자율적 업종에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구가 외부에서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북한주민들은 각자의 새로운 생업의 터전에서 스스로 제 살 도리를 한다.

‘제 볼 장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적업무의 밖에서 비공식 영역에서 장사·돈벌이에 몰두한다는 의미이다. 공적 세계에서는 배급도 없고 수입도 없기 때문에 일반주민이든 간부든 각기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는 방도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국가는 별이가 없고 빈곤하기 때문에 자기가 밖에서 벌지 않으면 굶어죽게 되니 각 개인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겠는가를 궁리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국가에 반발해서 처벌받는 모험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를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 살길을 찾아서 간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이 제 볼 장을 보는 이유는 제 볼 장을 안보면 못살기 때문이다. 제 볼 장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김정일 측근 몇 명뿐이라고 한다. 각기 제 볼 장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집단적으로 행동하던 시기와 대비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제 볼 장을 본다”는 말은 공식 체제 밖의 제2사회가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가 어떻게 되든, 직장은 어떻게 되든 각기 제 볼 장을 본다. 국가에서 배급을 주던, 안주던 사회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자기 돈벌이를 위하여 움직인다.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공적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 부문에서 음성적

I
II
III
IV
V
VI
VII
VIII

으로 돈벌이에 열중하는 것이다.

둘째, 제 볼 장을 본다는 말의 의미의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일탈하는 행위를 한다는 뜻이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비사회주의행위에 가담한 것이고,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하여 통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통제보다는 통제를 빙자한 뇌물 받기에 관심이 더 많다. 장사하는 사람과 통제하는 사람은 각기 자기 입장에서 제 볼 장을 보는 것이다. 통제하는 측에게는 잡으면 뇌물 들어오고 뇌물이 들어오면 눈을 감는다. 완전 반국가적 범죄 아니면 돈으로 다 된다고 한다. 보위요원의 95-98%는 인이 배겼다고 한다. 처벌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가 약을 안써서 그래. 고가 약을 써야지”라고 표현이 노골적이다. 고인다는 말 대신 고가 약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제하는 사람과 통제당하는 사람 각 개인은 자기 삶을 부지런히 성실히 산다. 그러나 국가에 충실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각기 제 볼 장을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체제의 새로운 통합방식이다. 모르는 사람은 선군정치가 승리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사회가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지만 실제 사회는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김정일을 받드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김정일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다.<sup>104</sup>

셋째, 제 볼 장을 본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개인주의적 행위양식을 의미한다. 국가의 계획과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한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로부터 해방된 자율의 선택과 자율의 행동이다. 주체사상의 주장대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제 볼 장을 본다. 지구가 누가 돌리지 않아도 돌아가는 것처럼 각기 스스로 제 볼 장을 본다.

---

<sup>104</sup> - 이철순 증언.

넷째, 표리부동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에게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자기 살 도리를 강구한다. 정치적으로 표리부동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자기 삶은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적인 일은 김정일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체제를 지켜보아야 지금처럼 가는 것인데 지켜서 뭐하느냐고 생각한다. 김정일 외에는 다 돌아섰다는 의미이다. 계층별로 폭압기구에 종사하던 사람들, 권력자들, 출세주의자들이 맹목적으로 김정일에 순응했지만 이제는 가정, 개인을 위해서 주민들과 공존하면서 출로를 찾고 있다. 김정일 체제가 오래 간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생존하는 한 돈을 많이 저축하여 체제가 변화해도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골몰할 뿐이지 과거와 같은 절대적 맹목적 충성심이 없다고 한다.

### 일반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완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대응양식도 변화하고 있다. 식량배급도 제대로 주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통제만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정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묵인하는 등 처벌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과거에는 보위부에 끌려가는 것이 아주 단순했다. 말반동이 주된 정치범 유형이었는데 말 반동은 주민불만을 이용하여 당과 정부에 반감을 고취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말 반동으로 끌려가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욕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보위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2001년 11월부터 정치범에 대한 방침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정

I
II
III
IV
V
VI
VII
VIII

치범에 대한 국가보위부의 규정으로서 보위부 사업의 목표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 용위”이며, 김정일에 대한 반대를 선동하는 행위가 첫째 통제 대상이라고 한다. 김정일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용서 안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통제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라고 한다.

우선 강제추방이 없어졌다고 한다. 도시에서 자강도 산골, 요덕 등으로 추방하는 것이 중단되었고 한다. 그중에서 정치범 관리소 4개(선천 11호, 북창 19호, 함흥 21호, XX 00호)가 없어졌다고 한다.

형법도 달라졌다. 남한 방송을 듣는 경우 말을 옮기거나 행동으로 하지 않는 한은 비판서로 끝난다고 한다. 과거에는 외국방송 듣는 것을 사대주의 굴종이라고 처벌하였으나 남한 방송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처벌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외부 방송에 대한 처벌의 여부는 출신성분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성분과 상관없이 처벌하였지만 이제는 성분에 따라 선별 처벌한다는 것이다.

가족에 대해서도 관대해지고 있다고 한다. 가족연좌제가 약화되고 있으며, 본인 위주로 처벌한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치범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말 보다는 행동으로 초점을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범의 경우에도 주모자와 피 주모자를 구분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독재 국가인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병어리들이 사는 나라라고 평가된다고 한다. 쌍소리 하면 안 잡아가도 색깔 있는 소리 하면 잡아가며, 즉 안달새(똑똑한 소리 하는 사람)를 잡아간다고 한다.<sup>105</sup>

당간부에 대한 비판은 이제 은어가 될 정도로 처벌이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 가령, 함경남도 도당책임비서가 이태연인데 그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욕한다고 한다. “도당책임비서 배태기가 똥똥해서 인민들에게 불(연료) 안주어도 태연, 쌀 안주어도 태연, 물 안주어도 태연하다”고 농담 삼아 말한다고 한다.<sup>106</sup>

<sup>105</sup> - 김숙영(평남 남포시 보위부 자료실 지도원, 2002년 10월 탈북) 증언.

<sup>106</sup> - 이광홍 증언.

옛날에는 생활총화에 빠지면 큰일날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다. 고난의 행군이후 다소 완화되었다고 한다. 즉, “과거에는 때리던 것을 얼리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sup>107</sup>

또한 과거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도 차별정책을 완화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현행을 보라”고 방침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과거의 토대로 많이 따졌는데 이제는 당에서 현행을 보라고 강조한 까닭은 과거의 성분으로 사람을 외면하면 당에서 떨어져나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sup>108</sup>

### 불가역적 변화

북한에서 최근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통제 정책들은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이 통제를 통한 뇌물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탈자와 통제자가 공모하는 형태이다. 일탈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일탈을 통해서 이익을 얻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탈과 통제가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 장사를 위하여 기차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이를 노리고 각양각색의 통제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장사꾼들의 돈을 갈취한다고 한다. 기차만 타면 안전원은 벼락부자가 된다는 소문이 돌자 각 통제기관에서 기차 여객 통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기차를 타는 경우, 승차안전원, 철도규찰대, 역전안전부, 711 순찰대 등의 검문과 통제를 거친다고 한다.

기차역에서는 철도국에서 운영하는 철도규찰대가 차표검사, 짐 검사를 하는데 차표 사기가 매우 힘들어서 뒷돈을 주어야 된다고 한다. 기차에 승객이 타면 승차안전부가 통행증 검열, 짐 검열을 담당하고 있는데

<sup>107</sup> - 천호명(전 사로청 부장, 2004년 탈북) 증언.

<sup>108</sup> - 위의 증언.

I
II
III
IV
V
VI
VII
VIII

그들이 많은 돈을 벌자 안전원만 아니라 철도원도 먹고 살아야 한다면서 철도규찰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차에서 내린 후에는 역전 안전부를 거치는데 이들이 다시 통행증 검열, 물건 검열을 한다고 한다. 군 단위에서는 711 순찰대를 운영하면서 또다시 통행증과 짐 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기차 타는 승객에 대하여 3중, 4중의 통제를 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기차여행 중에 운 좋으면 한번 걸리고, 안 좋으면 여러 번 걸린다고 한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길 다니면서 간부들 장사시킨다고 말한다고 한다. 통제의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고 한다. “너 왜 장사하니”, “너 왜 짐이 크니”, “너 왜 이것 파냐” 등 모든 것이 통제대상이라고 한다.<sup>109</sup> 이처럼 통제가 2중 3중, 3중 4중으로 생겨나는 이유는 간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 검열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뇌물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에서 장사와 시장요소가 이 만큼 확산되었고, 상층부에서 아무리 비사회주의 요소를 근절하라고 지시를 내려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다.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도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원시시장경제와 가내수공업의 성행과 같은 생산양식의 변화, 분절경제와 연고경제와 같은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의 변화, 새로운 사회질서의 생성은 모두 불가역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 5. 소결: 체제 적응력의 상승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유지되는 원인으로서 흔히들 물

---

<sup>109</sup> - 강해인(함북도에서 20년간 철학교원, 2004년 6월 탈북) 증언.



리적 강제력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생활에 곤란을 느낄 때에는 이판사판의 저항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 생존을 위하여 마련한 자구책이 있기 때문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옛날처럼 굶어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강제적 자력갱생”으로서 북한주민을 먹고 살게 하는 요인이다. 억압기구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는 점에서 자력갱생의 방침과 주민들이 일구어낸 자력갱생의 토대는 죽음을 무릅쓴 저항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난 혹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원형은 해체되고 붕괴되었지만 각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생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개척해 낸 원시 소상품경제, 원시시장경제, 연고경제의 요소들이 주민들과 각 기관들의 생존을 연명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식 경제의 가동을 전제로 하고 배급을 기다리던 북한 주민들이 대량 아사하였지만, 배급을 포기하고 자생적 돌파구를 마련한 주민들은 새로운 원시시장경제체제에서 새로운 생존의 터전을 구축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허물어졌지만 우리 민족의 부지런함과 시장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생존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는 무너졌지만 개인의 생존력은 강화된 것이다. 전화위복의 기이한 현상이다.

정치와 상관없이 독자적 폐쇄적 생존체제는 정치권력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을 바라지 않는다. 강냉이라도 배물리 먹고 콩으로 콩나물 만들고 두부도 만들어서 먹는 등 끼리끼리 생존하는 조건하에서 그만그만하게 살아간다. 생활에

I
II
III
IV
V
VI
VII
VIII

대한 다른 욕구가 없다. 위에서 간섭만 없으면 다행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그 대신 고달프고, 불안하다. 왜냐하면 잘되는 곳은 다행이지만 잘 안 되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sup>110</sup>

요약컨대 앞장에서 본대로 북한체제는 내구력(resiliency)은 대폭 쇠퇴하였지만 적응력(adaptability)은 새롭게 생성하면서 대량 아사 사태도 완화되고 있다. 적응력의 상승은 체제내구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응력의 상승이 급변사태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체제내구력은 증가하는 것이다.

---

<sup>110</sup>- 김일도 증언.

# V

## 2·13합의 이후 체제 적응력의 추가 상승 가능성





## 1. 국제적 환경의 개선

북한의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조건의 하나인 대외환경이 북한 유사 이래 최적의 조건으로 개선되고 있다. 2007년 2·13 핵합의 이후 북미관계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하여 부시 미국 대통령은 “나는 이미 선택을 하였다”고 언명하고, 남은 것은 김정일의 결심에 달렸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오랫동안 북한에 대하여 적대정책을 추진해오던 미국이 이제 북한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큰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비야흐로 오랫동안의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북한이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면 일본과의 수교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과의 수교가 실현되면 식민지배 배상금으로 10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교차승인이 완료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국제질서도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북한의 고위 관리의 표현에 의하면, 북한에게 핵은 민족의 정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줄 수 없으나,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정조를 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해소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핵폐기 과정을 진전하는 만큼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면 북한

I
II
III
IV
V
VI
VII
VIII

이 원하는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등을 실행하고, 북한이 보유했던 핵물질을 완전히 폐기하면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호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외교관계 개선, 외자도입, 교역 등의 호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를 실현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국제적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북한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의 하나인 전력난도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여국의 도움을 받아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우호가격으로 지원받던 석유수입이 소련의 붕괴이후 끊어짐으로써 경제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듯 추락한 바 있다. 북한이 핵협상 과정에서 경수로 제공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시급한 에너지난 해결과 직결된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 북한 외무성은 경수로 제공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라며 “신뢰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경수로 제공이라는 ‘물질적 담보’를 통해 확실한 신뢰를 보여 줘야 북한도 안심하고 핵 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수로 제공 없이는 핵폐기가 없다는 벼랑 끝 전술을 시사하고 있다.

2007년 3월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한결같이 경수로 제공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상은 실무그룹 회담에 앞서 찰스 카트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전 사무총장과 잇따라 만나 경수로 문제를 논의했으며, 카트먼 전 총장은 “그들이 경수로 얘기만 해왔다. 그건 아주 일관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엘 위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자문역

은 2007년 3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경수로 제공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약속 없이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정도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sup>111</sup>

이에 대한 호응으로 미국의 힐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고 NPT에 복귀하면 2005년 9·19 베이징 합의대로 경수로 지원 논의를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경수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인터뷰에서 처음 시사했다. “북한의 에너지 (심각한) 필요를 우리는 유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수로를 핵무기 비즈니스에 써 버려 오늘의 상황을 자초하였다. 정말 경수로를 원한다면 더러운(dirty) 핵무기 비즈니스로부터 확실히 벗어나야 민수용 핵에너지 지원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하였다.<sup>112</sup> 이러한 미국의 태도와 6자회담 진전의 추세를 볼 때 북한이 확실히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는 물론 경수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은 핵카드 하나로 미국 및 일본의 대북적대정책을 포기시키고 나아가서 에너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경수로까지 얻을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 2. 새로운 생존전략의 효과: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재편입

핵문제 이후 예견할 수 있는 북한의 정책변화로는 나진·선봉 특구를 재추진하는 특구중심의 개혁·개방의 시도, 외국기업 유치에 위한 사회 통제의 완화 조치, 선군정치를 약화하고 강성대국을 강조하는 통치이데올로기 변경 등이다. 단기적 경제회생이 수반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점

<sup>111</sup>- 『연합뉴스』, 2007년 3월 12일자.

<sup>112</sup>- 『중앙일보』, 2007년 3월 3일자.

I
II
III
IV
V
VI
VII
VIII

차 자신감을 회복하여, 완만하지만 개혁개방의 속도를 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통하여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한 이후 미국을 끌어들이어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협력함으로써 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아지고 내정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핵 실험이후 중국이 북한 지도부 교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소문과 관련해 미국을 끌어들이어 이를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동시에 한국에 흡수 통일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미국을 끌어들이어 남북관계를 견제하고, 중국과 한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sup>113</sup>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은 한·미간의 틈을 벌리려는 썩기역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남한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완충지대(bumper zone)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sup>114</sup> 핵문제를 이용한 북한의 생존전략은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 경제지원을 넘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구사하겠다는 전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은 핵문제 해결이후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편입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재편입하는 길을 선택하였듯이 북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권 붕괴 직후부터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생존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관계개선을 추진하다가 핵문제로 말미암아 좌절당한 경

---

<sup>113</sup>- 윤덕민, 『조선일보』 칼럼, 2007년 3월 19일자.

<sup>114</sup>- 로버트 갈루치,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2007년 3월 30일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성일 전 북한외교관은 “김정일 위원장은 1991년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에게 대미외교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푸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안보위협과 경제위기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묘약이다. 북한은 소멸된 사회주의 진영을 대체할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자본주의권에 재편입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당면한 정책 과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협력 관계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은 이미 너무 늦었다. 남한이 1953년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1965년 일본과의 수교 이후 한·미·일 3각 경제협력 구도를 기반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를 하지 못하고 고립·봉쇄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sup>115</sup>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재편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에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붕괴하거나 자본주의로 이행한 조건 속에서 북한만이 사회주의적 자력갱생 경제체제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 혼자만이 사회주의 국가의 섬으로 남아 있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제Ⅲ장에서 자세히 분석했듯이 경제난이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지 않을 수 없었듯이 북한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

<sup>115</sup> - 서재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I
II
III
IV
V
VI
VII
VIII

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재편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 지난 10여 년 간의 북한의 행보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재편입을 위한 정책들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다. 외적요인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고 내적 요인이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소련과 중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여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한 것에 반하여 북한의 경우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 북한은 아직 중국이나 소련처럼 사회주의체제를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는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국교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국교관계를 수립하여 교역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협력을 통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 체제 정비를 부분적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령, 북한은 7·1조치를 통하여 임금제도의 정비를 실시하였다. 자본주의 기업을 북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의 작동원리인 임금노동제도(wage labor system)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임금노동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자본주의기업에 종사하는 북한의 근로자들이 자본주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노동의 태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은 정액 배급제도로는 자본주의 기업을 북한에 유치하기가 어렵다. 시장제도의 일부 요소도 도입되었다. 북한은 2003년 6월 이후 암시장을 양성화하고 공산품까지 판매를 허용하여 '종합시장' 제도를 도입하였다. 임금노동제가 작동하는 한 시장제도의 도입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3. 남북경협의 진전에서 얻는 이득

북한의 체제내구력 증진에 미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남북관계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은 45개 과제를 합의하였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개최된 총리회담에서 남북회담 시작이후 가장 방대한 내용의 남북경협을 합의하였다.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이 실행될 경우 북한이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북한의 경제규모와 교역규모에 비해 볼 때 대단히 큰 규모이다.

우선 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완료와 2단계 개발 착수를 합의하였다. 1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2만 6천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된다. 2단계 개발(2006-2009)이 완료되면 3만 5천-7만 명의 북측 근로자가 고용될 계획이다. 3단계 개발(2008-2012)이 완료되면 9만-14만 9천명의 북측 근로자가 고용될 계획이다. 북한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1인당 근로소득을 55달러를 잡아도 매우 큰 규모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에서는 한강하구 공동개발, 공동어로 수역, 해주특구 등을 합의하였다. 한강하구 공동개발의 경우 북측은 3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고, 남측은 향후 20년간 수도권 개발에 소요되는 골재를 확보할 수 있다.<sup>116</sup>

조선협력기지 사업은 남포와 안변에 대우조선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북측 근로자가 받게 될 임금을 포함하여 기술 및 외화 획득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에

<sup>116</sup> - 임수호·동용성,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방향,” 『CEO Information』, 제628호 (삼성경제연구소, 2007), p. 9.

I
II
III
IV
V
VI
VII
VIII

도 합의하였는데, 북한은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모두 남측에서 지원 받게 되어 많은 재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철도 및 도로의 현대화로 산업의 인프라 확충에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백두산 관광사업도 합의되었는데 금강산 관광 사업에 이어 백두산 관광 사업은 북한 당국에게 외화 획득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 확대에도 합의하였는데, 2006년 현재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 규모는 약 2,30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자체채굴에 한계가 있으나 남한의 협력이 있을 경우 수익성이 크다. 한국은 연간 20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up>117</sup>

이처럼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보다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중국에 의존이 심화되었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당국간 회담에 호응하기만 하면 인도적 목적의 쌀을 지원을 하겠다는 우리 측의 제의에 따라 북경에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였으나 북한이 회담을 결렬시킨 적이 있다. 큰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북한은 최근 2007 정상회담 및 총리급 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노선갈등을 재정비하기 위한 논리도 개발하고 있다. 가령, 2007 정상선언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취지를 합의문에 넣었는데 과거에는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를 한미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

<sup>117</sup>- 임수호·동용성,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의 방향,” p. 12.



우려하는 보수 세력을 설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근 중국 상품과 자본이 북한에 유입되는 점을 이용하여 북한 경제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이것도 남북경협을 촉진하기 위한 실용파의 논리로 볼 수 있고, 또한 통전부에서는 남북 간의 긴밀한 남북경협이 통일전선전술의 효과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제 북한은 남북관계를 경제회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핵문제 해결 이후 새로운 사회통합 전략 전망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했을 경우 가장 큰 의문은 내부 체제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수교를 실현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확대함으로써 외부의 적이 소멸되면 내부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게 된다.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통제의 기법은 다양하다.

##### 가. 선군정치에서 강성대국으로

현재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동원하고 있는 통치이데올로기는 선군정치이다. 선군정치는 군부를 포용하여 군부 쿠데타를 예방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사회질서유지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또한 2002년 10월의 제2차 핵문제 상황에서 반미주의의 상징으로 부상되어 체제유지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과 핵문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군정치는 곧 핵무기 정치 또는 핵게임의 논리로 이해되었다. 핵문

I
II
III
IV
V
VI
VII
VIII

제가 해결되면 다소 의미가 퇴색되겠지만 여전히 선군정치는 대내정치의 상징으로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면 강성대국이 선군정치보다 더욱 효과적인 통치이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1998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제시한 통치이념이 강성대국이였다. 강성대국이라는 구호 아래 IT산업 발전의 강조, 신의주 특구 발표, 7·1조치, 종합시장 설치 등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전향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제2차 핵문제가 돌출함에 따라 미국과의 대결이 불가피해 지자 선군정치가 급부상하고 강성대국이 후퇴한 것을 감안한다면 핵문제 해결 이후 통치이념의 우선순위는 선군정치에서 다시 강성대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경제회생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주민들을 경제성장애 동원하면서 체제통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박한식 교수는 북한의 핵 포기는 선군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sup>118</sup> 이것은 통치수단으로서의 통치이념의 기능을 통치목적과 혼돈한 분석결과이다. 선군정치는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선군정치라는 통치이념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통치이념으로 변화될 수 있다.<sup>119</sup>

또한 북한의 선군정치는 곧 핵무기 보유와 동일시하는 분석이 있는데 이는 핵문제를 반미주의 논리에 활용하는 북한의 의도를 잘못 분석한 것이다. 핵보유를 고수하는 것이 선군정치인 것이 아니라 반미주의가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동원되고 있다.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으로 신

---

<sup>118</sup> - 『중앙일보』, 2007년 3월 24일.

<sup>119</sup> - 자세한 논의는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서울: 박영사, 2006).

화를 만들어서 통치이데올로기로 사용하였듯이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반미주의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로 발전시키고 있다. 핵 문제로 미국과 기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선군정치를 통치이데올로기로 동원하고 있으며, 선군정치는 어느덧 반미주의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수교를 원하는 북한이 선군정치를 후퇴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도 선군정치와 핵보유 외에도 더 효과적인 체제유지의 수단이 있다. 북한은 향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체제안보 보장, 경제회생을 위한 생산요소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오히려 경제발전 논리로 주민통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바로 강성대국의 판타지 논리이다.

## 나. 내부의 경쟁집단의 창출과 갈등 조장

1980년대 말에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합되고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일거에 무너지고 소련체제가 붕괴되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을 때 북한이 취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는 사상통제였다.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사회주의사상의 순결성이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사상단속에 주력하였다. 북한에서 사상성 강조와 내부통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체제위기일수록 중점이 더 두어졌다.

북·미 수교이후 반미주의가 퇴조할 경우 체제통합을 위하여 사용할 사회통제 장치의 하나로서 내부의 적을 창출하여 집단 간 경쟁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파시스트체제에서 흔히 행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이미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복잡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체제에 대한 충성경쟁을 유발하고 이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동요계층 또는 복잡계층으로 딱지를 붙여서 독재를 가하는 수법을 사용

I
II
III
IV
V
VI
VII
VIII

한지 오래이다. 파시스트 통치 방식이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  
갈등하도록 하는 것이며, 체제추종자와 체제반대자를 구분하여 서로 경  
쟁 갈등하게 할 것이다. 감시와 통제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 5. 소결: 체제 적응력 추가 상승

북핵문제 해결이후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수교를 실현하고 외자가  
들어올 경우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급속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단  
기적으로 체제위기를 넘기는 셈이다.

핵문제 이후,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 북한의 생존환경은 크게  
유리하게 전변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재  
편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수교는 정치·군사적으로 체제  
의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 차관, 투자유치를  
포함한 경제지원을 받는 확실한 생존과 번영의 수단이다. 미국의 군사  
적 공격의 위협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국  
교정상화 이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위협도 감소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어 국제금융기구 차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2000년 4월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  
공여 가능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IMF, IBRD, ADB, 국제개발협  
회(IDA)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 공여 가능 규모는 25-45억 달러  
로 추정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북한의 국가 특성을 소득수준 기준 빈  
곤국가, 경제체제 기준 잠재적 체제전환 국가, 소속지역 기준 아시아태  
평양국가로 요약하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국가들에 대한 국제금융  
기구의 금융지원 실적을 토대로 이러한 수치를 산출했다. 한국은행 보



고서는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의 잠재적 체제전환국가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 가능한 차관 공여 규모는 27억 달러, 소속지역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35억 달러, 빈곤국가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4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27-45억 달러로는 북한이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능한 조기에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sup>120</sup>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면 외국인 투자 유치도 훨씬 용이해진다. 국가신인도의 제고 때문이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sup>120</sup> 『연합뉴스』, 2000년 4월 12일.



# VI

## 금변사태 변수와 체제 내구력





이 장에서는 체제내구력 구성요소의 세 번째 요소인 급변사태 가능성(체제 파괴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체제내구력은 종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인지, 최근의 핵문제 및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 등 새로운 상황변화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다.

## 1. 급변사태의 개념

체제복원력과 체제적응력 못지않게 체제내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급변사태 발생여부이다. 우리에게 급변사태란 북한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작스런 사건 자체를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되어 있는 셈이다. 급변사태의 개념을 몇 가지 수준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과론적 측면에서 급변사태란(북한에서) 갑작스럽게 정권, 제도, 국가차원의 변화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제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체제’라는 말은 김정일의 정권, 사회주의의 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서의 국가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김정일 정권, 사회주의 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변화가 발생하여 김정일 정권이 교체되거나, 사회주의제도가 급변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멸 또는 붕괴하는 경우이다.

북한체제의 사회주의라는 제도, 김정일의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라는 세 가지 수준의 분석 대상 중 사회주의 제도는 이미 심각하게 침식되었다. 북한의 기존 사회주의 제도인 대안의 사업체제, 중앙계획경제체제, 연합기업소체제, 공식유통망에 의한 배급제 등은 상당부분 붕괴되었다. 경제난 이후 암시장이 번성하면서 북한의 생필품의 생산과 교환은 이미 시장경제가 지배적인 형태로 전환되었다. 생필품의

I
II
III
IV
V
VI
VII
VIII

상당부분이 민간부문의 형태로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국내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생산된 것이다. 공장기업소도 중앙계획에 의한 생산보다는 개별 기업의 자구책의 방식으로 생산 유통되는 형태가 지배적이다. 가내 수공업이든 공장기업소이든 모두 암시장 또는 종합시장이라는 판로를 겨냥하여 생산하고 유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에서 간부들과 주민들 중에서 북한이 아직도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산수단의 소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은 사회주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국가가 계획경제를 실시해야 사회주의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계획경제는 이미 붕괴되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미 사회주의 제도의 원형이 상당히 와해되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불로 모든 나무들이 다 타고 검은 숲만 남은 산에 전에 없던 새 나무와 새 풀이 돋아나서 생태계가 바뀌는 것처럼 사회주의가 붕괴한 북한에 새로운 원시시장자본주의 체제가 생성되고 있다.

탈냉전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제도)는 거의 다 자본주의 체제(제도)로 변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권도 모두 교체되었으나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등의 국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가붕괴가 일어난 나라는 독일과 소련뿐이다. 나머지 나라는 국가는 유지되고 있으며, 정권과 제도가 교체된 셈이다.

또한 원인론적 측면에서 급변사태는 민중봉기, 군부 쿠데타, 저격/실각 등의 요인에 의하여 정권 교체, 제도 변화, 국가 붕괴 등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북한의 ‘체제’붕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경우는 북한의 정권, 제도, 국가 중의 어느 하나에 급변사태가 생기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서 제3의 정권으로 교

체되는 경우,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제도로 전변되는 경우, 북한의 국가가 무너져서 남북한 통일이 되는 경우 등을 체제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라는 제도는 이미 상당부분이 와해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있으며 암시장, 시장 등이 확산되고 있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는 이미 점진적인 와해의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서의 북한의 국가는 건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급변사태’라고 할 때 김정일의 정권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를 급변사태의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붕괴되는 것은 남북한이 통합되어 통일될때 뿐이다. 결국 우리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할 때는 김정일 정권의 변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이 제3의 정권으로 교체된다면 권력의 정통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개혁을 표방하고 기존의 변화된 경제체제를 양성화하여 ‘시장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선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북한에서 체제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급변사태 발생 요건 검토

위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란 김정일 정권의 붕괴/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정일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경우는 민중봉기, 군부쿠데타, 저격 등의 사건에 의해서 김정일이 실각하고 다른 인물이 최고지도자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나 저격 등은 발생하기 어렵거나 우연적

I
II
III
IV
V
VI
VII
VIII

사건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발생가능성이나 요건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기로 한다.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요건에 한정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북한에서 민중봉기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여기서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가설로서 판단되는 카플란의 북한 변화 7단계와 북한의 급변사태의 요인으로 거론되는 주민들의 불만, 계급갈등 등의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 가. 카플란의 북한 붕괴 7단계론

카플란은 북한체제의 점진적 와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7단계에 걸친 북한체제의 변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1단계: 자원이 고갈된다.

△제2단계: 자원고갈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제3단계: 중앙정부의 통제실패가 널리 확산되고, 지방 당 관료와 군벌이 통제하는 독자적인 영지가 나타난다.

△제4단계: 지방 당 관료와 군벌의 세력이 커졌다고 판단한 김정일이 이들을 누르려 한다.

△제5단계: 지방 당 관료와 군벌의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 일어난다.

△제6단계: 북한 체제가 분열상을 보인다.

△제7단계: 새로운 국가적 지도력(national leadership)이 나타난다.

카플란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제4단계에 이르렀다고 추정한다. 그렇지만 중국과 한국의 재정지원과 미국의 식량지원으로 그 위기를 넘겼

으며 지금 북한은 제3단계로 되돌아갔다고 본다.

이러한 카플란의 분석에 대하여 의아해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제2단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3단계 명제도 실제로는 사실에 가깝다. 북한에서는 이미 중앙정부의 중앙계획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각 지방과 각 국가기관의 단위들이 자력갱생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가령, 각 지방은 송이버섯을 재배하여 해외에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동해에서 생선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등 중앙과 상관없이 각 지역에서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운용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방의 관료들도 이러한 체제에 적응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방의 당 관료와 군벌이 통제하는 독자적인 영지가 나타난다는 카플란의 주장은 북한의 사실에 근접한다. 군벌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군대들이 각 지역에서 생산단위로 변모하여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부가 선군정치로 힘을 얻었다기보다는 중앙정부가 군수물자를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력갱생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제3단계 이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다. 북한 당국의 방침이 경제난의 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한 배급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력갱생의 방침을 정하고 시장요소의 확산과 자급자족의 가내수공업 등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 독립이나 중앙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Kaplan의 7단계 붕괴론은 제4단계에서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5단계로 발전하는 상황이 일어

I
II
III
IV
V
VI
VII
VIII

나기는 매우 어렵다. 2·13합의 이후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 남북경협  
의 진전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중앙정부의 통치능력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카플란의 가설에 의한 급변사태  
가 북한에서 일어나기는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사회적 불만과 사회적 저항의 가능성

앞의 제Ⅲ장에서 살펴본 주민들의 의식변화, 계급갈등, 지도자 및 지  
도체제에 대한 반감 등은 현재로서는 아직 급변사태로 발전되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많다.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와 보위부, 안  
전부의 물리적 통제력이 일상적으로는 뇌물 때문에 기능이 부실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경우 이에 저항하거나 주민들과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통제기구들이 경제적 일탈과 비사회주  
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정치적 저항의 조짐에 대해  
서는 여전히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또한 2·13합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미관계의 개선과 남북정상회담  
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억제할 요인이다. 김정일에 대하여 깊은 불신감  
을 가지고 있던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을 포기하고 일본도 북한과 수교를 한다면 또 뭔가 큰 변화가 올 것인지  
기대심리가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김정일에 저항하여  
민중봉기를 일으킨다는 것은 자신과 일가족의 목숨을 건 대단한 모험이  
기 때문에 무모하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새로운 상황이 있으면 망설이고  
재고하는 쪽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 국제관계에서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북한의 급변사태의 발생을 저해하거나 시간을 끄는데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겁을 먹고 무  
조건 항복한다는 식의 주민 정치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새로운 사태변화를 지켜보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에서 아직도 물리적 통제기구의 기능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통제기구는 주민들의 경제적 일탈에 대해서는 서로 공모하기도 하지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군부 내 보위사령부가 중대까지 보위지도원을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군부쿠데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북한이 국내 공안 통치에 있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국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부터의 저항이나 군부쿠데타 등에 의하여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노동자계급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충실한 군대에 의존하는 정치이다. 동구와 소련에서 민중봉기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것을 목격한 북한당국이 내린 조치가 선군정치이다.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였다는 사실을 북한의 지도자가 알고 있으며 그래서 체제를 사회주의에서 선군정치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지도부는 체제저항의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통제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폭압기구 때문이라는 일반적 관측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다.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감소

위에서 논의할 대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는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북한 체제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것이 급변사태로 점화되는데 몇 가지 억제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물리적 통제

I
II
III
IV
V
VI
VII
VIII

력이라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둘째 요소로서 시장요소의 확산을 지적할 수 있다. 주민들의 가구별 자력갱생 체제가 구축되면서 겨우 연명하는 형태의 현상유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새로운 억제요인으로서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기대심리이다. 핵문제 해결,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정상회담 등의 일련의 국제관계에서의 변화가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대심리를 낳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조금더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 3. 개혁·개방 과정의 급변사태 가능성

단기적으로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으며, 핵문제 해결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이후 북한체제는 연착륙의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토크빌의 패러독스(개혁개방의 역설)의 가능성도 있다. 역사적 변증법(변증법적 역사)에 의하면 토크빌의 패러독스는 불가피하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개혁의 시도에 의하여 혁명이 촉발된 사례가 많다.

토크빌에 의하면 혁명이 발발하는 것은 반드시 상황이 악화되어갈 때가 아니다. 문제가 있는 정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행실을 고치 고자 시도할 때이다. 전제정권을 개혁하고자 할 경우의 기본적인 위험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것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대중들이 갑자기 구정권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는 것과 정권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생활수준의 개선, 억압의 감소, 자유의 신장 등이 실현되면 실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백성들의 기대를 부풀리게 하면서 급진적인 요구를 불러일으킨다. 약간만 변화를 시작해도 급속한 체제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프랑스 사회학자 토크빌은 ‘토크빌의 역설’이라는 말로 표현했다.<sup>121</sup> 위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면 밑에서 억제된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적 상황에서 개혁을 시도했다가는 자칫 체제 자체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민중봉기가 일어나 지도부가 감당할 수 없는 혁명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이 진전되면 이전까지 북한체제가 가지고 있는 억압적·비민주적·비인간적 통치체제에 대하여 북한 주민들이 점차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 법칙으로 볼 때도 보편적이다.

중국에서 수천 명이 아사하던 대약진 운동의 시기에는 민중봉기가 없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10년만인 1989년에 천안문사태가 발생하였다. 집단행동의 요건이 달라진 것이다. 정보 소통의 장비들이 확산되고 정보유통이 활발해지며,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미래를 고민하고 투쟁하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개혁·개방의 후유증이 없을 수 없다. 폐쇄적이고 왜곡된 이데올로기로 체제를 유지하던 북한에게 개혁·개방의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 어떤 요인에 의하여 체제변화가 올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 개혁·개방의 영향

무엇보다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인민들이 자각하여 사회통제를 못하게 된다. 개혁개방을 하면 사상전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조직사업+사상투쟁 조직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하는데, 개혁개방을 하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므로 통제를 할 수 없다. 중국에서 경제활동 중에는 당이

<sup>121</sup>- Minxin Pei, *From Reform to Revolution: The Demise of Communism 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4), p. 45.

I
II
III
IV
V
VI
VII
VIII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당생활, 당조직 생활을 못한다. 개혁개방 자체가 당조직 사상전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까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를 유지해온 핵심적인 요인은 경제난의 책임을 최고지도자나 국가의 책임이 아닌 제3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수법이였다. 북한은 경제난이 최고지도자나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봉쇄라는 외부적 요인,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하위간부들의 부정부패와 허위보고 등에 기인한다고 선전하였다. 이중에서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를 북한 경제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전하였다.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미관계가 개선될 경우 이러한 책임전가의 논리구조가 허물어지게 된다. 반미주의가 더 이상 북한의 경제난의 원인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개혁은 국가가 자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본 Edmund Burke가 지적한 대로,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자기유지의 수단이 없는 국가이다. Burke가 제시한대로 개혁은 제도 개선이나 체제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잠재적인 혁명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자발적으로 주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혁·개방에 휘말릴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북한과의 국교 수교를 포함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선택의 폭은 점차 좁아질 것이다. 북한은 힘이 약한 제3세계이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도 북한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민대중의 지배계급에 대한 적대감은 매우 중요한 사태의 진전이다. 위기적 징후들을 체제변화의 긴박성에 대한 경중으로 인식하고 체제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개혁·개방을 하다가 오히려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토크빌의 역설은 북한이 감수해야 할 모험이다. 김정일은 통제된 개혁·개방이 가져올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주력하면서 느린 속도나마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요약컨대, 역사적 변증법(변증법적 역사)에 의하면 토크빌의 paradox는 불가피하다. 개혁개방의 시도 이후 보혁 갈등, 양극화, 정보유입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결국은 김정일의 퇴진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 왜곡된 역사에 대한 반발

무엇보다도 사회통제가 완화되고 외부정보 유입이 확대되면 정치적 불안이 시작될 수 있다. 그동안의 김일성과 북한의 역사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무너지고 북한주민들은 허위와 기만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분노하게 될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의 왜곡은 다음과 같다. 우선 6·25 전쟁의 도발책임자 문제이다. 북한 주민의 거의 대부분이 6·25 전쟁은 미국이 남한에 주둔해 있다가 북침한 것으로 이해하며 더욱이 북한지역에 대한 용단폭격으로 수 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산업과 주택을 잿더미로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6·25 전쟁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주민은 미국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는 김일성을 믿고 반미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이 6·25 전쟁의 진실이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가히 폭발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왜곡된 역사도 큰 문제이다. 탈북자들이 백이면 백 명 모두 한결같이 북한체제를 등지고 남한에 왔지만 김일성만큼은 평생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숭배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일성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일성

I
II
III
IV
V
VI
VII
VIII

이 항일무장투쟁을 하여 일제에서 조선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김일성이 1940년 8월 만주를 떠나 10월에 소련으로 월경하였는데 당시 동북항일연군 총사령 양정우가 사망한 이후 직무대리를 하고 있던 주보중이 당시 제1로군의 상황보고를 받던 중 김일성이 제1로군 사령관 위증민의 결정을 어기고 위증민을 만주에 남겨두고 부대가 모두 탈출해왔음을 알았다. 주보중은 김일성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1941년 4월에 위증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김일성 소부대를 만주로 출발시키면서 제3로군의 책임자 김책과의 연명으로 위증민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편지(1941년 3월 12일자)를 김일성이 가지고 가게 하였다. 김일성의 무단이탈죄에 대한 처벌은 김일성의 직속상관인 위증민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리도록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공당의 지시 없이 김일성이 무단으로 소련으로 피신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설령 아무리 곤란해도, 설령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김일성과 윤준산 동지 부대의 월경은 잘못이다. 이 잘못은 원래 혁명적 입장 전체의 동요는 아니고 전체의 방향을 잃은 것도 아니다. 이 잘못은 제1로군 총부를 아예 이탈하여 유격대 지지투쟁의 가능한 조건을 방기하고 전부의 환경을 인식하지 않고 곤란을 극복 할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월경 방법을 취한데 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다. 김일성과 그 이하 간부 동지는 자각하여 잘못을 일정 하고 있다. 규율상으로는 반드시 김일성, 마덕산(김일), 리복록 동지에게 상당한 처벌을 내리야 한다. 우리는 당신에게 제의한다. 당신이 적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61券, 107쪽)<sup>122</sup>

북한 역사서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김일성이 소련으로

<sup>122</sup> - 와다 하루키, 『북조선(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p. 57.

피신한 다음에도 만주로 돌아와 소부대 활동을 계속하였다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승본은 “소부대 활동의 나날”이라는 장을 설정하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하여 큰 규모의 싸움은 물론 피했다. 그대신 대중정치 공작과 정찰활동에 많은 힘을 넣었습니다”라고 기술하면서 정찰활동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sup>123</sup> 소련 88 여단에서 정찰을 위하여 소부대를 보낸 적은 있지만 김일성이 만주에 소부대 활동을 나온 것은 1941년 4월부터 8월까지 단 한차례로서 88 여단장 후보중의 지시에 의거 만주에 혼자 남겨진 위증민을 찾아서 소련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지시를 받고 나온 것뿐이다.

김일성은 연해주 88 여단에 피신하고 있다가 조선이 해방한 이후인 1945년 9월말에 소련함대를 타고 원산항을 통하여 귀국하였다.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을 해방시킨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과 소련의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고, 소련과 미국의 한반도 점령에 따라 일본이 퇴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역사적 정설이다. 북한주민들이 믿고 있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역사는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다.<sup>124</sup>

셋째 김정일의 출생지가 백두산이라는 사실도 허위인데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백두산 정일봉이 무너질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는 문제이다. 『세기와 더불어』 제8권 “혁명의 뿌리를 가꾸며”라는 절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는데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새벽에 백두밀영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sup>125</sup> 그런데 백두밀영에서 김정일이 태어난 사실에 대한 묘사가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고 사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북한역사에서 그렇게

<sup>123</sup>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179~205.

<sup>124</sup> - 자세한 내용은 서재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참조.

<sup>125</sup> - 김일성, 위의 책, p. 298.

I
II
III
IV
V
VI
VII
VIII

중요한 사실이 매우 간단하게 사실성 없게 기술되어 있고 “혁명의 뿌리를 가꾸며”라는 김정일 출생에 관한 절이 엉뚱하게 김책의 이야기 등으로 페이지를 메우고 있다.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해왔던, 6·25 전쟁의 도발 책임자, 항일무장투쟁, 김정일의 출생지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경우 북한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토록 오랫동안 우려하였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 **보혁의 사회적 세력화와 갈등의 시작**

북한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수교를 실현하고 대외 환경의 개선에 부응하여 경제회생 우선의 정책이 추진되는 등 북한에서 연착륙의 추세가 진전되면 친김 세력의 복고적 안정속에서 새로운 개혁의 목소리가 성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동학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부터 5-10년쯤 뒤 북한사회는 자력갱생 정책에 의하여 단위별 지역별 자급자족 체제가 15-20여년이 지나면서 영세상공업자들이 형성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주된 경제체제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이전 체제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수구세력에 의한 소극적 개혁·개방 정책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하지만 과거의 정치체제와 기득권 엘리트들은 이전의 정치체제에 안주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기생하는 세도주의가 지속될 것이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적 갈등은 북한 주민들의 헤어날 수 없는 질곡이라는 인식이 더욱 팽배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계급갈등, 자유화와 민주화의 요구, 적극적 개혁개방의 염원 등의 피지배계급의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외부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부상하는 자유화의 목소리, 과거 왜곡된 역사에 대한 저항,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에 대한 과거청산의 목소리가 세를 얻게 되는 것이 역사전개 과정의 보편성이다.

결국 과거 김일성·김정일 체제에서 얻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보수 세력과 새로운 시장경제에서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려는 신진세력, 젊은 세대의 민주화와 자유화의 목소리가 대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2000년대에 형성되었던 이러한 사회변화의 추세가 정치적 동력으로 발전하고 민주봉기와 권력층의 친김 세력과 반김 세력간의 권력 갈등이 맞물리면서 북한 사회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직면할 것이다. 새로운 근대화 세력과 친김의 보수 세력간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 개혁·개방의 역설

역사적 변증법(변증법적 역사)에 의하면 토크빌의 패러독스는 불가피하다. 개혁·개방의 시도 이후 보혁 갈등, 양극화, 정보유입으로 사회 혼란이 결국은 김정일의 퇴진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의 퇴진은 곧 정권교체를 의미한다. 김정일의 아들에게로 승계되기 보다는 제3의 세력이나 집단지도체제로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딛고 일어서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역사의 변증법이다. 정권교체가 되면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조선인민공화국의 국가붕괴는 아니다. 정권교체 이후 북한은 연착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에 있어서 남한에 의존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방향의 남북관계가 발전될 것이다. 이것은 동서독 유형의 체제통일보다는 EU 유형의 연방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VII

체제 내구력 종합평가





앞 장에서 사회주의체제 복원력, 체제 적응력, 급변사태 가능성을 각각 평가하였다. 주요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1. 체제 내구력 종합평가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복원력(resilience)은 상당히 쇠퇴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주의체제로 복원되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하였다.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적·정치적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중앙 계획경제의 핵심 제도였던 대안의 사업체제와 연합기업소 체제도 붕괴하였고, 군수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계획을 대체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도 거의 훼손되었는데 김정일에 대한 반감, 사회 통제 조직, 억압적 정치체제, 간부들의 세도주의, 부정부패와 일상화된 뇌물수수 등의 현실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은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현재의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강력한 물리적 통제력이다. 특히 정치적 저항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부문에서의 이탈, 소위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하였다. 통제요원과 주민들 간의 광범위한 담합과 공모 때문이다. 즉, 경제부문에서의 물리적 통제력은 많이 약화되었다.

둘째, 체제 적응력(adaptability)이 상승되었다. 사회주의체제로의 복원력은 대폭 붕괴되었으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어 변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적인 체제가 생성된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되었지만 그 자리에 제2의 경제, 제2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시장요소, 자력갱생체제, 실리사회주의로 일컬어질 수 있는 개인의 비공식 부문에서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sup>126</sup>

<sup>126</sup>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참조.

I
II
III
IV
V
VI
VII
VIII

공짜는 없다는 인식하에 개인이 각자의 지구적 생존체제를 구축하였고, 가구별로, 공장기업소별로 종합시장에서의 판매를 겨냥한 영세적인 가내수공업이 발전하는 등의 새로운 경제체제가 생성하였다. 이것이 공식 계획경제가 붕괴한 틈사이로 왕성하게 생명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제2의 사회라고 일컬어졌던 일탈적 현상이 이제는 양성화될 뿐만 아니라 주류 경제부문으로 부상한 것이다.

공식부문에서도 당기관, 인민무력부, 각급 군부대 등 국가의 주요기관도 무역회사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각 지방에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는 민간인을 고용하거나 명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암시장 및 시장경제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 주민들은 국가에 기대를 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억압만 하지 않기를 바랄 정도의 비공식경제, 제2경제를 생성시킨 것이다. 이것이 북한체제가 공식부문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공식부문의 간부들이 기생하여 공식부문까지 먹여살리는 주류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제2경제가 제1경제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젊은 세대 마저 장사와 돈벌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대 재생산이 불확실한 문제점이 있다.

셋째,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감소되었다. 체제적응력의 생성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은 대량 아사사태를 극복하고 각자의 지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걷어들이고 자력갱생의 시장경제에 도피하고 있다. 결국,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13합의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고, 2007 남북정상회담도 북한주민들에게 새

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목숨을 건 체제저항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로써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체제복원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체제 적응력의 상승,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의 감소를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북한의 체제내구력은 현상유지가 가능한 쪽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현재까지의 체제 내구력 유지 요인

북한이 지금까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내구력을 유지하고 있는 요인으로 네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이 현재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역사적 경험의 특수성 때문이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동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이 반소·반사회주의 운동으로 민중봉기가 동구 사회주의 전체를 뒤흔드는 역사적 외중에 북한은 1950년에 한국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미국과의 피어린 전쟁을 치르고 미국의 대대적인 반격을 받아 전국토가 초토화되는 역사적 상처를 입었다. 이후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기둥으로 이용한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반소·반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북한은 반미·반제국주의 운동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체제로 체제전환을 하는 1990년대 초에 북한은 미국과의 핵문제 게임을 시작하였다.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첨예한 생존투쟁과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미국과의 핵문제 대결은 결국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

I
II
III
IV
V
VI
VII
VIII

에 명분을 주었고 선군정치는 김정일 통치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중의 하나가 되었다.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체제의 위기국면에서 내부적으로 체제결속을 다지는 호재로 활용된 것이다.

둘째, 북한의 체제유지의 배경의 하나는 책임전가의 통치술이다. 김일성 시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왜곡된 신화가 북한에서 정당성의 근거로 자리 잡았고, 동시에 절대성·무오류의 위대한 지도자상을 형성하는데 기능하였다. 그런데 김일성의 ‘지상낙원’ 건설의 판타지는 실패했음에도 그 원인을 외부로, 미국으로, 자연으로 돌리는 수법으로 책임을 피했다.

김정일 시대에도 김일성 시대의 통치술을 모방한 선군정치의 신화, 강성대국의 판타지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경제난의 책임을 미국의 경제봉쇄, 자연 재해, 하위간부의 탓으로 돌리는 통치술은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대다수가 북한 경제난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체제가 도전받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셋째, 정치적 저항에 대한 무자비한 물리적 탄압이 북한체제 유지의 제1의 이유이다. 북한에서 경제난이 심화되자 국가의 책임을 벗기 위하여 취해진 자력갱생의 정책에 따라 시장요소의 확산과 경제부문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은 관용이 되고 있지만, 정치적 저항과 도전은 철저히 억압되고 있다. 이것이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물리적 통제는 정보유통의 통제까지도 포함하고 강제적 정치교육도 포함하기 때문에 체제유지의 포괄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넷째, 북한이 정권초기부터 유사시를 대비하여 지역자립체제를 구축한 것도 경제난과 같은 극한적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하는데 일조한 측

면이 있다. 북한 정권은 초기부터 유사시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시·군(郡)의 지역단위에서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 산업구조, 예 산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시장요소에 의한 새로운 체제적응력이 생성된 것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아사를 면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시장의 확산에 의하여 주민들과 정부 모두 생존력과 적응력이 상승되고 있다. 가내수공업, 원시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생성되었고, 주민들의 자력갱생체제라는 새로운 경제관리체제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정부 기관 및 각급 군부대가 시행하고 있는 무역회사와 외화별이가 국가부문의 예산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개인차원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상업주의가 확실한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과거의 비공식 부문 또는 지하사회로 일컬어졌던 제2사회 부문이 제1사회 또는 공식부문을 대체하는 추세에 있다. 주민들의 가구별 자력갱생 체제가 구축되면서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나마 현상의 체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 3. 향후 전망: 연착륙 가능성과 토크빌 역설의 가능성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살아남은 것은 비공식 부문의 적응력 증가가 큰 역할을 하였으며, 국제환경의 개선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기를 모면하고 새로운 연착륙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기존의 시장화 추세에 편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연착륙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중국의 농촌에서 농민들이 불법적으로 주도하던 개인농을 양성화하여 등소평이 권력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개혁·개방을 경제의 전부분과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라든지, 베트남이 남부 농민들의 높은 생산성을 내는 자본주의적 영농을 양성화한 것이 도이모이의 계기가 되었듯이 북한도 기존의 시장화 추세를 양성화하고 편승한다면 연착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활로가 열리게 될 것이며, 북한식 개혁·개방의 시작이 될 것이다. 북한에서도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개혁·개방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김정일이 결단만 남은 셈이다.

북한의 체제내구력은 현 체제의 현상유지가 가능할 정도일 뿐만 아니라 연착륙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연착륙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종식과 김정일이 기존의 시장화 추세를 양성화하여 이에 편승하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핵문제가 해결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실현되면 북한은 연착륙이 가능하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다. 2007년 9월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선택을 하였다고 선언한 현 단계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핵포기 후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과의 수교도 얻어내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경수로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이미 2007년 10·3 핵합의에서 북한은 북핵시설의 불능화를 2007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다른 핵심 현안이었던 신고에 대해서도 2007년 말까지 2·13합의에 따라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의로 북핵문제는 이제 2008년 1월부터 2005년 9·19공동성명에 따라 북핵문제 마지막 단계인 기존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핵폐기 완료와 함께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실현되면 동시에 또는 조만간에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도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오랜 숙원인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실현되면 체제의 연착륙이 가능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이후 가장 가능한 변화 유형은 개혁·개방 하지 않더라도 핵문제 보상으로 받는 돈으로 체제의 현상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2·13합의 이후 체제위기에서 벗어나서 연착륙이 가능해질 수 있다, 2·13합의가 잘 이행되면 개혁개방 하지 않고도 현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경제지원 받고 미국이 선제공격 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하면 북한은 현 상태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둘째, 김정일이 시장화의 추세를 양성화 묵인함으로써 현재의 체제적 응력의 상승의 흐름을 탄다면 연착륙이 가능해지는 내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마치 등소평이 중국 농민들의 포산도호제의 추세에 편승하여 지지를 함으로써 농민들을 자기의 정치기반으로 활용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1976년 모택동의 사망을 계기로 중국 농민들은 중앙에서 권력엘리트들이 권력투쟁을 하는 사이 농민들은 포산도호제를 강행하였다. 정치지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을 때 농민들은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이를 기정사실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개혁파 지도자들조차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족농제를 반대하였다. 1980년 6월 조자양의 연설은 가족농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1982년까지 등소평도 농가책임제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당국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농민들이 가족농제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1986년 산시 지방을 조사한 학자들에 의하면 중국의 농민들은 가족농이 합법화된 줄도 모르고 가족농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농민들의 투쟁 끝에 드디어 1983년 1월

I
II
III
IV
V
VI
VII
VIII

포산도호제는 합법화되었다.

등소평이 가족농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서 높은 생산성을 올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된 가족농을 지지함으로써 자기의 개혁적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이용하였다. 즉, 등소평은 가족농제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합법화에 기여한 셈이다. 개혁파 지도자들은 가족농이 높은 생산성을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가족농을 자신들의 개혁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던 것이다.<sup>127</sup>

만약, 김정일이 그런 체제변화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과거의 사회주의체제를 복원하기를 시도한다면 북한체제는 긴장과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외부에서 식량과 돈이 들어가면 배급제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서 식량을 못 팔게 할 경우 북한주민들은 반발과 불만이 커질 것이다. 흔히들, 김정일은 죽으면 죽었지 과감한 개혁·개방을 할 가능성은 낫다는 평가도 있다. 보도에 의하면 김위원장은 2006년 1월 중국 남순지역을 방문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간부들에게 “우리는 중국처럼 개혁개방하면 안 된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마라”고 뜻을 박았다는 후문이다.<sup>128</sup> 국제금융기구의 돈이 들어오려면 IMF의 사찰을 받아야한다. 왜냐하면 투자할 환경이 되어야 World Bank 등의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개혁개방이 절대 불가하다는 평가가 있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경제회생을 못한다. 경제적 인프라를 개혁하지 못하면 북한 경제가 한해 두해 갈수록 갭이 커진다. 북한주민들과 테크노크라트 간부들은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고 인식하고 저항하게 될 것이다.

---

<sup>127</sup> - Kate Xiao Zhou, *How the Farmers Changed China* (Boulder: Westview Press, 1996), pp. 69~70.

<sup>128</sup> - 『연합뉴스』, 2007년 6월 29일.

2002년의 7·1조치 때에도 월급을 올려주고는 국영상점을 양성화하여 비공식 부문을 공식부문으로 끌어들이고자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의 참여 거부로 실패하게 되자 오히려 종합시장을 신설하여 장사를 양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바가 있다.

연착륙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복원력 감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역사적 요구(historical imperatives)인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체제 붕괴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복원력이 감소하는데 적응력까지 감소하면 체제붕괴가 불가피해진다. 이미 북한 당국의 경제부문에서의 통제력은 거의 상실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원시 시장경제체제의 흐름을 역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 개혁·개방과정에서 토크빌의 역설의 가능성

앞장에서 자세히 분석한 대로 단기적으로 급변사태 가능성이 감소되고, 핵문제가 해결되어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가 실현된다면 중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연착륙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개혁·개방의 역설적 급변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이러한 미래 전망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였던 요인들로서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반미주의와, 책임전가 통치술과 같은 요인들은 약화될 전망이다. 반미주의에 과도하게 의존하였던 체제유지의 전략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이후 무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안적 사회통제 전략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체제유지의 셋째, 넷째, 다섯째 요인, 즉 물리적 강제력과 자력갱생체제는 여전히 체제내구력 유지에 유효할 것이다. 특히 미국 및

I
II
III
IV
V
VI
VII
VIII

일본과의 수교가 실현되고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외자유치가 확대된다면 북한 당국의 재정능력이 향상되어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간부들의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기적인 차원에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가 실현되면 체제내 구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북한 당국이 시장요소 확산에 편승하여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체제의 연착륙 가능성도 있다. 북한 정권이 시장화 추세를 역행하는 조치를 시도하다가도 다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원시시장경제에 편승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시장요소의 확산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연착륙시 북한체제가 원래의 사회주의체제로 복원될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시장요소의 확대, 경제적 자율화의 확산으로 체제의 적응력은 상승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기를 모면하고 생존의 돌파구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장기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개혁·개방의 후유증, 즉 토크 빌의 패러독스(역설)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이후 북한 당국의 속도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산요소의 수혈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될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과도한 왜곡과 신화화,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 신화조작, 6·25전쟁이 도발 책임자 등의 역사적 허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 북한주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며, 이미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피의 진압을 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며 결국 정권교체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김정일의 고령화와 함께 다가올 정권교체이후 북한 체제는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김정일은 곧 전제주의적 북한체제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김정일의 사망이후 북한체제가 현재의 체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간부와 고위층까지도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변증법적 역사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몇 가지 요인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기존의 북한체제 (regime)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 글의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



# VIII

## 맺음말: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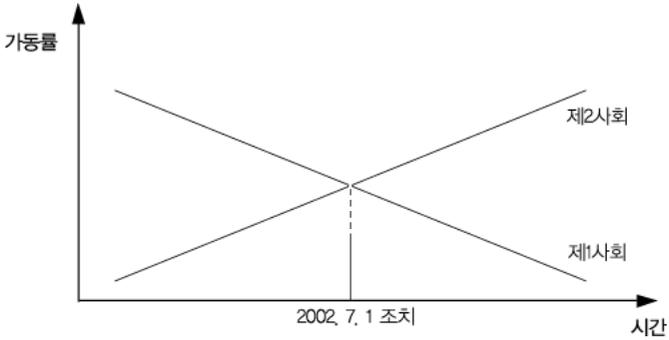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 체제는 현재 체제복원력의 붕괴 추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체제적응력의 생성 덕분에 체제내구력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내구력이 유지되는 이유는 물리적 통제도 한 중요한 원인이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사회주의체제가 허물어진 자리에 새로운 원시시장경제가 대체하여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이다. 마치 산불이 나서 쓸모없는 고목이 불타버린 자리에 이듬해 봄에 먼 산에서 날아온 생산성 좋은 과실 나무씨와 새 꽃씨와 새 풀씨가 무성하게 돌아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북한은 효율성 없는 사회주의체제가 허물어진 자리에 새로운 효율성 높은 체제의 새싹이 돌아나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화위복의 기이한 현상이다. 이것이 북한 체제가 경제난속에서도 체제내구력이 유지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북한에서도 제2사회, 또는 병렬사회(parallel society)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사회란 제1사회에 대한 공격은 무모하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1사회와 별도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안 사회이다. 그것이 비록 최소 생존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고난의 행군으로 대량 아사가 났던 시기보다는 다행이라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최소 생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나 억압이 없는 것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제2사회에서는 간부든 일반주민이든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을 알리바이 장치를 만들어 놓고는 각자 장사와 개인 실리주의에 탐닉한다. 북한주민들의 말로 각자 “제 볼 장”을 보는 것이다. 계획경제하에서처럼 당국이 일일이 작업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각자 자율적 업종에서 자율적 선택에 따라 가내수공업이나 장사와 같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구가 외부에서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북한주민들은 각자의 새로운

I
II
III
IV
V
VI
VII
VIII

생업의 터전에서 스스로 제 살 궁리를 한다. 북한사회에서 쇠퇴하는 제1사회와 새롭게 생성하는 제2사회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I-1] 제1사회와 제2사회의 관계



이런 점에서 북한은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체제가 붕괴되는 방식보다는 사회의 기층으로부터의 변화를 국가가 점진적으로 양성화해가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변화 추세에 편승한다면 체제내구력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체제의 연착륙도 가능해질 것이다. 핵문제 해결,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가 실현된다면 북한의 체제내구력은 더욱 상승할 수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기대하기 어렵고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것이 결국은 북한체제 변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체제의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급변사태 가능성이 낮아지고 체제 적응력이 높아지면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북한당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본주의적 요소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제변화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북한의 체제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에서 분단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연착륙이후 예상되는 문제로서 개혁·개방에 의하여 형성되는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에서 이득을 보는 새로운 경제적 기득집단이 출현하게 된다. 그럴 경우 동서독 같은 통일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동서독은 합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동독의 주민과 지도부가 체제를 포기함으로써 서독에 흡수통일 된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하여 경제가 회생되면 남북한 통일정책은 다른 방식의 통일방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13합의 이후 핵문제의 해결, 북미수교의 실현, 북한의 경제 회생, 북한의 체제 안정화,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면 남북한은 상호협력과 동시에 새로운 경쟁체제로 진입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누가 안정적인 자기의 입지와 권력을 포기하고 다른 체제로의 흡수 통일을 바라겠는가? 이러한 추세는 동서독 통일의 경우처럼 어느 한쪽의 체제포기를 전제로 하는 흡수통일 방안의 현실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의미한다. 남북한은 이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존공영을 추구함으로써 서로에게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를 연결하여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물류가 소통되는 경제협력의 관계는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흡수통일 방식의 통일은 점점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대신 유럽연합과 같은 방식의 남북연합의 체제를 상정해볼 수 있다. 유럽이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민족주의적 야심을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반성하게 되었고 그 대안의 하나로 유럽석탄철강공

I
II
III
IV
V
VI
VII
VIII

동체(ECSC) 형성을 시작으로 하여 1957년에는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창설하였고, 40여년이 지난 다음에 유럽연합(EU)을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북한을 붕괴의 대상으로 보고 대북정책을 추구할수록 북한은 더욱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봉쇄와 대결보다는 교류협력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북한의 식량난이 냉전종식 이후 소련 등 우방국으로부터 에너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처럼, 남한의 1997년 IMF 외환위기도 냉전종식 이후 이념논리에서 경제논리로 변화된 미국의 대외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북한과 남한이 공통적으로 냉전체제에서 탈냉전체로 전환되는 과정에 겪은 부적응이다. 이제는 21세기 탈냉전의 시대정신에 맞게, 이념을 넘어서 경제논리로 북한에 다가가야 한다. 20세기가 냉전과 이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탈냉전과 경제의 시대라는 것을 새삼 되새기며 21세기 시대정신에 맞게 탈냉전과 경제의 논리로 북한에 다가갈 때 북한이 훨씬 빨리 변화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가 통일로 연결되든 되지않든 간에 변화하지 않는 북한보다는 변화하는 북한이 우리의 국익에 이롭다.

## 참고문헌

### 1. 국문문헌

-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서재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주체사상의 이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서울: 박영사, 2006.
- \_\_\_\_\_.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현대북한의 연구와 남북관계』.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2004.
- 와다 하루키. 『북조선(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 에릭 홉스봄, 이용우 역. 『극단의 시대: 20세기의 역사』. 서울: 까치, 1994.
- 이장규. “북한경제체제의 분권화에 관한 분석.” 『통일경제』. 1996년 6월호, 1996.
- 임수호, 동용성.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의 방향.” 『CEO Information』. 제628호, 2007.
- 임수호. “대북경제 제재와 북한경제의 내구력.” 『2·13합의와 북한의 장래』. 통일경제연구협회 주최 통일경제정책워크숍, 2007.

## 2. 북한문헌

강영원.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 담보.” 『경제연구』. 1994년 제3호, 1994.

김일성. “농촌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세기와 더불어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_\_\_\_\_.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김일성 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_\_\_\_\_.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고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자.” 『김일성 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우루과이 3월26일운동 대표단과 한 담화.”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정일.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_\_\_\_\_.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로동신문』.

### 3. 영문문헌

- Kolakowski, Leszek.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Zhou, Kate Xiao. *How the Farmers Changed China*. Boulder: Westview Press, 1996.
- Kaplan, Rober D. “When North Korea Falls.” *Atlantic Monthly*. October 2006.
- Weigle, Marcia and Butterfield, Jim. “Civil Society in Reforming Communist Regimes: The Logic of Emergency.” *Comparative Politics*. October 1992.
- Pei, Minxin. *From Reform to Revolution: The Demise of*

*Communism 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4.

Ralf Miliband. *Class Power and State Power.* New York: Verso,  
1983.

Skilling, H. Gordon. *Samizdat and an Independent Socie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9.

The New York Times.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운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회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Ⅰ):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Ⅱ):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원			10,000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운,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례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민, 조정아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락트레토지(표지)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재생용지 이라이트지(본문)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 KINU 연구총서 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민도레포지(표지)**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재생용지 **이라이트지(본문)**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KINU 연구총서 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